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KASD)
2022 하계학술대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과제

2022년 8월 12일(금) 10:00 ~ 17:00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주최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후원



환경부



청운대학교
CHUNGWOON UNIVERSITY

UN ECOSOC NGO Consultative Body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UN ECOSOC NGO Consultative Body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보령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프로그램

구분 /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10:00	30분	등록 및 내빈 티타임	
개회식 10:00~10:20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례, 대회 소개, 참석자 소개 인사말 :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환영사 :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 축 사 : 지노 반 비긴 이클레이 사무총장 기념촬영 	사회 : 박노찬 (학회 총무위원장)
기조발표 10:20~10:40	20분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과 윤석열정부 · 민선 8기 지방정부의 과제	
장내정리 10:40~10:50	10분	단상 정리 및 세션 준비	
제1세션 10:50~12:20	90분	주제 :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동향과 과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과제 중심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발표1 : 이창연 (경주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발전 선도국가 및 이클레이 회원 도시 국내외 사례 발표2 : 박현욱 (청운대학교 교수) - 대학의 지속가능한 인재를 위한 혁신사례 (WURI Ranking을 중심으로: 학생 개방성과 교류성) 발표3 :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확산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토론1 :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 토론2 :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오찬 12:20~13:40	80분	학회 임원 · 회원 간담회 (오찬 및 티타임)	임원, 회원, 활동가 교류 시간

제2세션 13:40~15:20	100분	<p>주제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융합적 연구와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발표1 : 송만용 (동서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 • 발표2 :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관점의 도심부 높이 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무등산 조망 관리 사례 • 발표3 : 김금녕 (홍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유형분석 및 지속가능전략 • 토론1 : 오치규 (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2 :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p>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융합적 접근의 장으로서 자유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 (대학, 연구기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p>
휴식 15:20~15:30	10분	<p>단상 정리 및 세션 준비</p>	
제3세션 15:30~16:50	80분	<p>주제 : 지속가능발전 신진연구자 발표 및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발표1 : 윤요타이 (동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개발연구 • 발표2 : 김동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추적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고찰 • 발표3 : 황승현 (청년을지로연구소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 토 론 : 참석한 신진연구자 · 청년활동가 · 회원 전원 (자유토론) 	<p>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신진연구자 (대학원 석·박사과정 또는 5년 이내 학위취득자), 청년활동가 발표 및 자유토론과 교류의 장</p>
정리 · 폐회 16:50~17:0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2 · 3세션 종합정리 및 폐회 	

목 차

■ 인사말

-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1

■ 환영사

-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3
-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 5

■ 축사

- 지노 반 비긴 (이클레이 사무총장) 9

■ 기조발표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과 윤석열정부·민선 8기
지방정부의 과제 13
-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 제1세션 :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동향과 과제

[주제발표]

- 지속가능발전 선도국가 및 이클레이 회원도시 국내외 사례
과제 41
-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대학의 지속가능한 인재를 위한 혁신사례: WURI Ranking을 중심으로 (학생 개방성과 교류성)	73
- 박현옥 (청운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확산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93
-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	113
·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117

■ 제2세션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융합적 연구와 사례

[주제발표]

·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	123
- 송만용 (동서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성 관점의 도심부 높이 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 무등산 조망 관리 사례	147
-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 홍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유형분석 및 지속가능전략	167
- 김금녕 (홍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정토론]

· 오치규 (충남대학교 교수)	187
·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191
·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95

■ 제3세션 : 지속가능발전 신진연구자 발표 및 교류

[주제발표]

- 인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개발연구 ... 201
 - 풍요타이 (동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과정추적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고찰 213
 - 김동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도농복합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255
 - 황승현 (청년을지로연구소 이사)

■ 임원명단 267

■ 하계학술대회 준비위원회 270



인 사 말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김 병 완

존경하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원 여러분, 하계학술대회를 축하하고 성원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지노 반 비긴 이클레이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 좌장, 주제발표, 지정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하계학술대회 개최에 큰 힘을 보태주신 환경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운대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통해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박람회 기간에 그 무대인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령머드축제는 1998년 7월 처음 개최된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여름축제로 자리잡게 되고, 25회째인 올해는 해양머드박람회로 열리게 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시대에 혁신적인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학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이론과 모델을 만들고 공유하는 역할과 부합하여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새로운 전환점에서 더욱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올해 1월 4일 제정되고 시행령이 7월 5일 공포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시점에서 오늘 열리는 하계학술대회의 주제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발표와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조발표는 제가 우리 학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여러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정리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서」를 토대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과 윤석열정부 · 민선 8기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그 동안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제2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융합적 연구의 사례들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신진연구자들과 청년활동가들의 발표 및 자유토론과 교류의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주제발표와 토론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자연이 아름다운 보령의 학술대회 현장에 직접 오셔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매우 아쉽습니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김 영 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의 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가족들에게 최신의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김병완 학회장님을 비롯한 학회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학회는 우리 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등 국가 이행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학회의 전문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인류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함께하는 전문가들의 연구도 그 흐름에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여러 학문영역의 전문가들과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이 자리가 우리 사

회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학회장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여러 전문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청운대학교 총장 이 우 종

안녕하십니까?

청운대학교 총장 이우종입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 학술대회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중에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와 실천사례가 발표되는 현장에서 환영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김병완 회장님을 비롯한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와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는 2020년 11월 25일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불과 2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기여함은 물론 연 2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와 함께 정례화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소통과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기후환경 위기시대에 살고 있으며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과 연구들이 축적되어 학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그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학계 연구자 및 활동가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의 로고를 살펴보면 녹색으로 환경과 지구, 청색으로 사회와 인간, 노랑색으로 경제와 번영을 나타내는 3개의 타원으로 지구본으로 형상화하면서 한반도가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구환경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지구본으로 공존과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해야 함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선도하고 실천하자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은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 2015년 9월 채택되었습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지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컴팩트도 세계 곳곳의 기업이 SDGs를 기반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투자, 솔루션 개발,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연결되어 있는 글로벌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즉, ESD는 SDGs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SDGs의 나머지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기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지만, 지난 20세기 물질적 풍요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지구와 인간 모두 자정작용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으로 풍요로움을 향유한 인류의 본성을 회복함이 21세기 우리의 아젠다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간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의 연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청운대학교 가족 역시 홍익인간의 이념과 인의·예지·신애의 창학정신 아래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한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과 지역의 실천적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환경의 변혁 그리고 교수역량의 확산, 학문연구 등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된 지난 3년 동안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던 나날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해제 조치로 인해 비대면에서 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에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회복을 위한 활발한 연구 발표와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이클레이 사무총장 지노 반 비긴
이클레이(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2022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우선 과제로 하는 2,500개 이상의 지방 정부와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125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방정부들이 책임있게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자원순환 도시, 자연기반의 도시, 사람중심의 공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이클레이의 5대 도시 비전은 상호 연계되어 체계적인 도시의 변화를 추동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세계의 주요 활동은 ‘SDGs 이행’을 중심으로 조율되어 왔습니다. 한국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수립하고,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한국의 높은 인식과 노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 참여하고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느낄 수 있던 것은,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는 동지로서 정말 뜻 깊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번 지속가능발전 하계 학술대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어느 것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더 나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여러분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 열릴 모든 학술대회가 잘 진행되어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혁신적이고 의미있는 결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KASD)

2022 하계학술대회

기조발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과 윤석열정부·민선 8기지방정부의 과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과 윤석열정부 · 민선 8기 지방정부의 과제

김 병 완

광주대학교 교수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이 글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간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전문가, 기초지자체, 지역조직·시민사회, 대학캠퍼스, 청년조직, 국제개발 협력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국회 정책포럼(2회), 학술대회(3회), 권역별 토론회(5회), 정당 정책제안(2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맞춘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논의한 결과이자 국민의견 수렴보고서인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서」(2022.5)를 토대(발제문 2~6장)로 발제자의 생각을 추가로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참여기관·단체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SN KOREA, 사회혁신연구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 제안서 작성자 : 권기태, 김병완, 김정필, 박숙현, 박정진, 박 훈, 양준화, 오수길, 윤희철, 이창언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추진배경
3.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4.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
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6.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제안
7.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제
8. 맺는 말

1. 시작하는 말

- 기후위기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은 국제사회의 최상위 규범이자 실현해야 할 가치로 자리잡게 됨
- 2021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 공포되고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됨
- 중앙정부는 그 동안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서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에 따라 2022년 7월 5일부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관련 업무를 맡게 되어 많은 변화와 진전이 예상되고 있음
- 지방정부 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제정 및 기획실 중심의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많은 변화와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이 글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및 주요 역할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2. 국내 · 외 지속가능발전 추진배경

□ 5P 축을 중심으로 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유엔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매년 고위급회담(HLPF)을 통해 각국의 국제사회 합의에 대한 노력과 달성도를 평가해 오고 있음
- 한국의 2021 SDGs 지수평가 점수는 165개국 중 28위(78.6점)로 1위 핀란드(85.9), 17위 영국(80.0), 18위 일본(79.8), 26위 이탈리아(78.8)에 뒤질 뿐 아니라 2020년 20위에서 8단계나 하락하였음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첫발을 내딛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회의), 경제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회의)를 넘어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SDGs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생태계(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P의 가치를 중심으로 진전된 개념으로서, 국가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활용해야 함



출처 : 김병완 외 (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26쪽.

□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단으로서의 SDGs

- SDGs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합의한 실천 목표이며 COVID-19나 기후 및 경제위기 대처 및 회복, 보편적인 보건 및 안전 보장, 디지털 인프라 등에 이르는 국가 및 지역의 정책 방향을 국정과제와 효과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SDGs의 핵심가치인 5P의 논리와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COVID-19 이후 회복과 상승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정부	김영삼/김대중 (1993-03)	노무현 (2003-08)	이명박 (2008-13)	박근혜/문재인 (2013-22)	윤석열 (2022-)
국제 체계	환경개발위원회(1992)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2)			고위급정치회담(2015)
지속가능발전 가치	경제-환경 양립	경제-사회-환경 균형	환경-경제 활용	사회적 가치	5P축
국가	대통령자문위(2000)	전략/이행계획(2006)	녹색성장(2009)	기본계획(2016)	기본법(2022)

출처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사.

3.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대응의 모범국가로 위상 강화

- 유엔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높이 평가한 결과 이명박정부 시절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를 한국(인천)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과 제도 구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추진기반과 시스템의 도입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함
 -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의무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평가)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지정)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경제 성장)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대응)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31조(국제규범 대응) 제32조(국회 등 보고)

□ 지역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발전 이행 선도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확산 및 내재화 진행중
 - 광역자치단체(서울, 충남, 광주 등)는 기본조례 제정, 담당조직 강화 등 추진체계 정립, 기초자치단체는 일부 선도적인 지역(수원시, 당진시, 담양군, 도봉구 등)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92%의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수립·이행의 경험이 있음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전, 지방의제21협의회)들이 거버넌스 기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4.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공포(2022.7.4)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필요

- 중앙정부 차원의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을 마련하고¹⁾,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5년 단위)’을 바로 수립하여 2023년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을 마련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5년 단위)’을 바로 수립하여 2023년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64호)	
제1조(목적)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조정)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개발·보급)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제17조(자료의 공개) 제18조(수당 등) 제19조(운영세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제23조(숙의공론화장치의 개최·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1) 현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이 국가기본전략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선진국 위상에 안착하는 전환점

-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은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정표이며, 선진국의 국격에 맞는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짐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은 선진국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모범을 보여주는 계기가 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민·관협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국민참여의 계기가 마련됨

□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는 지방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참여하게 하고 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의 당연직 참여와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부여함
-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 토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개요

- 국정비전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6대 국정운영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국정과제 별도 선정 예정)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



국정목표 1. 정치행정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SDGs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6개)	3,8,16
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4개)	11,16
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5개)	16
국정목표 2. 경제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SDGs
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7개)	8,9
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개)	8,9
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개)	8,9
0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4개)	8,9
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4개)	8,9
국정목표 3. 사회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SDGs
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7개)	1,3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개)	8,10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7개)	3,4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7개)	2,3,16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4개)	2,3,11
국정목표 4. 미래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SDGs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개)	9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5개)	5
16.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미래를 만들겠습니다. (4개)	6,7,12 13,14,15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3개)	8,10
국정목표 5. 외교안보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SDGs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3개)	16,17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7개)	16,17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8개)	16,17

-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0」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국가발전전략의 대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11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SDGs의 17개 목표들 간 연계성(nexus) 전략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함
-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0」의 수립과 이행이 연동되도록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정부업무평가체계의 보완(SDGs 이행체계 및 지표평가 반영)이 필요함
-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및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긴밀히 결합시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음

□ 윤석열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구상

- 추진근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22.1.4. 제정) 시행령 (2022.7.5. 시행)
- 전략목표 : ❶ 지속가능발전 정책 내재화 ❷ 굿 거버넌스 구축
 ❸ 국제사회 협력 확대
- 실행주체 : 중앙정부(국무조정실 주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역량
- 실행기간 : 2030년까지(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기)
- 성과목표 : UN 지속가능발전 인덱스 순위 (2023년 28위 → 2030년 20위)



6.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제안

① 국민참여형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사업명	국민참여형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17개 SDGS로 분류하여 연계 (전 국정과제 해당)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환경부 등을 중심으 로 한 관련 부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업배경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7조 :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20년 단위로 수립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기본법의 성과의 주춧돌, 마중물 성격 · K-SDGs(지방지표와 연계점), 실행체계(거버넌스), 재정 지원(지방, 민간), 국제사회 협력 등이 수록된 종합적 형태로인 작성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5년 주기) · 소관부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사업지원 : SDSN,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SDGS시민넷 · 사 업 량 : 1개 사업 ① [전략 작성 그룹 구성] 지속위 - 정부 - 전문가 - 시민사회 - 국제사회 ② [국민 참여형 방안 도출] 국민 참여 방안 마련 ③ [전략 초안 작성] 국제사회와 국내 동향, 전체적인 방향과 비 전, 지표 제시 ④ [국민 의견 수렴] 국민 참여방안의 시행 ⑤ [전략 완성 및 의결] 국민 참여의견의 정리, 전문가 포럼 통해 최종 완성, 의결 절차 대응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등대, 비전 제시 성격이 강해 타 분야보 다 전략내에 구체적 실행 방안 · 의견 충돌의 조정 방법, 갈등 관리 방안의 제시로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각종 전략, 정책 수립원칙, 정치적 강령으로 강조, 힘겨운 관련 부처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구성 가능			

② K-SDGs 민·관협력 실천 공모

사업명	K-SDGs 민·관협력 실천 공모	사업구분	신규	()
			기존(조정)	(v)
국정과제	국정목표3. 약속9.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등 (복지부 - 고령화, 돌봄, 인구) 국정목표3. 약속13. 식량주권 및 농촌미래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 식량, 지역균형발전) 국정목표4. 약속16. 기후위기,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부, 산업부 - 국가경쟁력과 환경지속가능성)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공모 선정된 지자체			
사업배경	· UN 지속가능발전실천사례(VLR)에 제시할 민관 협력 실천 사례, 성과 도출 필요 · 그간 환경부, 전국지속협 주관 K-SDGs 민관협력 대표모델 발굴 추진 노력 · 주로 용역 중심으로 진행, 용역 한계 극복하고 '모델 발굴' ⇒ '육성,확산'으로 전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5년 · 소관부처 : 공모 선정된 시·군·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업지원 : 전국 지속협(선정, 육성, 컨설팅, 홍보) · 사업량 : 3년간 100개소(K-SDGs 연관성 높은 주제 4개 분야) - 4개 분야(매년 SDGs 17개 목표 중에 4개 목표씩 선정, UN 고위급 회담 연계) · 성과지표 : K-SDGs 정량 지표와 연계 관리 · 추진방안 : 메타 거버넌스형 사업 협력체계 구축 - (중앙) 전국지속협,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전국 실천활동(지정공모) [예시] K-SDGs 포럼, 정부부처-시민단체 SDGs 공동 실천 지원, 지역 지속가능발전시민대학 지원 - (지방)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실천 활동(공모로 선정) [예시] 활동주체 → 지방자치단체(접수,신청) → 중앙정부(선정,예산지원)			
기대효과	· 지난 3년간 UN VNR 국내 등재 단 3건, 매년 다수의 등재로 국제사회 신뢰도 향상 · 기본법 제정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2022년 4-5월까지 5회 개최된 전국 권역 토론회의 국민 의견을 정책화 · 전국지속협, 지지협 등 민간에 축적된 전문역량과 국민적 소통, 협력 확대			

③ 국가 지속가능성 위험 종합진단

사업명	국가 지속가능성 위험 종합 진단: 10대 위험요소 평가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국정목표3. 약속9.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등 (복지부 - 연금개혁, 고령화, 돌봄, 인구) 국정목표3. 약속13. 식량주권 및 농촌미래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 식량, 지역균형발전) 국정목표4. 약속16. 기후위기,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부, 산업부 - 국가경쟁력과 환경지속가능성) 국정과제5. 약속18/19.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의 한반도 (평화안보와 국제협력)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사업배경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포함하면서 진일보 · 현재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실질적인 위험요소 진단, 실질적 대책 부족 ⇒ 여러 부처의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21세기형 위기진단과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5년 (3년) · 사업주체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 참여 · 추진방안 : 협동연구과제로 진행하되, 용역발주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1차년도) 위기 핵심분야 파악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시스템다임내 믹스, 미래학, 지속가능과학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방정부, 과 학기술자, 기업, 해외전문가 등 총망라한 컨퍼런스) (2차년도) 핵심분야별 국내 전문기관 연구자들의 분석 및 공유 워크 숍 개최 (3차년도) 핵심분야별 위험요소 종합평가 (10대 위험요소와 향후계 획) - 설문 및 빅데이터 활용			
기대효과	· 20세기에는 핵전쟁이나 냉전, 북한으로 인한 안보적 불안감이 컸으 나, 21세기에는 기후위기와 식량난, 난민발생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미 다가오고 있는 위 기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수 있음 · 행정이나 연구에 있어서도 Silo효과로 인해 융합 연구에 한계가 있었 음. 본 연구가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이 될 것으 로 기대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기반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위원회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④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지원

사업명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지원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국정목표3. 약속9.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등 (복지부 - 고령화, 돌봄, 인구) 국정목표3. 약속13. 식량주권 및 농촌미래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 식량, 지역균형발전) 국정목표4. 약속16. 기후위기,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부, 산업부 - 국가경쟁력과 환경지속가능성)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광역자치단체			
사업배경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8, 20, 26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지속위 운영 등 지방정부 책무 확대 ·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와 사업 지원에 대한 기대감 상승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소관부처 : 국조실, 지방정부 · 사 업 량 : 2개 사업(전국 1개소, 광역 17개소) - (중앙) 법정단체로 규정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의 운영비 지원 (17개 광역) 각 광역별로 10억(국5, 지방5)의 사업 지원 - 사업내용 - (중앙) 국내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민실천의 통합 관리 플랫폼 역할 수행 K-SDGs, L-SDGs 수립 현황 조사 용역 및 사전·사후 컨설팅 지원 지방정부, 지역지속협의 정책 추진 모니터링 관련 공무원 및 활동인력 역량 강화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추진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업 지원 (광역) 광역·기초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법정 업무 수행 광역·기초 지방추진계획 및 지표발굴 수립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의 역할 수행			
기대효과	· 2022년 4-5월 5회에 걸쳐 추진된 권역별 토론회에서 지방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 가장 높음 · 지방정부와 지방의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으로 기본법 정책성과 거양 · 지난 20년간 지방재원으로만 추진되던 한계를 금번 정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개선			

⑤ 지속가능발전 시범 지자체 조성

사업명	지속가능발전 시범 지자체 조성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국정목표3. 약속9.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등 (복지부 - 고령화, 돌봄, 인구) 국정목표3. 약속13. 식량주권 및 농촌미래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 식량, 지역균형발전) 국정목표4. 약속16. 기후위기,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부, 산업부 - 국가경쟁력과 환경지속가능성)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지방정부			
사업배경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 시범사례 도출 필요 ·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 관리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포괄적, 통합적 예산 지원 필요 ·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 수단 마련(도시재생 사업 일몰 도래, 이후 특화 사업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2025년 · 소관부처 : 국조실, 지방정부 · 사 업 량 : 9개 사업(시군구 10개소) *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내용 - 지속가능발전 시민 의견 수렴 및 종합 계획 구상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최소한의 도시 인프라 구상 및 설치 - 도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지자체 경영모델 도출(도시계획과 SD 계획의 조화) - 기존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관련 S/W와 H/W의 종합적 사후관리 방안 도출 -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지속가능한 인구 전략 수립 등 * 구체적 하드웨어 사업을 각 정부 부처 사업 연계			
기대효과	·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통해 참여와 관심도 상승 · 그간 지속가능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자체 사업들의 통합 모델화 가능 · 지난 20여년간 지방재원으로만 추진되던 한계를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개선			

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참여 확대 사업

사업명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참여 확대 사업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국정목표4. 국정과제 90, 청년 주거, 일자리, 맞춤형 지원 국정목표4. 국정과제 92, 청년 참여의 장 확대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부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 228개 지자체 중 113개로 약 49.5%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청년 및 청소년 세대가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경제, 사회, 환경 조성의 절대성 대두· 전국 청년센터 및 관련 종사자, 청년 이용자들이 기성세대와 조화롭게 연결될 고리 부재 실정· 기본법에 따른 각 지역 SDGs 및 정책과정에 미래세대가 참여할 기회 및 추진 체계 확립 필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23년· 사업지원 : -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량 : 17개 광역 지자체<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17개 광역) 각 광역별 (국비, 지방비) 사업 지원·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 청년소셜벤처 및 청년NPO 대상 참여 공모· 주체별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대상 지속가능발전 역량교육·컨설팅 사업 (연간 2회)- 전국 청년교류 및 공론장 개최 (연간 2회)- 전국 청년활동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②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제 실천할 청년 개인 및 단체 공모 (도시재생, 예술, 문화유산, 정책 등)- 지역지속가능발전 청년분과를 통해 지역의제 실천사업 및 세대간 연대 고도화- 지역 청년교류 및 공론장 개최 (연간 2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제정, 제도 지원 통한 지역 맞춤형 청년 역량 강화 및 중단 없는 분야통합 연대체 운영· 이슈별 청년참여 제고를 통해 경제·사회·환경 등 의제 확산과 정착, 다각적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 능통한 광역-전국 단위 MZ세대 네트워크 촉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의식 함양· 지역마다 세대간 문화와 제도, 투 트랙으로 연결된 안정적인 교류로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착			

⑦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연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사업명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국정목표4. 국정과제 90, 청년 주거, 일자리, 맞춤형 지원			
소관부처	정부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민간 :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청년참여 활성화 및 고도화 필요·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청년 비즈니스모델 개발, 창업·창직 지원 사업· 지속가능발전 사례수집, 지식·정보·콘텐츠 생산 및 학술연구· 기관·캠퍼스·단체 간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 위수탁 또는 협업 관리·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23년· 사업지원 : 각 대학 진로 및 학생지원 관련 부서· 사 업 량 : 지역별 17개 광역<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17개 광역) 각 광역별(국비, 지방비) 사업 지원·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 청년소셜벤처 및 청년NPO 대상 참여 공모· 주체별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강좌 개설 및 창업 공간 등 대학 인프라 지원②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컨설팅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추진(연간 2회)- 한국 청년 지속가능발전교육 경진대회 추진(연간 2회)③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지역 내 청년 지속가능발전 청년소셜벤처 및 청년NPO 발굴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 초기 청년부터 지속가능발전 및 경영에 능통한 혁신적·포용적·전문적 전문가 발굴· 대학운영 위기극복에 일조하며 예비소셜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및 대학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실천적 시민역량 강화			

⑧ UN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확대·강화

사업명	UN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확대·강화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국정과제 99. 선진공공외교강화, 기후변화 탄소중립 외교강화(외교부)			
소관부처	정부 : 국무조정실, 외교부, 지방정부 민간 :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사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31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유기적 협력(Multi-level Governance)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유엔-국가-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 부각)· 기본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선도적 노력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 확산과 국제적 위상 강화 필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참여는 물론 국제협력의 장을 국내에 마련하여 국제협력의 토대를 강화하여야 함·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이클레이(ICLEI)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특별자문지위 기관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책결정과정에 세계 지방정부그룹(LGMA)의 간사(focal organization) 기관으로 역할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23~2024년· 사업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본부, 각 지역별 국제기구 섹터에서 유치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 행사 분석- ❶ 정부 주요인사 및 민간 그룹의 직접 참여 방식의 국제행사 추진 계획 마련❷ 국제사회 신뢰도 향상과 경제적 이익 판단되는 국내 유치 행사 지정 (10개소) * 주요행사는 공식 행사 외 대규모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포함❸ 유치 지자체, 민간주체와 협업 통해 유치계획 마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20년간 축적된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세계 각국 및 후발 추진국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선도국으로서의 위상과 입지 강화·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네트워크와 협력은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와 직결· 전문연구기관 중심의 국제네트워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과 지방정부 중심의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전환 계기 필요			

⑨ UN 자발적활동보고서(VLR) 등재 지원

사업명	UN 자발적활동보고서(VLR) 등재 지원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국정과제 99. 선진 공공외교 강화, 기후변화, 탄소중립 외교 강화 (외교부)			
소관부처	정부 : 국무조정실, 외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정부 민간 :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31조 : 국제사회규범 대응·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지방정부, 민간영역의 실천 활동 장려· 유엔-국가-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 (Multi-level Governance)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노력은 새로운 글로벌 기준 (New Normal)이 되고 있음· 현재 국가차원의 VNR보고서는 발행하고 있으나 국내 지속가능발전, SDGs 관련 실천 사례가 많음에도 VLR(Voluntary Local Report) 등재는 매우 저조·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활동 강화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유효한 전략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방안임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23년· 소관부처 : 국조실, 지방정부· 사업지원 :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사 업 량 : 20개소(20개소 × 2천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전 조사 : VLR 등재 가능 사례 조사 및 수요조사② 신청 : 지방정부 → 중앙정부(이클레이)③ 선정 : 2023년 등재 예정 지자체, 민간 사례 선정④ 지원 : 각 사례별 정리, 번역, VLR 등재 절차 등 지원⑤ 등재 : 등재 후 국내외 홍보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적 성과 공유 및 국제사회 협력 필요·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동기부여 및 국제협력 기회 확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정책 조기 성과 도출 가능성 강화			

⑩ SDGs 아카이브 구축

사업명	SDGs 아카이브 구축	사업구분	신규	(v)
			기존(조정)	()
국정과제	국정과제 81. 디지털 및 메타버스 인재양성, AI 교육과정 개발(교육부) 국정과제 85. 지역대학 자율성 및 책무성(교육부)			
소관부처	정부 : 국무조정실, 교육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정부			
사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록보존과 아카이브 구축의 일상화·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SDGs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대중적인 활용을 강조·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SDGs 관련 실천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평가·분류·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절실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23년~2028년· 소관부처 : 국조실, 교육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정부· 사업지원 : 지속가능발전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아카이브를 준비하는 대학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 업 량 : 수집, 등록, 변화, 저장/보존, Data 추출, 서비스 (1개소 × 2억 원×7년)· 사업 내용: SDGs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 조성, 운영 근거 마련, 구축 전략 수립,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등 아카이브 관리·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민간 및 국내, 국외에 소장된 자료의 조사와 수집, 유자료의 저작권 조사와 기술,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 대학 SDGs 아카이브 일상 사업 : 등록 → 저장 → DB추출 → 서비스/이관·수증·구입·제작 작업 수행. 전시전 개최(찾아가는 SDGs 전시전 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여년 간 수행해 온 정부, 민간단체의 SD·SDGs 기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의 공유· SD·SDGs 아카이브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과 협치 활동의 자산을 보존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전승하는 기관임· SD·SDGs 아카이브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연구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학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됨. 정부, 대학, 학교, 지방 공공 기관에 유용한 연구자원을 제공한다. 도서관과 달리 SDG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록자료들은 유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됨			

7.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제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개정

- 2022년 6.1 지방선거에 의해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22.1.4.) 및 시행령(2022.7.5.)에 근거해서 2022년 하반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 직속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구성·운영함(광역자치단체는 의무, 기초자치단체는 자율)
- 기존 유사 위원회의 정비(통폐합) 필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함

구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격	메타위원회	민관협력기구
필요성	- 정부차원의 정책추진과 가치 내재화 필요	- 시민사회 및 기업의 인식확산과 네트워크, 실천사업 필요
구성·운영	- 행정내부에서 심의 및 자문기구 - 메타위원회로 30인 내외 구성	-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 기구 - 행정 및 모든 기관단체(MGoS) 참여 가능
주요 역할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지표·평가보고서 심의 의결, 정책의 지속가능성 검토, 주요시책 심의자문 등	-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과정의 참여, 민·관 협력의 다양한 사업의 기획추진, 모니터링 등
특징	- 행정절차상 운영되는 심의의결기구 - 결정사항의 행정구속력 강함	- 민간사무국주도로 자율적 운영 - 민관협력기구로서 실천사업 활발
사무	- 지자체 담당부서(지속가능발전책임관)	- 민간사무국에서 전담(지속협사무국)
고려 사항	- 타 위원회 위원의 지속가능성 가치 내재화 및 전문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위는타 위원회 위원 + 지속가능발전에 지향성(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일정 비중 이상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와 이슈를 다루는 조직과 연대와 협력 또는 지원 - SDGs 관련 지역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적극 추천하거나 참여하여 지속가능성을 견인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 지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기획실에 지속가능발전 책임관(광역 3급 이상, 기초 4급 이상)을 두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기획부서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부서 등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5년 주기) 및 추진계획(5년) 수립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내용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9조)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방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지방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지방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내용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 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체계 구축·이행(중·장기 행정계획 등 대상)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9조에 근거해서 중·장기 행정계획(국가 계획은 198개임)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체계를 구축·이행함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체계가 구축·이행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체계 구축이행(2년 주기)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지표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년마다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해야 함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정책내재화 및 협업체계(Nexus) 구축운영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정책들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SDGs 기반 정책추진체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과 숙의공론화장 운영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MGoS)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확대·강화(체계적·지속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강화하여 일상생활 속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해야 함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와 협력을 하도록 함
-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함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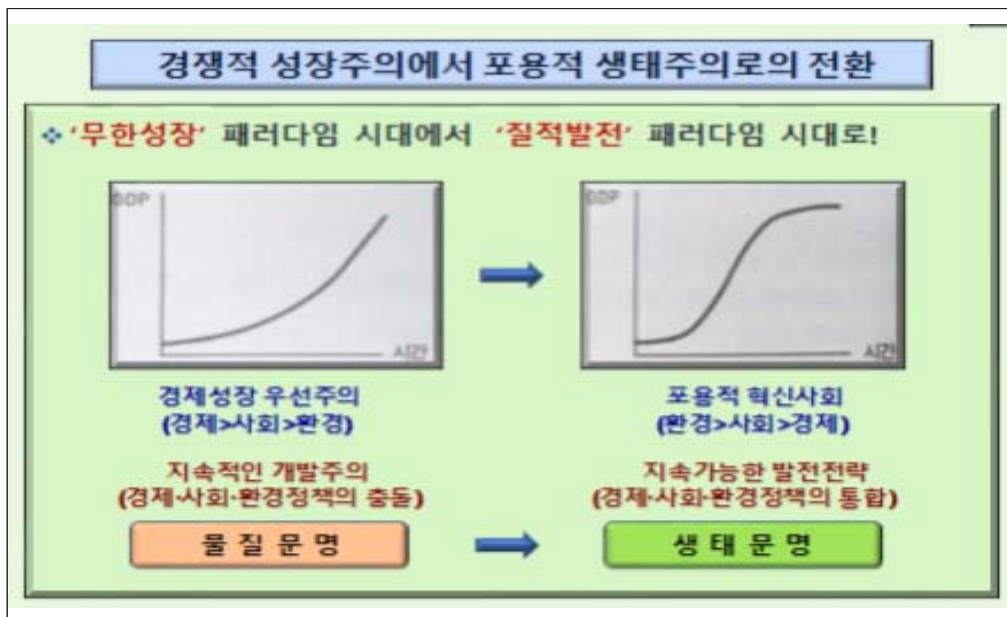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8. 맺는 말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는 과거의 ‘무한성장’ 패러다임 시대로부터 새로운 ‘질적발전’ 패러다임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님을 인식하여 제도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정책책임자(정부)와 이해관계자들(기업·시민)의 의지와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2022년은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의미있는 해로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철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 김병완 외. (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대영문화사.
- 김병완. (202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의의와 지역의 과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권역 토론회 : 광주·전남·전북>.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 이명석. (2017). <거버넌스 신드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케이트 레이워스 (홍기빈 역). (2018). <도넛경제학>. 학고재.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22.1.4.제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2022.7.5.시행).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제1세션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동향과 과제

- 좌 장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 발표1 :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발전 선도국가 및 이클레이 회원 도시 국내외 사례
- 발표2 : 박현옥 (청운대학교 교수)
 - 대학의 지속가능한 인재를 위한 혁신사례
(WURI Ranking을 중심으로: 학생 개방성과 교류성)
- 발표3 :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확산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 토론1 :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
- 토론2 :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SDG 선도국가 사례

: SDGs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사회학 박사)

satyagraha@gu.ac.kr

2022年8月12日

1

목차

Contents

1.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SDGs
2. SDGs 세계적 동향과 확산의 기회구조
3. SDGs 선진국 사례
4. 종합-점검

2

1.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SDGs

3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1.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SDGs

2015년 9월 유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합의·채택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유엔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선포 5주년이자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10년의 야심 찬 행동을 결의한다.

‘SDGs 달성을 위한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은 전 세계인의 공동과제인 빈곤, 기아 종식, 성평등,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과 빈부(재정)격차 해소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자 사람,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2021년 9월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지구의 멸망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붕괴를 피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명 ‘우리의 공동 의제’는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아 제시한 열 두 가지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치(행동)를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1.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2. 지구를 보호하고, 3. 평화를 증진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4. 국제법 준수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5. 여성과 소녀들을 중심에 두고, 6. 신뢰 구축에 나서며, 7.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8. 유엔을 혁신하고 강화하며, 9.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을 보장하는 한편, 10. 지구촌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11. 청년에게 듣고 청년과 함께 일하며, 12. 지속가능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4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1.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SDGs

이어 2021년 9월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지구의 멸망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붕괴를 피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명 '우리의 공동 의제'는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아 제시한 열 두 가지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치(행동)를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1.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2. 지구를 보호하고, 3. 평화를 증진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4. 국제법 준수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5. 여성과 소녀들을 중심에 두고, 6. 신뢰 구축에 나서며, 7.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8. 유엔을 혁신하고 강화하며, 9.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을 보장하는 한편, 10. 지구촌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11. 청년에게 듣고 청년과 함께 일하며, 12. 지속가능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도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독일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내각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장관이 참여하는 SDGs 실천본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시민이 함께하는 'SDGs 실시지침'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

5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1.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SDGs

2030년까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

- 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UN: 199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을 바탕으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5.9. 뉴욕, 2000~2015년)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2015.9.유엔총회)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협약

지속가능발전

환경경제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전체를 관통하는 이념

지구적 차원의 UN-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K-SDGs의 구성

UN-SDGs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ing No one behind)이라는 SDGs의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 가야 할 방향성을 17가지 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로 설정



K-SDGs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합의와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의 3대 핵심 가치영역을 고려하여 17가지 목표와 122가지 세부목표, 214개 지표로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설정



6

<참고> 세계인들은 왜 SDGs를 주목하는가?

현재 지구-국가-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지구촌의 수십억 명 인구가 빈곤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또한 고조되고 있다. **기회, 빈부, 권력의 격차가 심각하며, 불평등은 핵심적인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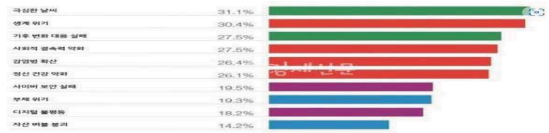
실업, 글로벌 보건에 대한 위협, 더욱 빈번하고 극심해진 자연재해, 분쟁의 급증,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천연자원의 고갈과 사막화, 가뭄, 토지 황폐화, 담수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지구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해양 산성화 및 기타 기후 위기로 인해 많은 공동체와 지구의 생물학적 자원 체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유엔 2030 의제 중).

WEF가 진단한 2022년의 10가지 위험 요소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 Repor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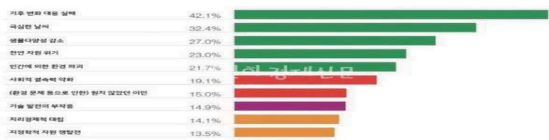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한 1천 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5가지 범주로 분류된 37가지 위험 요소를 비교해서 보다 위험도가 높은 요소를 골랐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세계 위험 보고서다. 2022년 보고서는 특히 ‘더욱 시급한 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위험 요소를 각각 응답하게 했다.



1. 앞으로 10년간 세계가 마주하게 될 가장 위협적인 문제 10가지는?



2. 단기(0~2년) 내로 세계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 10가지는?



2. SDGs 세계적 동향과 확산의 기회구조

2. SDGs 세계적 동향과 확산의 기회구조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THE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TI-CORRUPTION**

1.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2. Not be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3.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4. Support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5. Support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6. Support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7.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8.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9.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10.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Source: UNGC

- 유엔의 의지**
- 정부, 지방정부의 혁신전략**
- ESG 경영의 확산**
- 대학평가의 변화**
- 탄소중립 2050**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

9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 10년의 행동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2020년 1월 SDGs 달성을 위한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이 시작되었다.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은 세 가지 조치를 포함한다.

첫째, SDGs를 위한 더 큰 리더십, 더 많은 자원 및 더 현명한 해법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조치.

둘째, 정부, 도시 당국의 정책, 예산, 기관 및 규제 프레임 워크 전환을 위한 지역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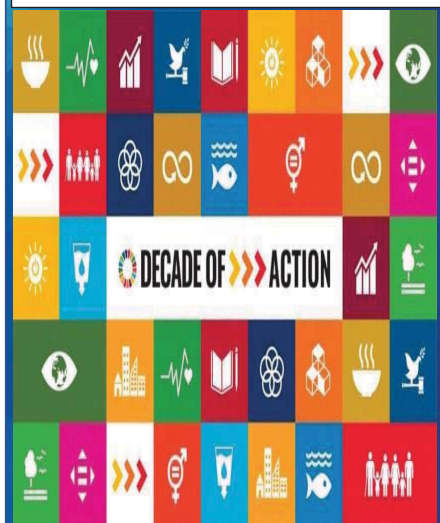
셋째, 청소년, 시민사회, 언론, 민간부문, 노동조합, 기업, 농민,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식 전환과 협동을 위한 조치

또한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은 세 가지 지향을 표방한다. 첫째,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Mobilize everyone, everywhere).

둘째, 긴급성·즉효성 있는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Demand urgency and ambition).

셋째, 새로운 발상과 해결책을 촉진한다(Supercharge ideas to solutions).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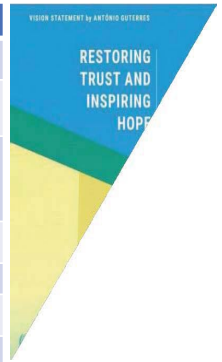
10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함께할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DECADE OF ACTION	
함께해야 할 과제	내용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의제(SDGs)의 완전하고 일정한대로 따른 실천을 전개한다. ▶ 모든 사람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선다.
지구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가뭄, 사막화, 식량 및 물 부족, 산불과 화 재, 해수면상승, 해양 파괴 등에 대응해 행동한다. ▶ 생태적 환경조성에 부응해야 하는 역사적 기회를 자 각한다. ▶ 파리기후협약의 약속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실천한다.
평화 촉진·분쟁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헌장, 국제법의 제 원칙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한다. ▶ 군비관리, 비확산 및 군축에 관한 제 합의와 틀을 지지한다. ▶ 육상·해상·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 방지를 위한 외교 수단 강화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지구 규모의 정 전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 평화유지와 지속은 유엔의 주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국제법 준수, 정의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 및 국제법은 공정한 세계의 기초임을 인식한다. ▶ 민주주의·인권의 존중, 민주적 거버넌스와 법의 지배 촉진을 실현한다.
여성 및 여아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여성 참여 및 여성과 여아의 활동 실현을 위한 행동 가속화한다.
신뢰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인권침해, 부패, 주변화, 모든 형태의 차별, 빈곤, 배제, 교육과 고용의 결여를 포함한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한다.
디지털 분야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실현 가속화 가능성을 연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디지털 접근성 을 높인다.
유엔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무총장의 유엔개혁을 지지한다. ▶ 안보리 개혁의 논의, 총회 재할성화와 경제사회이사회 강화 등을 지지한다.
지속가능한 자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금을 전액 납부한다. ▶ 투명성, 설명 책임과 효율적 자금 이용을 촉진한다. ▶ 자금의 민간 재원을 확대한다.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을 보다 포용적인 기구로 만든다. ▶ 지역기관, NGO, 시민사회 등 모든 관련 주체와 재원을 강화한다.
청년과의 소통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일해야 한다. ▶ 청년은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청년의 유의미한 권여를 통해서 상황을 개선한다.

이창언(2022). <SDGs교과서> .116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 총장은 2021년 3월 23일 발 표한 비전에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과 미래로 가는 현재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달려있고, 인류와 지구의 이 익을 위한 우리 공동의 의제 를 위해 힘을 합칠 때 성공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 우리 공동의 의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유엔은 75주년 기념 표어를 ‘우리 미래를 함께 만들자’(Shaping our future together)로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엔’(The Future We Want, The UN We Need)을 제창했다.

“76년 전, 유엔은 희망의 매개체로 만들어졌다. 유엔은 파국적인 갈등의 그림 자에서 벗어나는 세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COVID-19, 갈등, 기아, 빈곤 및 기 후 비상사태는 우리의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줌과 동시에 연대 만이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인류 앞에 놓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SDGs를 달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나 COVID-19 백신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이들, 특히 가난하고 불공정한 환경에 놓인 소녀와 여성, 어린이와 청년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확보하고 옹호해야 한다. ‘우리의 세계’에 상처를 주는 갈등 종식을 추구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과감한 기후 행동에 관한 약속과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보고서인 <우리 공 동의 의제>에 자세히 설명한 대로 더욱 포용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효과적 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평화, 발전, 인권, 모두를 위한 기회 등 지난 76년 동안 유엔 헌장에 힘을 실어준 가치에는 종료일이 없다. 유엔의 날 을 기념하여 이러한 이상을 위해 대동단결하고 희망에 부응하자.”

2021년 10월 2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 .

출처 :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선인



12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함께할 과제

2021년 9월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지구의 멸망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붕괴를 피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명 **‘우리의 공동 의제’**는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아 제시한 **열 두 가지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치(행동)를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1.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2. 지구를 보호하고, 3. 평화를 증진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4. 국제법 준수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5. 여성과 소녀들을 중심에 두고, 6. 신뢰 구축에 나서며, 7.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8. 유엔을 혁신하고 강화하며, 9.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을 보장하는 한편, 10. 지구촌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11. 청년에게 듣고 청년과 함께 일하며, 12. 지속가능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도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독일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내각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장관이 참여하는 SDGs 실천본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시민이 함께하는 ‘SDGs 실시지침’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

13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 재원조달 보고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Inter-agency Task For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 보고서의 2021년 판(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개발원포럼에 앞서 매년 발간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FSDR)의 2021년판에서 "SDGs의 목표 연도가 10년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SDGs의 17개 목표에 대한 대응이 크게 늦어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향후 유사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보고서는 UN경제사회국(DESA) 재원조달 사무국과 지속가능발전 재원에 관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에 소속된 60명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을 잘 조절하기 위해 세금을 잘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탄소세 등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세금의 신설과 활용을 촉구"한다. 이 밖에 "국민에 대한 투자", "사회적 기반시설과 산업 혁신에 대한 투자", "정책과 금융 관련 글로벌 아키텍처(architecture)의 개혁"이라는 3개의 주제를 제언했다.

번역 : 이창언

14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2022년 6월 2일, 유엔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163개국 중 28위에서 27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1위는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스웨덴, 4위 노르웨이, 5위 오스트리아, 6위 독일 7위 프랑스, 8위 스위스, 9위 아일랜드, 10위 에스토니아 순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위로 작년 18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SDGs 달성을 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021년 SDGs 달성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는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점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전 세계 감소는 0.01% 포인트 감소했으며 저개발 및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특히 악화가 심각했다. 물론 주요 원인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경제 혼란이다.

<참고> 세계 각국에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에 근거한 정책상황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각국이 동일한 지표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목표나 세부목표별로 각국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SDSN)와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은 세계 각국의 SDGs 달성상황을 분석한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이창언, 2020: 266).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유엔의 SDGs 글로벌 지표와 국가의 자발적인 진행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발행된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의 공식 데이터와 민간 연구 기관 및 시민 사회의 비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다 시기 적절한 정보를 활용함.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SDGs 목표를 다루고 유엔 193개 회원국의 데이터를 소급하여 SDGs 17개 목표 달성도와 진척도, 국가별 순위와 지역별 달성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창언, 2020: 265).

Table 2.1
2022 SDG Index ranking and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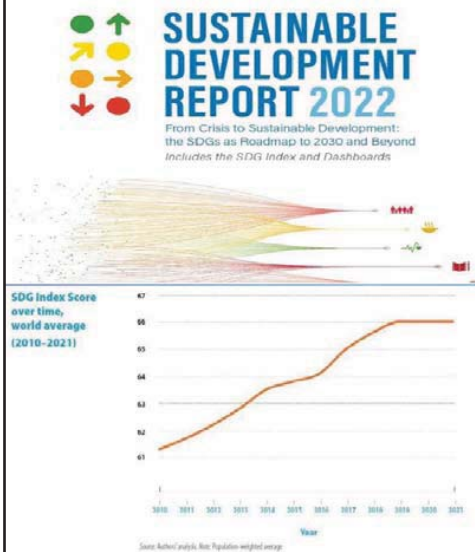
Rank	Country	Score
1	Finland	86.5
2	Denmark	85.6
3	Sweden	85.2
4	Norway	82.3
5	Austria	82.3
6	Germany	82.2
7	France	81.2
8	Switzerland	80.8
9	Ireland	80.7
10	Estonia	80.6
11	United Kingdom	80.6
12	Poland	80.5
13	Czech Republic	80.5
14	Latvia	80.3
15	Slovenia	80.0
16	Spain	79.9
17	Netherlands	79.9
18	Belgium	79.7
19	Japan	79.6
20	Portugal	79.2
21	Hungary	79.0
22	Iceland	78.9
23	Croatia	78.8
24	Slovak Republic	78.7
25	Italy	78.3
26	New Zealand	78.3
27	Korea, Rep.	77.9
28	Chile	77.8
29	Canada	77.7
30	Romania	77.7

번역 : 이창언

15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이 보고서는 컬럼비아 대학의 경제학자 인 제프리 삭스 (Jeffrey Sachs) 교수가 이끄는 SDSN에 의해 매년 발표된다. 유엔 및 연구 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SDGs 이니셔티브를 100 점 척도로 평가하는 SDGs Index (SDG Index)가 발표되고 순위가 매겨진다. 2022년판은 핀란드(86.57)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년 연속 1위 정상에 올랐다. 덴마크(85.6)는 2위, 스웨덴(85.2)은 3위, 노르웨이(82.3)는 4위다. 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한다. 일본은 79.6점으로 19위다. 미국은 41위(75.6위), 중국은 56위(72.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DGs의 세계 평균 성과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COVID-19 전염병이 SDG 목표 1 "빈곤 제거"와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달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목표 11 ~ 15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군사 충돌이 식량 안보 및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평화, 외교, 국제 협력은 세계가 2030년 이후 SDGs를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한다. "코로나 재난과 우크라이나 상황과 같은 여러 위기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정책 관심과 우선 순위가 SDGs 및 파리 협약과 같은 중장기 목표에서 단기 문제로 옮겨 갔다"고 경고했다.

제프리 삭스는 "사회적 포용, 청정 에너지, 책임감 있는 소비,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같은 SDGs의 기본 원칙은 우리 시대의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SDGs의 진전을 회복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는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며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번역 : 이창언

16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고위급 정치포럼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은 2015년 9월 유엔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이에 포함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각 국가별 이행상황을 추적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UN의 핵심적인 이행점검 기구(플랫폼)이다. HLPF는 유엔 총회 주관 하에 각국 정상급 회의로 4년에 한번 유엔 총회 개최기간 중 2일간 개최되며, UN ECOSOC 주관 하에 장관급 회의 3일을 포함하여 매년 8일간 개최하고 있다. HLPF의 회의는 유엔 총회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정상급 회의(SDG회의)가 있다. 이 회의는 4년 마다 유엔 총회 개최기간 중 2일간 개최된다. 그리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관급 회의 3일을 포함하여 매년 8일간 개최됩니다. 참가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 및 전문 기관 회원국이다. 장관급 HLPF에서는 매년 희망하는 나라가 2030의제 이행·실천 상황에 대해서 자발적 국가 검토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실시하게 되어 된다.

HLPF는 2012년 6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Rio+20)의 결정으로 개최됨. 199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1의 채택과 함께 설립된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2013년에 HLPF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SDGs 이행 점검 기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결의안 A/RES/67/290에 따라 HLPF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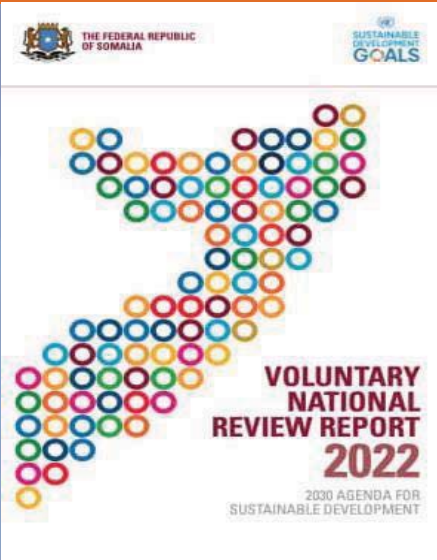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발취 및 이행방향과 권고사항 제시
- 지속가능개발 협약의 이행과정 검토 및 후속 조치 시행
- 지속가능개발의 3대 축(경제·사회·환경)의 통합 강화
- 새로운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고려한 역동적이며 행동 지향적인 의제 설정

출처: 국제개발협력용어집[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

17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자발적 국가, 지역보고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정기적이고 포괄적 검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 조치와 검토에 관련된 기존 네트워크의 제도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국가 보고서를 통해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를 파악한다. 지역 차원의 회담과 글로벌 검토와 더불어, 국가 보고서는 다양한 차원의 후속 조치를 위한 권고 사항에 반영되고 있다(지속가능발전의제 77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8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정치포럼(HLPF)의 정기적 검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의해 자발적으로 주도되며 주요 그룹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은 2030 의제의 이행의 가속화를 위해 성공, 도전 및 교훈을 포함한 경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국가 및 하위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하며 철저한 검토 프로세스를 수반할 때, 증거 기반일 때, 가시적인 교훈과 해결책을 도출할 때, SDGs 구현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이 뒤따를 때 가장 의미가 있다.

'2030 의제 시행' 7년이 되는 지금 VNR은 시행 중인 정책과 전략의 이행과 영향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국가보고 수행 과정이 SDGs 이행과 별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VNR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각국이 목표와 목표의 이행 진척 상황과 단점을 평가하고 혁신하는 과정이다. VNR은 SDGs의 국가적 구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조정 및 정부 전체와 사회 전체의 접근방식을 강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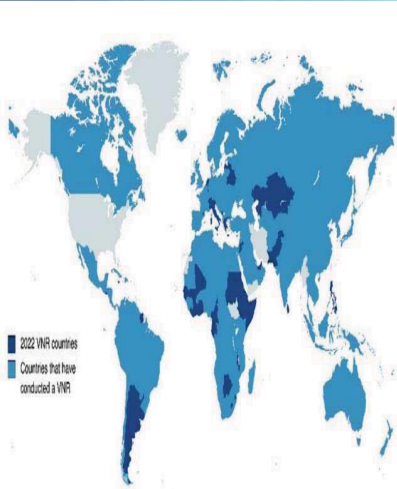
번역: 이창언

18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자발적 국가, 지역보고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2016-2022년 VNR 국가 분포 지도



202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 정치포럼(HLPF)은 VNR이 발표되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뉴욕에서 ECOSOC의 주최로 장관급 회담이 열렸다. HLPF는 1년 임기의 회원국 대사이자 상임 대표인 ECOSOC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2021년까지 255건의 VNR이 실시되었으며 (2016년 22건, 2017년 43건, 2018년 46건, 2019년 47건, 2020년 47건, 2021년 42건), 176개국이 VNR을 제시했으며 59개국이 1건 이상의 VNR을 실시했다. 2022년에는 46개국이 VNR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VNR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각국이 목표와 목표의 이행 진척 상황과 단점을 평가하고 혁신하는 과정이다. VNR은 SDGs의 국가적 구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조정 및 정부 전체와 사회 전체의 접근방식을 강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2030 의제 및 SDGs 시행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격차, 수집 및 세분화는 여전히 주요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도시 연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및 비전통적인 데이터소스 사용을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많은 보고서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SDGs 기획, 실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메커니즘의 구축 및 통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SDGs를 꾸준히 달성하기 위해 SDGs 구현을 모니터링, 검토(평가) 및 결과에 따라 이니셔티브를 개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2016년 VNR에 참여한 후 2022년에도 VNR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SDGs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연관성을 잘 포착한 SDGs 연계와 실천이 필요하다.

출처 :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선인

19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자발적 국가보고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정기적이고 포괄적 검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 조치와 검토에 관련된 기존 네트워크의 제도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국가 보고서를 통해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를 파악한다. 지역 차원의 회담과 글로벌 검토와 더불어, 국가 보고서는 다양한 차원의 후속 조치를 위한 권고 사항에 반영되고 있다(지속가능발전 의제 77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8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정치포럼(HLPF)의 정기적 검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의해 자발적으로 주도되며 주요 그룹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은 2030 의제의 이행의 가속화를 위해 성공, 도전 및 교훈을 포함한 경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국가 및 하위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하며 철저한 검토 프로세스를 수반할 때, 증거 기반일 때, 가시적인 교훈과 해결책을 도출할 때, SDGs 구현을 주도하는 구체 적인 행동과 협력이 뒤따를 때 가장 의미가 있다.

'2030 의제 시행' 7년이 되는 지금 VNR은 시행 중인 정책과 전략의 이행과 영향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국가보고 수행 과정이 SDGs 이행과 별개로 간주 되어서는 안 된다. VNR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각국이 목표와 목표의 이행 진척 상황과 단점을 평가하고 혁신하는 과정이다. VNR은 SDGs의 국가적 구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조정 및 정부 전체와 사회 전체의 접근방식을 강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출처 :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선인

20

1) 유엔의 SDGs 실행 의지: 자발적 지역보고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VNR과 VLR(Voluntary Local Review: 자발적 지자체 리뷰)은 보편적이고 통합된 성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차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에서 2030 의제의 이행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VLR(Voluntary Local Review: 자발적 지자체 리뷰)은 유엔이 합의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세계 각 도시가 그 대처 상황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보고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전략의 실행은 민간영역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정부와의 일상적 협력 창구를 구축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지역 검토(Voluntary Local Review, 이하 VLR)는 자발적 국가 검토(VNR)에서 확인된 국가 외에 다양한 도시 수준의 상황 파악이 어렵다. VLR은 이러한 VNR의 맹점을 보완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정한 169개 목표 중 1/3은 도시의 개입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SDGs의 원칙을 도시 관리 및 행정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 SDGs를 연구하고 있다.

자발적 지역보고(VLR)는 도시에서 SDG 이니셔티브의 상태를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보고서이며 SDG 현지화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 VLR에 참여하는 도시가 급증하고 있다. IGES는 VLR의 광범위한 채택과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로 "지방 SDGs 이행·실천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혁신적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와의 제도적 지원 및 행정 내 SDGs 전담팀 구성

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SDGs 추진기구의 존재 여부"라고 제언한다.

출처 :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선인

21

2) 정부, 지방정부의 전략: 이클레이 말미약속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이클레이 말미 약속과 전략비전 2021-2027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역 실천을 통한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0년 유엔(UN)과 세계지방 자치단체 연합(UCLG)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클레이는 120여 개 국가 2,500여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글로벌 지방 정부 네트워크이다.



22

2) 정부, 지방정부의 전략: 이클레이 말뒀약속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2018년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비전'이 발표된 지 3년 후인 2021년 4월 12일에 스웨덴 말뒀(Malmö)에서 개최된 '2021-2022 이클레이 세계대회'에 앞서 열린 이클레이 이사회에 의해 '이클레이 말뒀 약속과 전략비전 2021-2027(THE ICLEI MALMÖ COMMITMENT AND STRATEGIC VISION 2021-2027)'이 채택되었다.

말뒀에서 개최된 이클레이 세계대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다섯 가지 도시 비전(저탄소 도시, 자연기반도시, 자원순환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중심의 공정한 도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의 행동의 10년 (2021-2030)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클레이 말뒀 약속과 전략비전'은 "2021년 새로운 '행동의 10년'의 시작과 2030 및 2050 유엔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특히 파리기후협약과 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NDC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실행을 위한 모든 정부 단위, 민간부문, 학계/연구자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세계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해야만 한다"며 '행동의 10년'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출처 :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선인

23

2) 정부, 지방정부의 전략: 이클레이 말뒀약속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이클레이 말뒀 약속과 전략 비전 중 '이클레이 약속: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마을, 지역 및 도시 세계 구축'

-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 모델을 유익하게 확대 및 확장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 단지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에 포용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는 모두의 일반적 권리이며 일부의 특권이 아니다.
- 거대하고 집합적인 사회 전체 및 정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변화를 관할권 안에서 그리고 관할권 사이에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관할권 전반에서 모든 지방, 국가, 세계 수준의 발전과 협력의 가장 근본적이고 불가분한 요소로 확립시킨다.
- 우리 시대의 가장 급박한 사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당하고 포괄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응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 체계와 접근의 회복력을 보장할 심오한 판단을 사람과 지구 양측의 장기 이익에 따라 내린다.
- 지구 환경의 건강과 인류의 웰빙을 GDP와 함께 고려하여 번영, 부, 웰빙을 측정하는 글로벌 경제로 이동한다.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은 자연에 의존하며, 탄소 제거, 온도 조절 및 대기 정화 등 자연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핵심 파트너 및 모든 단위의 정부에 의해 모든 부문에서 행동을 추진하되, 세계적 변화를 위해 공동의 지역 노력을 이행한다. 정책, 행동, 투자 등 우리 노력의 합은 이 도시의 시대에 인류가 요구하는 세계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품격 있는 생활 방식에 대한 새롭게 공유된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한 행동 변화 캠페인과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이는 지구의 요구와 영역을 존중하고, 굳건히 자리 잡은 불평등을 해결하며, 구조적 빈곤의 사슬을 끊고 지구 및 모든 유지해야 할 생명을 극심한 실로 파괴된 상태로 몰아간 지배적인 세계 질서의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 자체를 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10년의 바탕에 둔다.

번역: 이클레이 한국사무소(2021)

24

3) SDGs와 ESG 경영의 확산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25

3) SDGs와 ESG 경영의 확산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26

3) SDGs와 ESG 경영의 확산: 아시아 현황(일본)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구분	주요 동향
제도적 측면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화 등 ESG 관련 규제 강화
투자	연기금: 글로벌 연기금의 ESG 투자원칙에 따른 책임투자가 보편화
	자산운용사: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에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를 이행
신용평가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ESG 평가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평가기관: 기업들의 ESG 대응과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민간 차원의 평가 기관이 급증하며, 특히 공급망 관련 ESG 평가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민간	(공공) UN을 중심으로 ESG 분야 원칙, 목표 등을 제시 (민간)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산업 특성을 감안한 이니셔티브 조성하여 ESG 적극 대응
	환경, 책임경영 이니셔티브도 확대 추세

출처: K-ESG 가이드라인(관계부처합동 2021: 8)

> 일본

'기업 행동 헌장'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접근)
 - 혁신을 통해서 사회에 유용하고, 안전한 상품·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 (공정한 사업관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및 적절한 거래, 책임 있는 조달을 실시한다. 또, 정치, 행정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한다.
- (공정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 대화)
 - 기업정보를 적극적, 효과적, 공정하게 개시하여 기업을 둘러싼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건설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을 도모한다.
- (인권의 존중)
 -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실시한다.
- (소비자·고객에 대해서, 상품·서비스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해, 만족과 신뢰를 획득한다.)
 - (근로법상의 개입, 직장환경의 조성)
 - 건강과 안전을 배려한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을 정비한다.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인류 공통의 과제이며,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 요건으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 (사회장가와 발전에 대한 공헌)
 - 좋은 기업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가하고, 그 발전에 공헌한다.
 - (인기인재의 육성)
 - 인재 양성에 기업 활동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세력의 행동이나 태도,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조직적인 위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경영 최고 경영자의 역할과 본 헌장의 철저화)
 - 최고 경영자는 본 헌장의 정신 실현이 스스로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경영에 있어 시로 실행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내, 그룹 기업에 걸쳐서 주지시킨다. 아울러 supply-chain에도 본 헌장의 정신에 근거하는 행동을 재촉한다. 또한 본 헌장의 정신을 조달로부터 산하를 일괄하는 사내와 방생했을 때에는 최고 경영자가 솔선하여 문제해결, 원인규명, 재발방지 등에 힘쓰고 그 책임을 다한다.
- *본헌: 이창언

일본 경단연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기업의 대응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Society 5.0' 실현을 통한 SDGs의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회원사의 행동 원칙인 '기업 행동 헌장'을 2017년 11월에 개정하였다.

그리고 경단연은 SDGs에 이바지하는 이노베이션 사례집 'Innovation for SDGs'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행동 헌장'은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하에서 사회에 유익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과 자용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다.

이를 위해 기업은, 국내에서 다음의 10개의 원칙에 근거해, 관계 법령, 국제 규칙 및 그 정신을 준수하면서,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27

3) SDGs와 ESG 경영의 확산: 아시아 현황(중국)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중국

I UNDP 와 중국 기업이 협력하여 2020 년 < 중국 SDGs 기업실천조사보고서>中国企业可持续发展目标实践调研报告>를 발간

이 보고서는 중국 기업의 현황과 미래, SDGs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그것은 중국 기업이 SDG에 참여하는 방식, 중점 분야, 미래 트렌드,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의 새로운 위기 대응 방식을 기업 리더들에게 제공

I "중국 기업의 90% 가까이가 SDGs를 이해한다."

첫째, 건강복지(SDG3)가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의료건강장, 기초의약품 제공, 양질의 백신의 신속개발은 인민 안티에이징의 관건이자 민생의 장기적 보장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둘째,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SDG9)에 관한 관심이 5년 만에 급증했다. 제품 혁신,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최근 수년간 산업계의 주목을 받아온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은 산업혁신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다. 셋째, SDGs경영을 기업발전 전략에 전면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대부분의 기업이 의식하고 있다.

*번역: 이창언

> ESG 경영에 참고할 사항 : 중국 보고서의 권고 사항

첫째, 양기목표 설정이다.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관련된 SDGs를 정리, 확인, 통합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략의 회사 내 보급이다. 중국 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관리위원회 설치, TF 설치, 부처 간 협력체 구축 등 내부의 명확한 관리 책임을 포함한 이사회 및 고위 관리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SDGs 이해와 실천, 달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파악하고, 단계적 향상의 설치이다. 이를 통해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업무 실시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고, 최적화를 위한 모니터링·평가보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실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그것은 첫째, 빠른 속도로 의사 결정 능력, 미래에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이다. 또한, 기업 구성원들의 성원적 능력, 아울러 다양한 경영방법, 조직운영의 가파른 대응 능력의 강화이다. 시나리오별 위험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재해, 극한 날씨, 정책 변화 등을 식별하고, 리스크 사태로 인한 경영 중지, 근무 지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속적 경영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차원에서 기업의 성장점을 발굴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사회 관리와 공공 서비스 발전에 있어서 단점을 드러냈다. 의료지원, 배식 문제 등은 단순히 정부 힘이나 관련 비정부기구와 힘만으로는 단기적으로 극복의 단초를 열 수 없다. 따라서 위기상황을 오히려 기업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작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 관련 업체들은 공공서비스, 사회관리, 환경보호 과정에서 과제와 도전점 발굴하고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기업인사력 운영을 온라인 지도 등의 솔루션(인프라)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업무 결실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인문학을 수용한 기업문화 강화, 노동자 조건의 개선은 업무 분장과 배려는 기업에 강하게 기여한다. 조직의 소속감, 예를 들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자녀가 있는 종업원의 평형근로와 생활 양면의 배치를 용이하게 하고, 중대한 중증위생 사건에 대한 종업원의 자기 방제관리와 의사 선도를 적시에 지원하고, 종업원의 심리적 소용과 원조의 중점을 둬야 한다. 넷째,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대외적으로 통찰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소비를 포함한다.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한 기업 경영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해야한다.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 경영력을 구축하거나 강화해 기업 소비층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상품 채널을 만드는 작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中国国际贸易联合开发计划, 2020; 번역: 이창언).



28

3) SDGs와 ESG 경영의 확산: 아시아 현황(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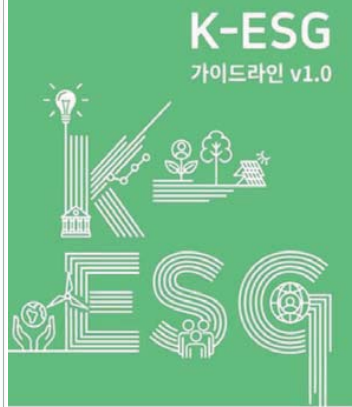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한국

한국은 ESG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의 정보 공개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기업과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고, 환경(E), 사회(S)와 거버넌스(G) 분야의 정책이 큰 틀에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K-

사회적 가치연구원(CSE)은 국내 8대 ESG 동향을 정리하여 제시
8대 ESG 동향은

1. 금융위원회 ESG 정보공개 의무화,
2. ESG 세권 발행 활성화,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기 시행,
4. 2050년 탄소중립 선언,
5. 금융권 탈탄소 선언,
6. 환경부 K핵소노미 지정,
7. 여성이사 확대제,
8. 스톡엑스드립 코드 개정



관계부처 합동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1일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기업과 평가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K-ESG 가이드라인 구성과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주요 항목	주요 항목
정보공개(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검증	ESG 정보공시 범위 원부자재 사용량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용수 사용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경영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Scope2) 에너지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자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자발적 이직률 경로의 자유 보장 장애인 고용률 인권정책 수립 협력사 ESG 지원 구성원 봉사 참여 사회 법규제 위반	신규 채용 교육훈련비 여성 구성원 비율 안전 리스크 평가 인권보장 추진체계 협력사 ESG 협력사항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정규직 비율 복리후생비 여성 급여 비율(평균임액 대비)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경영 전략적 사회공헌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민간 상설 이사회 특별다양성 사회 이사 출석률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배당정책 및 이행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인)	사회이사 비율 사회이사 전문성 이사회(사회) 위원회 주주총회 집중임의회 개최 윤리규범 위반률 공시	대표이사(사회) 임명/보리 전체 이사 출석률 이사회(사회) 처리 집중/간헐적 투표제 내부 감사부서 설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총 61개 전담항목

29

4) 대학평가의 변화, 대학 실천 강화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즈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의 대학 영향력 순위(University Impact Rankings) 발표.

세계 대학 평가 :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 대학 영향력 순위'는 대학의 연구실적이나 교육성과, 졸업생 평판도와 같은 전통적인 평가지표에서 벗어나 UN 총회가 2015년 채택한 SDGs에 대한 고등교육 기관의 책무이행 여부를 평가



세계대학 평가기관인 THE가 2019년부터 신설한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연세대가 세계30위로 지난해에 이어 국내1위를 기록했다. 연세대는 전년 대비 17계단이나 상승했다. 이어 세계54위 경북대, 101~200위권 연세대/한양대/전북대 순으로 랭크됐다. (사단)Times Higher Education 홈페이지 참조



30

5) 정부-기업 등의 탄소중립 실행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체계 수립 및 정책실행 본격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명시
- 온실가스 감축, 정비용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등 포함

3월 20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
시행령 안에 담긴 세부체계를 살펴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가우위기 대응’ 대표정책 5가지

주요 사업·제외 등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자예산제도, 기후변화영향평가, 한양지 제해·배반 등을 위한 가우위기적응 대책, 피해 지역·계층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2050 탄소중립 실현

비전·이행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 탄소중립: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으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비전 적응적 감축에 능동적 대응으로

10대과제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도시·국토 지탄소화
- 신(新)유망 산업 육성
- 혁신 생태계 조성
- 순환경제 활성화
- 취약 산업·계층 보호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제도 기반

- 재정: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 R&D: 탄소중립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국제 협력: 녹색의제 주도, 주요국과 연대 강화

자료: 정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

발전 (에너지)

- 화석에너지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산업

- 공공·개인 통행 온실가스 감축
- 공무원 건물·항공·수송·제조업 등 온실가스 감축

건물

- 에너지 효율 높이는 패시브(Passive) 건물과 에너지 생산하는 액티브(Active) 건물 덕면 제로에너지 건물 추구

수송

- 전기·수소 차량과 충전 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 활성화 등 수송 효율 확대

정리·폐기

- 정리·폐기 관련 기술 및 연구 투자 확대

사회의 인식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
- 기후위기 대응 실천 행동 제고

국가별 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순위 (2017년 기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중국	9	러시아
2	미국	10	일본
3	인도	11	대한민국
4	러시아	12	영국
5	일본	13	프랑스

자료: 에너지

31

6)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철학과 지향점을 기본법으로 규정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와 현직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선도 도시들의 시장철학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이창언, 2022).

-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17개 항목별 핵심 정책, 성과 목표지의 제시
 -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 지속위 설치와 위원회 내 청년세대와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 유엔 국가지속가능성 순위 관리, 자발적 지역보고(VLR) 토대 구축
 - 국가, 지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과 운영
 -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체계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와 평가 과정의 투명한 공개
 - ‘SDGs 시범도시’ 선정과 지방 SDGs 달성을 위한 국비 지원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관련 유엔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관련 정부산하기구의 민간 개방, 참여, 지원방안 마련 등
- 이창언(2022)

하지만 법 제정 이후 형식적 정책화, SDGs 위상 등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 이행력 강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대국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을 모색해야 한다.

32

3. SDGs 선진국 사례

33

1. 유럽연합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유엔 사무총장의 후원 아래 2012년에 설립된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서 SDGs 성취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이다. 전 기업적 SDGs 이니셔티브 측면에서 유럽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미디어 및 리서치 회사인 Corporate Knights는 전 세계 8,08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1년 1월에 발표된 이 순위에 따르면 100개 기업 중 거의 절반(46개)이 유럽(북미 33개, 아시아 기업 16개), 상위 10개 기업 중 5개(주 1개), 상위 20개 기업 중 10개가 유럽 기업이 있다.

SDGs에 대한 공공-민간 이니셔티브가 유럽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 유엔이 SDGs를 채택하기 전에도 유럽 국가들이 SDGs와 관련된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세계를 선도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의 이해와 관심이 깊어졌고, SDGs에 기여하는 정책과 SDGs 이행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의 탄생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1950년 유럽평의회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유럽인권협약을 채택한 것은 1950년이 되었다. 1979년 EU 조류 보호 지침이 발효되었고 1980년대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를 요구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컨퍼런스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회의가 유럽에서 열렸다. 1990년대 초,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 도입에 앞장섰다. 19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 조약에 포함됐고, 2001년에는 EU의 첫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시작된 이후 EU의 근본적인 목표였다.

2019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SDGs는 유럽 그린딜을 포함한 위원회의 우선 순위로 통합되었다. 최근에는 ESG 투자와 직접 연계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투자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지속 가능한 투자 활동과 유형을 요약한 EU의 자체 분류 규칙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10월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담긴 녹색 분류법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을 내릴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4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7년에 발효된 비금융 공시 지침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여 모든 대기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비금융 공시 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SDGs 및 그 공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SDGs,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앞서 언급 한 높은 수준의 관심은 기후 행동이 2021년 9월 독일 연방 선거의 초점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2020년 Credit Suisse 조사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스위스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노년기" 및 "실업" 이다. 이것은 또한 그 후 네 번째로 큰 관심사라는 사실에도 반영된다. 출처: 일본 무역진흥기구 <https://www.jetro.go.jp/>

번역 : 이창언

34

1) 유럽연합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위원회의 우선 순위	작동 가능한 SDG
유럽 그린 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국민을 위한 경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유럽의 디지털화 준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유럽의 생활 방식 촉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세계의 강한 유럽	17
유럽 민주주의 증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은 2050년까지 EU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며 EU 경제를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재활동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전환하려는 야심 찬 것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그린 딜을 포지셔닝했으며, 17개의 SDG 중 적어도 12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의 기초가 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성의 달성을 임할 유럽 기후법을 제안했다. 2021년 4월, 유럽연합 이사회(각료회의)는 유럽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두 기관의 공식 승인 후 유럽 기후법이 7월에 발효된다.

유럽 기후법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1990년 수준에 비해 최소 55% 이상 2030년까지 달성함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에 "Fit for 55"라는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DGs의 달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가 EU의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는 "유럽 디지털화 대응"과 "유럽 그린 딜"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에 발표된 "유럽 디지털 전략을 기반으로 EU의 디지털 기술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위한 수치 목표를 규정했다. Digital Compass 2030과 디지털 서비스 법안과 같은 기타 중요한 법안은 SDGs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경제"와 "유럽 민주주의 증진"의 우선 순위와 관련된 SDGs와 관련된 법안을 제안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7년 EU가 채택한 "유럽 사회 권리의 기둥"(평등한 고용 기회, 공정한 노동 조건 및 노동 시장에서의 사회 보장 보장과 같은 유럽 스타일의 사회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20가지 기본 원칙)이 기후 중립성 및 디지털화로 전환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것이며 SDGs 실현을 위한 중요한 틀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데르 레옌(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SDGs의 실현을 향한 "유럽 사회 권리의 기둥"을 홍보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회원국들이 고용, 디지털 기술 및 빈곤과 같은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번역 : 이창언

35

1) 유럽연합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SDGs 실현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정부 전반의" 접근 방식

유럽 집행위원회는 정부가 S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채택했다. 그는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유럽 학기에 SDGs 관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유럽 학기는 2010년 유럽 경제 위기 이후 도입된 회원국의 재정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이다. EU는 매년 각 회원국이 EU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국과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회원국 간의 정책 조정을 개선할 것이다. 매년 유럽 집행위원회는 내년 동안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각 회원국의 경제 상황과 전년도 국가 권고의 이행을 분석하는 국가별 보고서를 발행한다.

. 이 발표에 따라 회원국은 유럽 집행위원회에 건전한 공공 재정 및 주요 목표에 대한 정책을 위한 중기 예산 계획을 설명하는 국가별 개혁 프로그램을 제출할 것이다. 위원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채택한 AGS 우선 순위와 국가별 권장 사항을 개발한다. 회원국들은 국가 권고의 내용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부터 "유럽 사회 권리의 기둥" 채택에 대응하여 유럽 학기는 사회적 권리에 대한 지표로 "사회 점수판"을 설치하고 각 회원국의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정책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회 권리의 관점을 유럽 학기에 통합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폰 데르 레옌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정치 지침에서 SDGs가 유럽 학기에 발표될 것이며 AGS는 2020년부터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의 경제 및 사회 문제 외에도 환경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AGS에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SDGs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가 보고서에 집계하며, 각 회원국은 SDGs의 관점에서 조치를 국가 개혁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럽 학기에 SDGs 관점을 도입하려면 유럽 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회원국도 SDGs를 정책 결정에 통합해야 하며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정책 대화가 장려될 것이므로 EU는 회원국이 시행하는 정책 영역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 SDGs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일본 무역진흥기구(검색: 2022: 08.03)

번역 : 이창언

36

2) 독일의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2021년 3월 10일, 독일 정부는 국가 지속 가능성 전략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승인하고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02년 처음 개발된 이래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2016년부터 유엔 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명시된 17개 목표(SDGs)를 기반으로 한다. 연방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의미 있는 경제와 사회를 가져 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서문에서 국가 지속 가능성 전략과 2030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기후 보호, 순환 경제, 지역 사회 개발, 교통, 식량 및 농업과 같은 주요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토대로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SDG 목표 3(건강과 복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삶, 즉 모든 지속 가능성 목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분명히 부각시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시스템이 미래의 부담을 견딜 수 있도록 공중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독일의 국가지속가능성 전략은 지표를 사용하여 목표의 진행 상황과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성과를 보여준다. 2019년 독일정부는 목표 13의 신속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매년 줄이도록 규정하는 기후 보호법을 통과 시켰다. 또한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에너지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종 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부문에서는 난방과 같은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정부는 주택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교통 문제로 대기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전기 자동차(EV)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 채택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바탕으로 e-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고 2021년 말까지 50,000개의 공공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 개선과 같은 노력이 지연된 분야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2020년 9월 18일에 비료 조례를 통과 시켰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다.

번역 : 이창언

37

3) 스웨덴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북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통합된 지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결정은 북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북유럽 각료 회의에 의해 2020년에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 전체는 "환경 친화적 인 북유럽 지역", "경쟁 북유럽 지역" 및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북유럽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북유럽 각 국은 1. 빈곤 종식, 5. 성평등, 7. 청정에너지, 9. 산업혁신과 인프라 구축 '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SDGs 참여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SDGs의 출발점이다. 그 이후로 국가, 지방 정부 및 기업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출처: 일본 무역진흥기구 <https://www.jetro.go.jp/>)

SDGs 실행 노력은 환경, 성별 및 복지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스웨덴은 스웨덴 글로벌 개발 정책(Swedish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은 "정부의 모든 정책 영역이 SDGs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187개의 행정 기관과 약 60개의 국유 기업이 SDGs 노력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 도시, 유명인, 정치인 및 기타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보 보급에도 주력하고 있다. 스웨덴 전체는 "세계 SDGs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16년 6월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50% 높이고 2040년까지 모든 발전에 재생 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45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순 제로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예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 운송 촉진(예: 전기 도로 시스템 계획 및 환경 친화적 인 차량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이 있다. 또한 따뜻한 계절에 잉여 전기를 저장하고 추운 날씨에 공급하기 위해 가정에 차세대 전력망을 배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45년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2022년 2월 21일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국내 최초). 2030년까지 정부는 새로운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활용 재료의 평균 30% 이상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발표된 조치는 플라스틱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55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조치에는 (1) 기업이 식음료를 판매 할 때 15% 이상의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일회용 음료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2) 사업체가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 및 도시락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번역 : 이창언

38

3) 스웨덴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정부는 또한 성평등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1970년대 초부터 그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여성의 고용률은 72 %로 EU에서 가장 높다. 2021년 11월, 국내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참고 2). 현재 23명의 내각 장관 중 절반 가량(11)이 여성이다. 그 계시물 중에는 노동 및 양성 평등 장관이 있다.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장관을 성별 관계 없이 임명하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장관 중 약 절반이 여성이며 "성 평등 장관"이라는 직책도 있다. 동성 커플을 다루는 주제는 LGBT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리큘럼에 통합되었다.

스톡홀름시에서는 "성 중립성"이라는 기치로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1) 교사는 그들을 "소년"과 "소녀"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며, (2) 사물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지지 않으므로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만들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도 있다. 교육 시스템은 무료이며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스톡홀름시에는 난방 그리드가 있으며 많은 주택에는 난방비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 의료 서비스도 무료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있다.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해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도시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부모 모두 별도로 취할 수 있는 14 개월 유급 보육 휴가도 있다. 그것은 성 평등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시민사회, SDG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스웨덴에는 81 개의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플랫폼 인 Concord Sweden이 있다. 이 조직은 빈곤과 불평등, 공평한 정치, 성 평등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장려한다. 그들은 또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해 일하고 정책 권고안을 작성한다. 또한 플랫폼과 정치인 간의 토론 내용과 정치인과 언론 간의 토론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시에서는 학계, 비즈니스 및 시민 사회가 S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 도시에 따르면 17 명의 회원, 아홉 명의 정치인 및 다양한 분야의 여덟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에 대한 토론이 개최된다.

번역 : 이창언

39

4) 스위스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스위스 헌법 제 73 조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정부는 자연, 특히 재생 능력과 인간 사용 사이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아이디어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가 수립되기 전에도 스위스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다.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관련 주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는 사실은 높은 수준의 대중의 인식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1994 년 알프스 이니셔티브 (National Initiative, Note 1)에서 문제는 북부 및 남부 유럽의 공급망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Gotthard Road Tunnel을 통과하는 너무 많은 트럭 교통량이 문제가 되어 배기 가스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알프스의 본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2년 이후에 표결 예정인 '빙하 이니셔티브'는 지구온난화가 알프스가 만든 독특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 운송을 줄이고 2050년까지 화물 운송량의 100%를 전기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9 년 5 월에 서명이 시작된 후 약 6 개월 만에 113,000 명이 서명했다. 알프스와 빙하와 같은 풍부한 자연이 가까이에 있고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도 중요한 스위스에서는 기후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느껴지고 대중의 인식이 높은 경우가 많다.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크레디트 스위스 여론 조사(2021 년 11 월 발표)에 따르면 "기후 변화" (39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0 %)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다.

유엔 SDGs와 일관되게 국가 전략은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둔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위스의 전략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내각이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SDS)을 처음 채택 한 것은 1997년이였다. 그 이후로 이 전략은 4년마다 검토되었다. 2021년 6월에 업데이트된 지속가능성장전략 2030의 최신 버전은 전략의 이행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스위스가 기후변화를 포함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집중해야 할 다음 세 가지 우선순위 목표를 열거하고 있다. 1.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2. 기후, 에너지 및 생물 다양성, 3. 기회균등과 사회적 결속력 강화이다.

2021년 SDGs 성취도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SDGs 목표 중 "1. 빈곤종식", "3. 건강과 복지" 및 "7. 청정에너지"는 이미 달성되거나 달성될 예정이다. 또한 "9. 산업혁신과 인프라 구축"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지만 적당한 개선 추세가 있다고 평가된다. "12.지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위기 대응", "15. 육상생태계 보호" 및 "17. 파트너십." 중 목표 12를 제외하고 개선 추세가 정체 상태로 평가된다.

번역 : 이창언

40

4) 스위스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각 목표의 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 통계국이 운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MONET 2030"에서 찾을 수 있다. MONET은 유엔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하기 전에 존재했던 시스템이다. 2018년 연방 통계국(Federal Bureau of Statistics)은 의제에 있는 목표와 일치하도록 시스템의 목표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스위스의 2030 의제 성취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의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의 전략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 지방 당국, 시민 단체,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과학 공동체의 업적 노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다. 또한 연방의회가 동시에 발표할 계획인 SDGs에 대한 국가 진전에 관한 보고서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2022년 7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HLPF)에서도 발표된다.

지속가능한 금융 촉진

금융은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경제에서의 존재는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크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 산업은 2020년 스위스 GDP의 9.4%를 차지할 것이다.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OECD 회원국이다. 스위스 국립 은행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의 총 자산은 2019년 3,317,638 백만 스위스 프랑으로 GDP의 약 5 배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는 금융 및 투자의 지속 가능성 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투자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개발은 EU에 맞게 조정된다.

스위스 은행가 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스위스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 금액은 2015년 CHF 141.7 억에서 2020년 CHF 1.5202 조로 10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 주요 금융 도시에서 녹색 금융의 높은 품질(참고 3)을 보여주는 글로벌 그린 금융 지수 버전 7(GGFI7) 2021 판에서 취리히는 세계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제네바는 암스테르담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EU에서는 지속 가능한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분류 규정"(Business Brief Report, April 22, 2021 참조)이 있습니다.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2022년 1월에 발효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이 분류 규칙을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다. 비금융 공시에 대한 EU의 법적 틀인 NFRD(Non-Financial Disclosure Directive)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번역 : 이창언

41

5) 오스트리아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SDG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시민 수준(오스트리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침투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한동안 정치적, 경제적 행동 방침이 아니다. 즉, SDGs에 대한 국가의 노력은 2016년 SDGs 달성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했을 때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 유엔의 2021년 SDGs 진행 보고서에서 오스트리아는 165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행정의 각 단계에서, 연방 차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에 이르기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현된다.

"지속 가능성"을 헌법 원칙으로 만들기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 정상 회의)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그 이후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오스트리아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되었다. 1997년 "오스트리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협의회"는 환경 장관의 지도하에 설립되었다. 또한 2010년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EU의 2006년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기초한 "오스트리아의 지속가능성 전략"에 합의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다음 단계로 2013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속 가능성"을 헌법적 원칙으로 국가 목표로 삼았다. 2015년 SDGs 채택 이후 정부는 2016년 1월 장관급 회의에서 S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했다. SDGs의 시행 기관은 각 사역 및 기관이며, 관련 전략 및 계획에 통합됩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당과 녹색당 집권 연합의 공약에는 모두를 위한 3가지 보전복지와 같은 17개 SDGs와 관련된 대기오염 통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대외 무역 전략, 개발 지원

경제부는 2018년에 대외 무역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SDGs를 시장 개발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매김하고 비즈니스 기회와 국제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스트리아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 및 환경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SDGs를 수출함으로써 오스트리아는 개발 도상국에서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오스트리아 기업들을 SDG 관련 ODA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2018년 외무부가 발표한 개발협력현장의 2019~2021년(2020년 업데이트)에도 "2030년 의제는 중요한 행동방침이다. 정부의 목표는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NDPG의 다섯 가지 우선 순위 항목은 (1) 빈곤 퇴치와 기본 욕구 충족, (2) 지속 가능한 경제 진흥, (3) 환경 보호, (4) 평화와 안보 증진, (5) 포용 사회 및 여성 발전을 위한 지원이다. 이것은 SDG와 일치한다.

번역 : 이창언

42

5) 오스트리아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SDGs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시민들에게 스며든다.

SDGs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시민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위원회(AK)는 매년 "풍요에 관한 백서"를 발행한다. 백서는 통계국의 지속 가능성 지표와 SDGs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지적 만족도에 대한 30개 지표를 제시한다. 결과에 따라 우리는 정부에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0개 지표에는 17개의 SDG 중 12개(교육, 빈곤 퇴치, 성평등 등)가 포함된다.

한편, 기업을 대표하는 연방산업협회의(WKO)도 '2030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원사를 위한 SDGs 교육 및 인식 캠페인부터 저개발국의 협력 프로젝트 지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업이 연맹은 또한 2021년 6월에 발표된 "2025년 중기 산업 전략"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다. 또한 2021년 10월, 지속 가능성을 주요 주제로 하는 "장기 산업 전략"이 발표되었다.

2007년에 설립되어 3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respACT(오스트리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 플랫폼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이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spACT는 매년 CSR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2021년에는 10월 21일에 시행되었으며 주제는 'SDGs를 위한 디지털화'였다. respACT는 또한 기업이 단체 오스트리아 스타트업과 함께 Circle 17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성 신생 기업을 대기업 및 시민 사회 이해 관계자와 매칭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에 설립된 SDGs Watch Austria는 SDGs 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 큰 비영리 단체로, 자선단체, 환경 및 개발 단체를 포함하여 2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난다. 동시에, 우리는 교육 활동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회원들은 또한 교육, 경제, 평화, 지역 이니셔티브 및 미디어를 포함한 SDGs의 모든 측면을 주제별로 다룰 것입니다. 또한 2018 년과 2020 년에는 매년 "SDGs 포럼"이 개최됩니다. 공공, 민간 및 학술 부문의 참가자들은 전년도에의 진전과 미래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혁신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SDGs 대화 포럼'이 열렸다.

번역 : 이창언

43

5) 오스트리아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주 및 지방 차원의 이니셔티브

오스트리아는 아홉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개 주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티롤 국가는 헌법에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5월, "미래 잠재력을 지닌 삶"이라는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주는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경제로 전환할 것임을 강조한다 비엔나시의 "스마트 시티 프레임 워크 전략 2019 ~ 2050" 와 잘츠부르크 주의 "기후 및 에너지 전략 2050"은 포괄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때때로 "지속 가능성 코디네이터 조정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주와 연맹은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을 교환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오스트리아 지방자치단체 연맹과 오스트리아도시연맹은 2019년 4월 기후행동부, 환경, 에너지, 교통부, 혁신기술부와 공동으로 '2030 의제 사례'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육 기관이 SDGs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시 차원에서 시행 될 수 있는 조치의 사례를 제공한다.

진행 상황이 모니터링 된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2030 의제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79개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상황을 요약한 보고서도 2020 11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SDGs의 169 개 목표 중 107 개가 목표였으며 그 중 27 개는 "달성" 또는 "거의 달성"(예: "식수 공급",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본 의료" 등)되었다. 16 가지 목표는 데이터 부족(예: "음식을 쓰레기 감소" 및 "생물 다양성")으로 인해 평가 될 수 없었. 79개의 지속가능성 지표 중 61개는 개선되었고 18개는 악화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17 개의 SDG 중 7개 (3, 8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7개 목표에 약간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인 영향 (환경 및 기후 보호)을 미쳤으며 나머지 3 개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했다.

탁월한 기업 이니셔티브 인정

2013년부터 농림부와 임업(현재 기후 행동, 환경, 에너지, 교통, 혁신 및 기술부)과 각 주의 지속 가능성 코디네이터는 매년 "지속 가능성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1) 언론, 일반 대중 및 정부 간의 지역 및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과 시민의 활동을 선보이는 것이다. 2021년에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300개 이상의 행사가 열렸다. 기후 행동, 환경, 에너지, 교통, 혁신 및 기술부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프로젝트 중 10 개를 Action Days High Lights로 선정했다. CSR에 중사하는 기업에 상을 수여하는 시스템도 있다. 이것의 한 가지 예는 Trigos Prize입니다. 이 상은 2004년에 설립되었다. 2018년부터 이 상은 SDGs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특별히 평가되고 2021년에는 150개 후보 기업 중 여섯 개의 테고리마다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번역 : 이창언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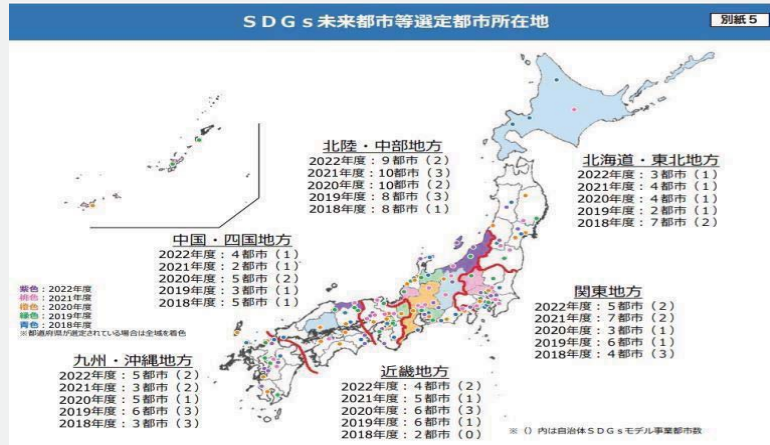
6) 일본 정부의 추진 사례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은 'SDGs 미래도시' 선정과 '자치단체 SDGs 모델사업' 선정을 시작했다(地方創生推進事務局HP). 이를 통해 매년 약 30 여 개 내외의 도시가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도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도시는 10개 지 자체가 SDGs 모델사업으로 선정된다.

이를 통해 SDGs 달성을 실천하는 도도부현·시구정촌의 비율은 2020년도 목표의 30%에서 2024년까지 60%로 끌어 올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의 지자체 SDGs 노력(비율)은 13%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창생 SDGs 시책을 추진한 것이다(출처: 이창연(2020)).

올해 5월 20일 내각본부 지역활성화추진사무소는 31개 시(31개 지자체)를 2021회계연도 'SDGs 미래도시'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탁월한 노력을 제언했다. 또한 31개 도시에서 실시하는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10개 주요 프로젝트가 '지방자치단체 SDGs 모델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신청도시는 53개 지자체였다.

2022년 'SDGs 미래도시' 선정된 30개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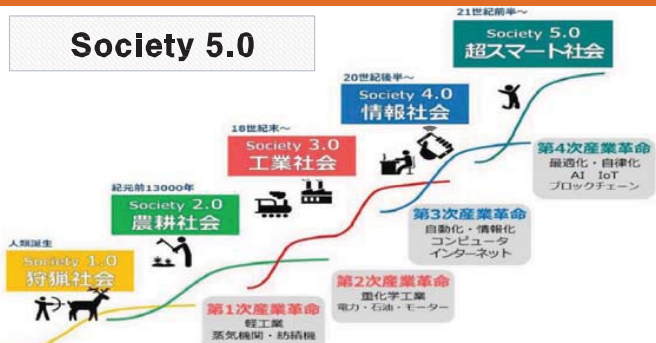
SDG 미래도시는 2018년에는 29개 도시, 2019회계연도 31개, 2020년 33개 도시, 2021년에는 31개, 2022년에는 30개 도시가 선정됨.

47

6) 일본 정부의 추진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Society 5.0



'SDGs 실시지침'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일본형 SDGs 모델을 추진하는 'SDGs 액션플랜 2020'은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① SDGs와 함께하는 Society 5.0의 추진, ② SDGs를 원동력으로 하는 지역 창생, 강인하고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 ③ SDGs를 통한 차세대·여성의 역량강화(田中治彦, 2019: 19).

Society 5.0은 사이버 공간(가상 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실 공간)을 고도로 융합 시킨 시스템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양립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Society)를 말한다. Society 5.0은 수렵 사회(Society 1.0), 농경 사회(Society 2.0), 산업 사회(Society 3.0), 정보 사회(Society 4.0)에 이은 새로운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일본이 지향해야 미래 사회의 모습으로 처음 제창되었다. Society 5.0에서 제공하는 사회는 사물인터넷(IoT)에서 모든 사람과 물건이 이어져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저출산 고령화, 지방의 과소화, 빈부 격차 등의 문제를 극복한다.

48

2) 정부, 지방정부의 전략 : 일본 정부의 추진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Society 5.0

경제발전

에너지 수요 증가
식량의 수요 증가
수명 연장, 고령화
국제적인 경쟁의 격화
부의 집중과 지역 간의 불평등

사회적 문제해결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식량의 증산이나 손실 삭감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 억제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진
부의 재배분, 지역 간의 격차 시정

IoT,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모든 산업과 사회생활에 접목하여
차별 없이 다양한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하는 사물 및 서비스 제공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해결 양립

SDGs 액션 플랜 2020'의 첫 번째 기둥인 ① SDGs와 함께하는 Society 5.0의 핵심 키워드는 '비즈니스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로드맵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SDGs)'은 SDGs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과학기술 혁신의 국내외 지원 관련 로드맵을 보여준다.

'STI for SDGs'는 중소기업이 ESG 투자나 SDGs 이행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지역·금융 기관과의 제휴 강화를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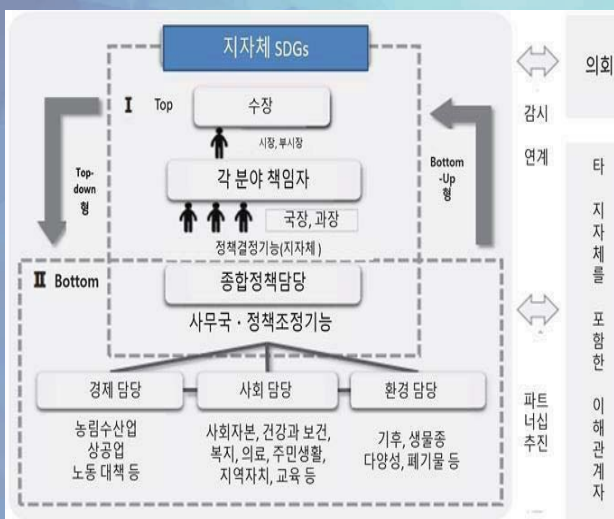
일례로 SDGs 추진본부가 마련한 SDGs 경영 가이드, TCFD(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 포스)에 관한 지침 등 각 기업에 SDGs 대처 촉진, ESG(사회적 책임 투자)를 통해 Society 5.0 실현을 도모한다.

그리고 SDGs의 침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SDGs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SDGs 추진과 ESG 투자 유치는 사회 문제의 해결과 경제성장이 양립하는 미래 사회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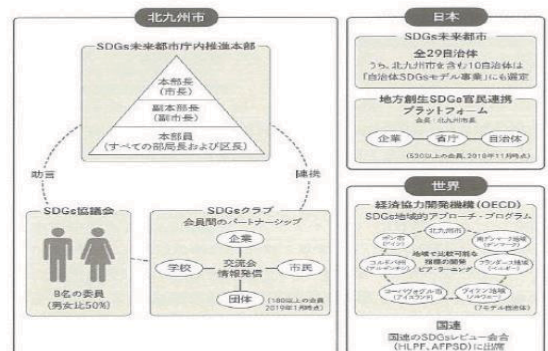
49

6) 일본 정부의 추진 사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참고 : SDGs를 실현하기 위한 기타큐슈시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SDGs 미래도시, 지자체 SDGs 모델사업으로 선정된 기타큐슈시는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불운 구축하고 있다. 기타큐슈시는 ① 시 행정 내부의 'SDGs 미래도시 시장 내 추진본부', ②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SDGs 협의회(3명의 위원)', ③ 기업, 학교, 단체, 시민 등이 등록제로 참가하는 'SDGs 클럽(180명 이상)'의 회원, 2019년 1월 현재' 등 3개의 그룹이 SDGs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큐슈시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50

정부의 과제: SDGs 추진 사례(일본) 창조적 적용

나가노현 지원제도- 나가노현 SDGs 진흥기업 등록제도, 경영가치개선 지원사업

나가노현은 2018년 6월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되었다. 나가노 현은 다양한 지역의 개성을 활용하는 "독립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나가노 현은 SDGs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비즈니스 관점에서 SDG를 홍보하고 있다. 나가노현 SDGs 진흥기업 등록제도는 기업들이 SDGs의 17개 목표와 자체 사업의 관계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 금융기관, 대학 등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사회, 경제의 세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SDGs 활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회사, 기업, 조직, 단독 소유주이며, 등록은 현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3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

1. 나가노현에 본사나 지사가 있어야 한다.
2. 환경, 사회 및 경제의 세 가지 측면 모두 sdgs 이니셔티브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3. SDG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또는 다루어 질 특정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

<예택>

현은 외부적으로 등록 된 회사를 홍보해 준다.

나가노 현 SDGs 프로모션 회사 등록 시스템 및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공식 등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나가노현은 지속가능경영에 중사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SDGs 중심의 경영가치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서 SDGs 영업 채널 개발 모델 제작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다. SDG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이나 업체에 필요에 따라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보조금 대상경비는 최대 100만 엔이며, 보조금비율은 총당비용의 절반 이내이며, 다른 보조금사업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보조금이 적용되는 비용은 명예, 여행경비, PR팸플렛 등 통신비, 위탁비, 회의실 참여비, 원자재 비용 등 소모품입니다. 2019년에는 5개사가 선정되었고, 2020년 2월 12일에 결과보고회의를 열어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했다.

오키나와 현 지원 시스템 | 오키나와 SDGs 파트너 : 2019년 11월 29일, 오키나와현 SDGs 추진정책을 수립하고 SDGs 홍보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SDGs를 홍보하는 기업과 조직을 한데 모은 오카키와 SDGs파트너를 설립했다.

51

4. 종합: 생각 나누기

52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4. SDGs 이행실천시 얻는 효과

➤ Incentive

SDGs를 채택하거나 현지화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인센티브(激励)	효과(效果)	방법(方法)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공평한 이익의 배분	상향식의 개발 계획, 맥락 기반의 이행 전략
어느 곳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도시-농촌 모든 인간 정주에 적용	지역의 독특한 맥락, 자원, 도전, 기회를 고려한 기획과 실행
자원에 대한 접근 (Resource access)	파트너 십, 자원, 기술적 지원 제고	개발 계획에 SDGs 세부목표 통합
지방 지도자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새로운 경제적 기회 촉발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체화

SDSN, 2016, 이창언 재구성

출처 :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선인

53

4. SDGs 채택시 인센티브

정부와 지자체의 SDGs 이행실천의 긍정적 효과

1. 국정(시정)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2. 주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높인다.
3. 협치를 통해 공공경영의 혁신을 촉진하고, 부패방지 및 퇴치를 촉진해서 정부지배구조를 개선한다.
4. 탄소중립 확산, 환경오염의 감소, 천연자원의 보존,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발을 향상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이는 기후 작용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한다.
5. 새로운 형태의 경제·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이창언, 2020b: 134).

지자체의 SDGs 추진 시스템과 수단(도구)은 일상적 홍보·교육, SDGs 모델 개발, 국제적 스포츠와 박람회와 연계한 SDGs 추진,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기업의 강점을 살린 국내외 협력(민관산학)사업 추진, SDGs 추진 기구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과 네트워크 등의 연계, SDGs 달성에 동참하는 기업과 대학, 기관의 지원, SDGs 모니터링(유엔에서 SDG 지표의 측정 협력, SDG 글로벌 지표의 정비 등) 등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SDGs를 국정과 시정 전략으로 삼고 구체적인 시스템과 수단 통해 체계적인 실행을 전개할 때 SDGs는 달성될 수 있다(이창언, 2020e: 272).

4. SDGs 이행실천시 얻는 효과

SDGs-ESG 제각자 기업이 얻는 이익

미래 비즈니스 기회 파악	SDGs는 전 세계 공공 및 민간투자의 흐름을 SDGs가 제시하는 도전과제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SDGs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변화를 가져올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시한다.
기업 지속가능성의 가치 강화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동인들은 이미 잘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외부 효과들이 점점 더 내재화되고 있다. SDGs는 기업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더 지속가능한 대안들로 전환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 및 정책 발전과의 속도 유지	SDGs는 국제, 국내, 지역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기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책 방향도 반영한다. 기업의 우선순위와 SDGs를 통합하는 기업은 소비자, 직원,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늘어나는 법적, 평판적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	기업은 실패하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SDGs 달성을 위한 투자는 기업 성공의 주요 요소인 원칙 기반의 시장, 투명한 금융시스템, 부패 없는 원활한 제도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 언어와 공유된 목적 활용	SDGs는 기업의 영향 및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더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행동과 언어의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들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GRI·UNGC·WBCSD(2015: 4)

SDGs 나침반의 5단계



출처: GRI·UNGC·WBCSD(2015: 5)⁹⁾

출처: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선인

55

4. SDGs 이행실천시 얻는 효과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대학이 SDGs, ESG, 실천시 얻는 효과



SDGs, ESG는 대학의 ▶ 교육, ▶ 연구, ▶ 대학 내부의 거버넌스 문화와 윤리 확산과 운영의 혁신, ▶ 사회적 공헌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SDGs, ESG, ESD(지속가능발전교육)는 학제간 및 학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대학과 사회의 혁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국가-지역 차원의 정책 제언과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 고유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업,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부문적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ESG,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통해 대학 교양, 전공 교육의 다양화,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 실현,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역동적인 학생들이 주축이 된 SDG, 탄소중립 실천과 대학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고질적인 낮고 관료적인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SDG-ESG와 연계된 거버넌스 및 운영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의 혁신활동은 대학 보고서에 통합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공헌을 위한 다부문적 참여와 대화, 그리고 행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출처: 이창언(2021)

56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4-1. <토론>SDGs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과제

SDGs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제-지역-국가-지방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새로운 정책, 규제, 관행, 생활양식과 습관, 사회, 경제, 환경적 조건의 개선, 사회문제의 우선순위 선정과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SDGs의 목표달성을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제약은? 이를 극복하는 가장 유력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57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4-1. <토론>SDGs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과제

지구촌-국가-지역의 **SDGs** 이행 체계 구축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전략, 도시 파트너십 협의체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 협력, 제도화의 요소들과 결합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처: 이창언-오수길(2013)

1. **제도**의 개선
2. **의지**의 강화
3. **조직**의 혁신
4. **목표**의 확장
5. **방법**의 전환
6. **재정**의 확보
7. **정책**의 연계
8. **참여**와 실천
9. **평가**와 환류

출처: 김병완(2016)

58

4-1. <토론>SDGs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과제

지자체 SDGs 추진모델 평가기준표

단계 구분		단계별 과제
1단계	SDGs 이해	① 지자체 담당 공직자-지자체 내 공직자, 지방의원의 이해의 확대 ② 지역 사업자-기관과 단체의 이해 확산 ③ 전 지자체 차원의 이해 확대 ④ 주민 이해의 확산 ⑤ 지자체 업무에 활용
2단계	대응 체계	① 소관 업무의 일부로 추진 ② 횡단조직 등을 설치 ③ 지역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추진 ④ 전담부서 설치 ⑤ 지역 이해관계자와 추진체계 정비
3단계	목표와 지표의 설정	① 선언 및 비전 설정 ② 17개 목표의 대응 관계 정리 ③ 169 세부목표·230여 개 지표와 대응 관계 정리 ④ 지자체 현지 지표 리스트 활용 ⑤ 독자 지역 지표 설정
4단계	행동계획	① 종합전략·종합계획 등에 언급하는 ② 종합계획 중 17개 목표와의 관계를 정리 ③ 독자적인 액션 프로그램 수립 및 예정 ④ 시범사업 추진 ⑤ SDGs의 관점에서 노력 체크 등의 분석을 실시
5단계	후속 작업	① 평가·후속 조치 구조·체제를 검토 ② 지표를 이용한 달성 상황 내부 평가 ③ 외부 의견 반영, 외부 평가 ④ 지속적 관리를 위한 구조·시스템 구축 ⑤ 후속 조치

출처: 公益財団法人 東京市町村自治調査会(2021: 109), 이창언 번역 재구성

이창언 icaha21@naver.com

4-1. <토론>SDGs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과제

- ▶ SDGs 매니페스토 실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 공감대 확산(공약화),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강화,
- ▶ 행정 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전담부서 설치, 또는 기획총괄부서 담당)에 대한 공감대 확산,
- ▶ 지속협과 지속위원회의 위상 설정, 운영 혁신과 협동의 강화,
- ▶ 지방 SDG 주류화를 위한 예산 확보,
- ▶ 지역 차원의 속의 공론제도 정착과 활성화,
- ▶ 광역과 기초 지자체 SDGs 추진체계 구축,
- ▶ VLR(자발적 지역보고)의 정착과 SDGs 도시국제 교류의 토대 구축,
- ▶ 국제협력기구 민간 개방과 지원방안 마련,
- ▶ ESD-ESDGs 교육의 활성화와 지방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연구소 설치,
- ▶ 국민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 ▶ 지방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실현,
- ▶ 지역차원에서 노동조합, 농민, 도시빈민, 청년과 여성의 SDGs 이행·실천 과정 참여 확대(SDGs 각계 각층 선언운동)

이창언(2022)

감사합니다.

61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KASD)
2022 하계학술대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과제"



대학의 지속가능한 인재를 위한 혁신사례



청운대학교 박 현 옥(청운대학교)
2022. 08. 12

목차

1. 우리랭킹 무엇인가?.....	3
2. 소셜 서비스 LiFE 컬리지 & 열린사회서비스대학	19
3. SDGs와 소셜라이프컬리지	33
<부록>사회서비스대학 개설학과.....	34

1.우리랭킹 무엇인가?

WURI RANKING 2022

- **The New Normal** • The Pandemic/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New Challenges** • Need to redefine the value of higher education
- Need to be agile in cross-learning and innovation

👉 미네르바 대학은 전세계 주요 100대 대학의 혁신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WURI' (The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Ranking 2022)랭킹에서 애리조나 주립대,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 하버드대 등 쟁쟁한 명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https://snaptime.edaily.co.kr/>

한국 국제경쟁력연구원이 주관한 WURI 랭킹은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한자대학동맹, 한국 산업정책연구원,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산하의 유엔훈련조사연구소, 스위스 루가노 소재 프랭클린 대학 테일러 연구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

출처 www.wuri.world

3

지금, 세상은 새로운 규범을 필요로 하고 있다.

The New Normal

COVID-19의 출현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직업군(AI, Big Data, Cloud Service, Digital Technology)와 저임금.....
2030이 맞이하는 세상은 기존과 다른 사회 생태계를 직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재를 위한 전통적 고등교육에 대한 가치를 재고할 대학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www.wuri.world

4

출처 www.wuri.world



대형 회사(Big Tech Company)들이 바뀌고 있다...

학위가 없는 사람을 고용할 새로운 방법이?

Google이나 Apple과 같은 회사는 특정 직책에 대해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Google은 최근 Google 커리어 인증서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선택 과정을 출시.....

채용 공고는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자격으로 먼저 나열하고 때로는 '또는 이와 동등한 실무 경험'....

5

2022 세계대학순위

이제까지의 대학평가모델은

Problems with Existing Models for University Evaluation



이제까지의 평가모델(Existing Models)

-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Times Higher Education, UK)
 - 교육학습여건(30), 연구(30), 연구영향력(30), 국제화(7,5)등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Quacquarelli Symonds, UK)
 - 학교평가(40), 논문피인수(20), 기업평판(10) 등
-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 Shanghai Ranking Consultancy, China)
- US News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 (US News, USA)
- World's Most Innovative Universities (Reuters, UK)

순위	대학교	국가
1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
2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미국
	하버드 대학교	미국
4	스탠퍼드 대학교	미국
5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교	미국
7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
8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캠퍼스	미국
9	예일 대학교	미국
10	시카고 대학교	미국
11	컬럼비아 대학교	미국
12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영국
13	존스 홉킨스 대학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미국
15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스위스

순위	대학교	국가
1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미국
2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
3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
	스탠퍼드 대학교	미국
5	하버드 대학교	미국
6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미국
7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영국
8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영국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스위스
10	시카고 대학교	미국
11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싱가포르
12	난양 공과대학교	싱가포르
13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미국
14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	스위스
	예일 대학교	미국

<https://inforhunter.tistory.com/>

공통되는 고려사항(Common Problems)

학문적 성과(Academic Tradition) vs. 실제영향력(Real Impacts on the World)

출처 www.wuri.world

6

새로운 접근:
세상(사회)
실제 영향력

A New
Approach:
Real Impacts
on the World

www.wuri.world

- 01. 산업적용(Industrial applications)
 - ⇨ 연구논문이나 강의형태의 전형적인 방식(traditional way) 보다는
- 02. 창의적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가치
(Entrepreneurial spirit and value-creating startups)
 - ⇨ 창업하는 기업의 숫자적 의미(number)보다는
- 03.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Ethical value and social responsibility)
 - ⇨ 물질적 성공(material success)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7

새로운 접근:
세상(사회)
실제 영향력

A New
Approach:
Real Impacts
on the World

www.wuri.world

- 04. 학생교류 및 개방성
(Student mobility and openness)
 - ⇨ 아직 독립적으로 폐쇄적인 시스템(closed system)과는 다른....
- 05.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 ⇨ 단지 생존(just to survive)을 위한 그 무엇보다는 다른
- 06.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진보
(Progress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s) 그리고 디지털기술(Digital Technology)

8

평가기준(The Criteria for Evaluation)

	혁신성 (Innovativeness)	실행력 (Implementability)	영향력/확산 (Impact)
산업적용(Industrial Application)	내용 과정	비용 효과	범위 강도
기업가정신과 가치 (Entrepreneurial Spirit & value)			
윤리적 가치(Ethical Value)			
학생 교류 및 개방성 (Student Mobility & Openness)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보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ent •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t • Benef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 Intensity

www.wuri.world

9

평가과정(The Process of Evaluation)

1단계 평가 Phase 1: Evaluation

- **Date:** By May 2, 2022
- 참가팀 소속의 기관장
- Presidents or the school's evaluation team designated by the president

2단계 판정 Phase 2: Judgment

- **Date:** By May 23, 2022
- 우리평가팀의 대표단
- Representatives of the university leagues and the members of the WURI Evaluation Board

3단계 최종리뷰 Phase 3: Final Review

- **Date:** By June 3, 2022
- WURI Evaluation Board checked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s, aggregat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judges, and finalized the entries of the WURI Ranking 2022

www.wuri.world

10

The WURI Ranking 2022

온라인 컨퍼런스 online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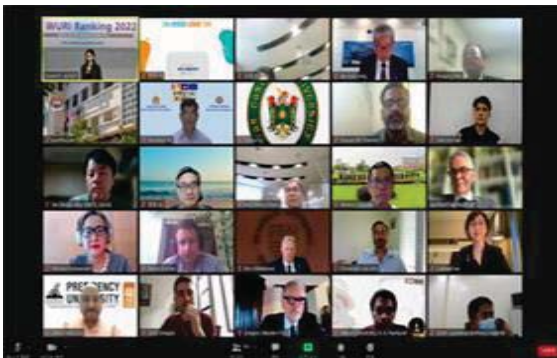
- 6개 영역별 우수 50(Top 50 in each of the six categories)
- 글로벌 100대 기관 및 사례(Global Top 100)

(top100@wuri.world, www.wuri.world)

우리 웹사이트 www.wuri.world

www.wuri.world

11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2/114054928/1>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204>
조선예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1/2021061101375.html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468>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056>

2022 WURI Ranking

2022년 6월 13일 결과 발표

(4) 학생의 이동성과 개방성 부문에서
'소셜서비스 LiFE 컬리지' 17위로 선정

*WURI랭킹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사례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기관

12

WURI 2022: Top 50 (Student Mobility and Openness)

Rank	Name	Region	Rank	Name	Region
1	Boston University	USA	26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UIBE)	China
2	Abdullah Gul University	Türkiye	27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3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28	Monash University	Australia
4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Rep.	29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Japan
5	Peking University	China	30	Charles Darwin University	Australia
6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31	University of Denver	USA
7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32	Tarlac Agricultural University (TAU)	Philippines
8	Sussex University	United Kingdom	33	Morgan State University	USA
9	Flinders University	Australia	34	Millsaps College	USA
10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Rep.	35	University of Vlora "Ismail Qemali"	Albania
11	Northern Arizona University	USA	36	Dalian Neusoft University of Information (DNUI)	China
12	University of Bonn	Germany	37	National Chi Nan University	Taiwan, China
13	Trinity College	USA	38	La Trobe University	Australia
14	RWTH Aachen University	Germany	39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15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40	University of Kuala Lumpur	Malaysia
16	Kansai University	Japan	41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17	Chungwoon University	Korea, Rep.	42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Rep.
18	Florida Gulf Coast University	USA	43	Centrum PUCP Business School	Peru
19	Sarah Lawrence College	USA	44	FEU Institute of Technology (FEU Tech)	Philippines
20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Rep.	45	Seoul Institute of the Arts	Korea, Rep.
21	Badr University in Cairo (BUC)	Egypt	46	Soran University	Iraq
22	Aix-Marseille University	France	47	Tra Vinh University	Vietnam
23	Hamburger University	USA	48	Cebu Technological University	Philippines
24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Korea, Rep.	49	St. Paul University Philippines	Philippines
25	Telkom University	Indonesia	50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www.wuri.world

13

WURI 2022: Global Top 100 Innovative Universities (1 - 50) (top100@wuri.world)

Rank	Name	Region	Rank	Name	Region
1	Minerva University	USA	26	University of Chicago	USA
2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27	Columbia University	USA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USA	28	Singularity University	USA
4	Stanford University	USA	29	Northern Arizona University	USA
5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30	Florida State University	USA
6	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etherlands	31	Peking University	China
7	Aalto University	Finland	32	University of Twente	Netherlands
8	Ecole 42	France	33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Switzerland
9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34	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KGSB)	China
10	Harvard University	USA	35	Ohio State University	USA
1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36	Flinders University	Australia
12	Princeton University	USA	37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13	Boston University	USA	38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Rep.
14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39	Sussex University	United Kingdom
15	Tsinghua University	China	40	University College Dublin	Ireland
16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Rep.	41	Yale University	USA
17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42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18	Simon Fraser University (SFU)	Canada	43	Kyoto University	Japan
19	University of Cambridge	United Kingdom	44	Trinity College	USA
20	Duke University	USA	45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21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Rep.	46	Sarah Lawrence College	USA
22	Olin College of Engineering	USA	47	Florida Gulf Coast University	USA
23	Abdullah Gul University	Türkiye	48	University of Bonn	Germany
24	Deggendorf Institute of Technology (DIT)	Germany	49	Monash University	Australia
25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USA	50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stralia

www.wuri.world

14

WURI 2022: **Global Top 100** Innovative Universities (51 - 100) (top100@wuri.world)

Rank	Name	Region	Rank	Name	Region
51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76	Beijing Technology and Business University	China
52	Polytechnic Institute of Bragança	Portugal	77	Belgorod State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Russia
53	University of Tokyo	Japan	78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USA
54	Indira Gandhi Delhi Technical University for Women	India	79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ong Kong SAR
55	University of Gothenburg	Sweden	80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Korea, Rep.
56	Dublin City University	Ireland	81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57	Tampere University	Finland	82	Hanbat National University	Korea, Rep.
58	Badr University in Cairo (BUC)	Egypt	83	King Mongkut's Institute of Technology Ladkrabang Business School	Thailand
59	Temple University	USA	84	Queen's University	Canada
60	Burapha University	Thailand	85	Lac Hong University (LHU)	Vietnam
61	Aix-Marseille University	France	86	Chungwoon University	Korea, Rep.
62	Tra Vinh University	Vietnam	87	University of the People	USA
63	George Mason University	USA	88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Rep.
64	IEDC-Bled School of Management	Slovenia	89	University of Lincoln	United Kingdom
65	Northwestern University	USA	90	La Trobe University	Australia
66	RWTH Aachen University	Germany	91	Dalian Neusoft University of Information (DNU)	China
67	University of Oulu	Finland	92	Centrum PUCP Business School	Peru
68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Japan	93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69	Hamburger University	USA	94	Seoul Institute of the Arts	Korea, Rep.
70	Kansai University	Japan	95	National University of Management (NUM)	Cambodia
71	Cranfield University	United Kingdom	96	University of Liberal Arts Bangladesh (ULAB)	Bangladesh
72	Telkom University	Indonesia	97	Athens University	Greece
73	Ajou University	Korea, Rep.	98	FEU Institute of Technology (FEU Tech)	Philippines
74	Far Eastern University	Philippines	99	University of Kuala Lumpur	Malaysia
75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RPI)	USA	100	Kyushu University	Japan

www.wuri.world

15

혁신사례 Innovative Cases: 학생교류 및 개방성 Student Mobility and Openness

싱가폴 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학생교류 및 개방성을 위한
혁신프로그램

Innovative Program for
Student Mobility and Openness

-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제공
 - 단기/장기프로그램
 - 해외대학간 인턴십 프로그램
- Provide various exchange programs to students, including short/long-term programs, and internship programs with overseas universities.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Rep.

아시아 지역대학간
슈퍼스마트소사이어티
Super-Smart Society through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in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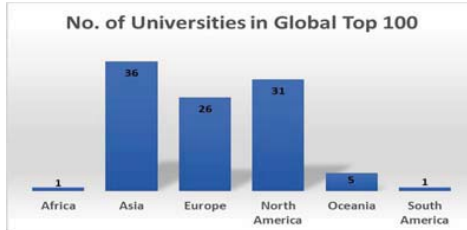
- 다양한 하이브리드 국제교육프로그램 제공
 -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간의
공유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Provide diverse hybrid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Students with different backgrounds get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each other.

www.wuri.world

16

지역별 도전지수(Emerging Challengers: Regions)

글로벌 100대 혁신대학Global Top 100 Innovative Universities



- 100대 진입 아시아-북아메리카-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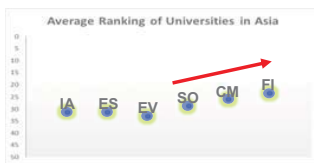
Asia has the highest number in the Top 100 list, followed by North America and Europe.

- 우수진입순위(북아메리카-유럽-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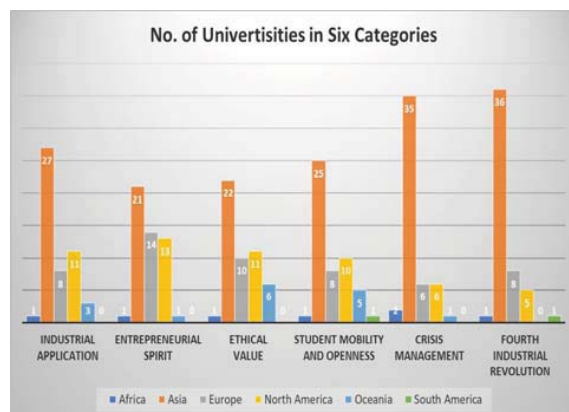
North America occupies the highest average ranking, followed by Europe and Asia.

지역별 도전지수(Emerging Challengers: Regions)

6개영역별 50대 지수(Top 50 in Six Categories)



- 아시아 지역 대학의 우수랭킹은 유럽과 북아메리카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참여 수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다.
(Although Asian universities have relatively lower rankings, they have highest number in all six categories, compared to Europe and North America.)



수도권 :

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충청권 :

청운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호남제주권 :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대구강원권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동남권 :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부경대학교, 영산대학교

<https://www.futureuniv.or.kr>

2. 소셜서비스LiFE 컬리지

Social Service 'LiFE' College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Education

LiFE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19

지속가능발전지구와 인간에 대한 요구

평생교육
정의개정
교양---진로
능력개발

Government/other Environment

평생교육 지원

- 2014 평생교육 중심대학 계획 발표
-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운영

지속가능발전

- 17개 목표 수립 및 평가
- SDGs 4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20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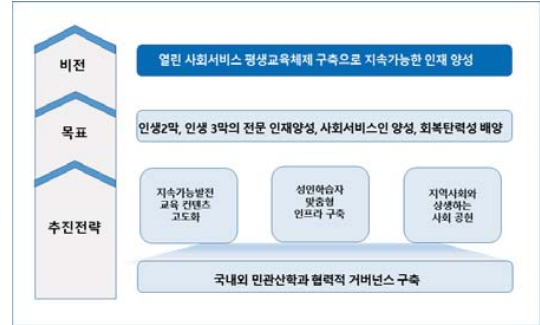
지역사회 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

Social Service LIFE College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청운대학교



열린 사회서비스대학



21

사회서비스대학 조직과 추진전략



사업 비전

사업 목표

인재상

핵심 역량

주진 내용

주진 전략

성인친화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양성 거점 대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직무역량 강화 및 삶의 만족도 향상)

창의적 역량 함양	전문적 역량 도야	실천적 사회기여
창의지성 역량	인성 역량	시민성 역량

KEY stone 교육과정

Keep going 교양 교육과정	Expert-led 전문 교육과정	Yes! challenge 비교과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기반 교양 교육 • 성인학습자 주도적 참여 설계 교육 • 현장밀착형 교양 교육 • 지역밀착형 교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역량 기반 교육 •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 • 지역연계 전공 교육 • 현장문제해결 전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업능력 강화 교육 • 생애주기별 진로설계 • 협업을 통한 지식 나눔 • 창의융합 탐구능력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	성인학습자 친화형 운영	지역과 타 대학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기반 교양 교육 • 현장문제해결 전공 교육 • 고품격 인문 교육 • 자기주도적 학습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 현장기반형 직무역량 교육 • 성인학습자 맞춤형 혁신적 교수-학습법 • 학생이동 편의성 향상 • 성인학습자 복지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협력 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교육 • 찾아가는 동아리 교육 • 글로벌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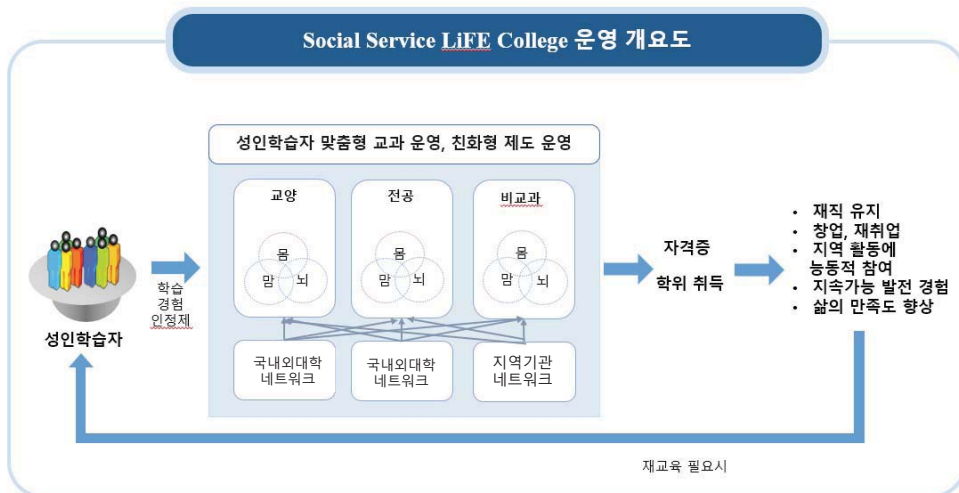
22

사회서비스대학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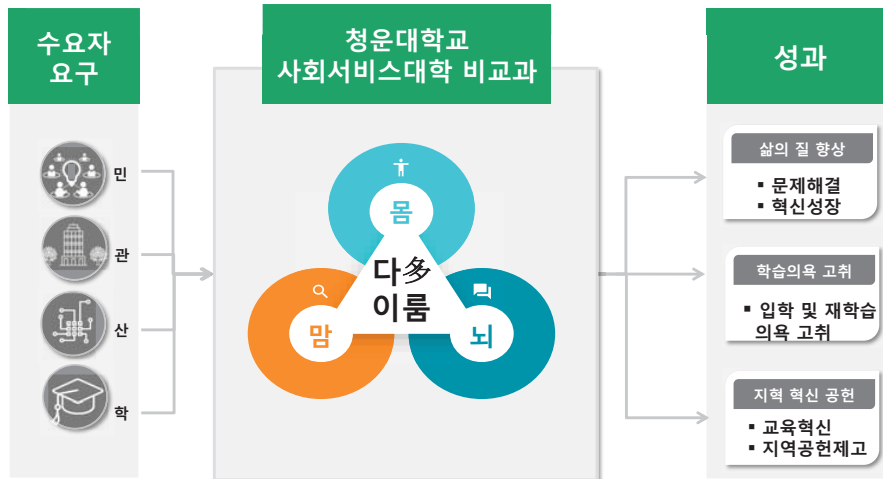
23

몸 맘 뇌 다(多)이름 브랜드 구축



24

비교과 몸·맘·뇌 다(多)이름 프로젝트



25

21학년도 다(多)이름 만족도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96%의 결과가 도출

- 자기돌봄 자서전쓰기,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아카데미, 행복을 주는 생활공예 프로그램은 가장 높은 100%의 만족도
- 행복 한 바탕(놀이 아카데미), 서양의 귀중품 이야기는 각각 86%, 89%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임

프로그램명	2021-1학기	수강인원	2021-2학기	수강인원
아침을 여는 영어	91%	20명	98%	15명
파워포인트 활용	95%	15명	NA	
자기돌봄 자서전 쓰기	NA		100%	10명
토탈뷰티	NA		98%	24명
공인중개사 대비 특강	NA		97%	25명
부동산 경매사 과정	NA		NA	
장애인 상담사 양성과정	NA		NA	
사회적 기업의 이해	91%	11명	NA	
행복 한 모금(바리스타교육)	NA		91%	20명
행복 한 바탕(놀이 아카데미)	86%	15명	NA	
행복 한 스푼(디지털)	90%	15명	NA	
홀리베프힐링	NA		94%	50명
100세 시대 노후준비 아카데미	NA		100%	41명
서양의 귀중품 이야기	89%	15명	NA	
이야기 예술로 만나는 유럽 문명여행	93%	14명	NA	
행복한 건강(심사회복PT)	NA		97%	20명
꽃을 마시다	NA		99%	30명
조물조물 치유히 만들기	NA		98%	40명
행복을 주는 생활공예	NA		100%	20명

26

영역	강좌명	강의내용	유형	학기
몸 (시민성)	고암 이용노와 추상미술	고암 이용노의 예술세계에 대해 배워보는 강좌	대면	여름방학
	(학생강사) 창업 성공 스토리	창업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는 프로그램	대면	2학기
	(학생강사) 생활 속의 공예	심신안정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향기테라피 공예 강좌	대면	여름방학
	홍성 역사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는 지역인재 소양	홍성의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지역인재로서의 소양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대면	2학기
	세계 주거 문화 디자인에 대한 이해	세계 주거 문화 디자인에 대해 배워보며 홍성과 비교해보는 프로그램	대면	2학기
	미국문화로 배우는 영어	미국 문화와 영어를 함께 배우는 강의	대면	2학기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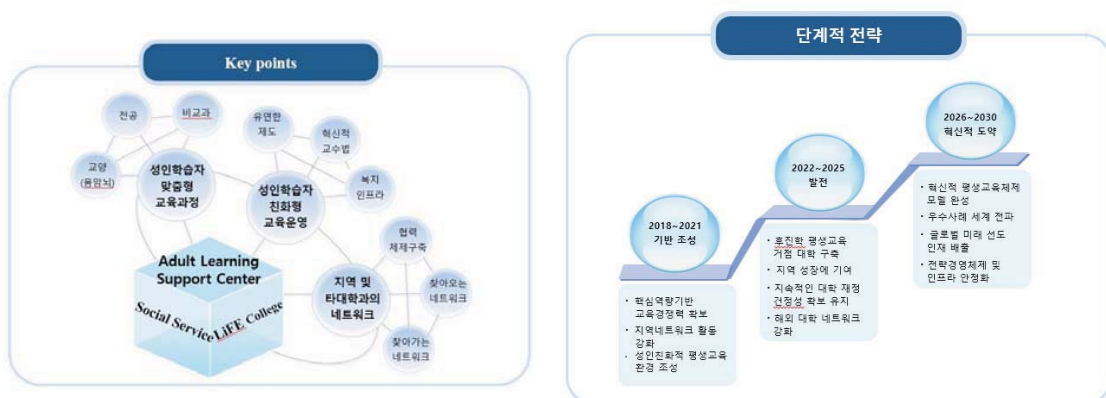
영역	강좌명	강의내용	유형	학기
맘 (인성)	마카롱 전문가 자격증 과정	마카롱 만들기 이론 및 실습 강좌	대면	여름방학
	바리스타 취미 과정	커피 제조 이론 및 실습 강좌	대면	여름방학
	100세 시대 노후준비 아카데미	노후준비에 관한 강의	대면	2학기
	2022 캠퍼스투어	사회서비스대학 재학생과 지역민과 함께 청운대를 탐험해보는 프로그램	대면	2학기
	(에세이 공모전) 나의 대학생활	사회서비스 대학을 다니며 느끼는 소회를 적은 에세이 공모	비대면	2학기

28

영역	강좌명	강의내용	유형	학기
뇌 (창의지성)	컴퓨터 기초강좌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기초를 배워보는 강좌	대면	여름방학
	퍼블릭 스피치	공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는 강의	대면	여름방학
	4차 산업혁명시대 홍성 스마트 농업의 미래	스마트농업을 활용한 홍성 농업의 미래는 어떠할지 알아보는 강의 프로그램	대면	2학기
	리포트 글쓰기	학부과정에서 요구되는 리포트 쓰기 과정을 배우는 강의	대면	2학기
	지역사회에서 찾아보는 생활 속 인공지능	지역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배우는 강의	대면	2학기

29

지방대학시대?...지역과의 상생이 답이다



30

지방대학시대?...2019-2022 그 동안의 성과

- 열린 비교과 진행으로 고등교육의 높은 장벽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됨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를 받고자 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하여 지역의 고등교육 활성화 됨(학부 재학생 71명에서 345명으로 증가)
- 고등교육기관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생2막, 인생3막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관심 고양 및 수혜(309명 재학생 중 지역학생 9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사업책임자 사회서비스대학장이 평생교육 원장을 겸직하여 ‘열린 사회서비스대학’을 운영하고, 라이프사업 중 유일한 군단위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교육가치 제고
-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몸·마·뇌 다(多)이룸’으로 ‘지방대학시대’ 해결 방안으로 지역과 열린평생교육이 지방대학의 상생모델임을 제시
- 공유냉장고, ‘이룸봉사단’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 가치공유와 상생
- 커뮤니티 컬리지로 ‘열린 사회서비스 대학 체제’ 구축함... 액티브 시니어 관련학과 신설 예정(2024)

31



세계시민사회와 SDG (박선영 교수) 지속가능한 인재는 교육과 실천이다

핵심 역량

1. 시민성 역량 : 세계시민사회의 교양시민으로서의 상식과 판단력, 가치관을 습득하여 공동체의 갈등상황, 문제해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의 일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익힘
2. 창의지성역량 : 문제해결방식 교수법, 토의와 토론 등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대응력을 습득하여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지성을 습득함

교육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범위, 내용,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미래 관련 글로벌이슈 해결을 위한 사고력과 구성력을 갖출 수 있다.
- 국제 시민사회와 SDG 의제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토론과 토의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국내 시민사회와 SDG 의제를 연계하여 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가공, 표현할 수 있다.

교과목개요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영역별 탐구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시민으로서 우수한 역할, 혁신적 방향성,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과목이다.
- 글로벌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시민사회 참여,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해 시민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교과목평가

본 과목은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절대평가
(녹화1시간 + 실시간 2시간이 기본이나 주제에 따라 유동적임)

출석평가(10)

: 학칙에 따른 출석평가(2회 지각 시 1시간 결석, 8시간 결석 F)

과제물평가(50)

: 수업시간에 결정한 주제의 팀별 준비과정, 협업, 기여도 등 교수평가.

동료평가, 성찰일지 등 참조.

1. 팀별 토의, 역할활동, 토론, 발표, 과제를 완성도

2. 토론 : 토론 과정에서의 준비성, 현장성 등을 교수평가, 팀별 평가 함

수시평가(20)(중간평가) : 팀별 발표주제에 대한 서술형 시험

기말평가(20) : 서술형 시험과 기말 과제를 중 하나. 차후 의논 후 결정

32

3. SDGs 와 소셜라이프컬리지



Goal 4: Ensure inclusive and quality education for all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4 교육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소셜라이프컬리지는 열린대학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4번째 양질의 교육실천

모두에게(학령기를 넘어 25-99....열린대상)

포용적이고(성인친화적...교육방법...선학습경험인정제,
유연학기, 집중학기제

O2O...교육시설의현대화/
힐링명상센터 및 공유주방등 교육시설 향상)

공평한 양질의 교육(대학에서의 고등교육...인생2/3모작
프리미엄아카데미...대학간 연계 및
국내외MOU....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전공/교양/비교과/나노디그리...마이크로 디그리)

33

<부록> 사회서비스대학 개설학과

- 사회복지상담학은 개인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학문으로,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사회와 기관에서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학문이다.
-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하여 인격의 성장을 도와주고 행복한 삶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와 국가공동체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공동체 일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복지상담학과



34

<부록> 사회서비스대학 개설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청소년 활동, 교육 및 상담 전문가 양성



35

참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 청운대 사회적기업학과

Q. 사회적기업학과, 뭘 배우나요?

창의지성 역량	인성 역량	시민성 역량	메인 노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문제 인식	사회혁신주도	사회적경제 전문가
공동체의 회복 상호 협력, 존중, 협치 신뢰회복 다양성 존중	빈부격차, 고령화 도시 농촌 격차 고용불안 기후 환경 위기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 이해 비영리조직 인적자원개발 경영, 마케팅전략	지역사회 협치전문가 공유경제, 마을교육전문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전문가

<부록> 사회서비스대학 개설학과



경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기관에서
 LIFE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4년제 성인학습자(30세이상)를 위한
 정식 대학과정입니다.

학과개요

핵심경력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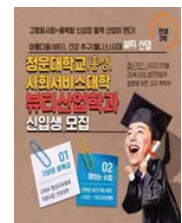


37

<부록> 사회서비스대학 개설학과

1.친환경 뷰티코스메틱 기획/제조

- 친환경 뷰티 코스메틱 기획 및 개발 분야의 학문적 체계화로
뷰티 원료와 제품 제조 및 지도사 전문인 양성



2.뷰티상품 디자인/브랜딩

- 창의적 뷰티상품 디자인 및 브랜딩 전문 글로벌 인재양성



3.미디어커머스/뷰티테크 융합

- 뷰티미디어커머스 산업에 특화된 뷰티크리에이터 인재양성
- 친환경 뷰티테크 산업의 세계화 선도 IT 융복합 뷰티 인재양성



38

<부록> 사회서비스대학 개설학과

- 성인친화 : 성인 학습자와 재직자의 학습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중심 교육 실현
- 실용지식 : 부동산 관련 법, 정책, 행정, 경영, 경제, 기술 등 실용적 융합지식 함양
- 창의지성 : 융복합 역량 및 전략적 소통 능력을 갖춘 창의적 지성인 양성
- 시민역량 : 지역공동체의 부동산 문제해결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부동산경영학과



자격증 취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 자산관리사, 등
취업	부동산행정가, 부동산회사, 공기업, 금융기관 등
창업	부동산관리회사 설립, 분양업, 개발업 운영 등
대학원 진학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부동산전문가로 성장

39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확산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발표자 : 박선주

2022년 8월

※ 본 발제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연구(NRF-2020S1A5A8046845)의 일부이며, 미완성된 내용으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KNU 경북대학교

I. 서론

■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방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통한 실천이 중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기존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반영한 정책 혁신 필요
 -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및 환경산업(녹색경제) 활성화 등 주요
- 지자체의 경우 정책채택(policy adoption)을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로 살 펴볼 수 있음
 - 조례 채택을 통해 계획, 사업, 예산, 조직 등 기반 마련
- 지자체 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 도입 경향 → 지자체 간 정책확산 (policy diffusion) 존재 가능

I. 서론 - 계속

■ 연구 목적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가 법령 체계의 이원화와 왜곡(?) 상황 하에 지자체 수준의 노력을 조례 채택 양상을 통해 기술, 탐색
 - 정책 혁신성 지수를 적용한 경험 연구
- 향후 왜 어떤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빠르게, 더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는지, 정부 간 정책확산(조례채택) 기제 (mechanism)는 무엇인지 연구에 활용 가능

I. 서론 - 계속

■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

- 1)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채택/확산 양상 (pattern)은 어떠한가?
 - 지자체간 확산의 속도와 채택 조례의 다양성 등에 차이가 있는가?
- 2) 전반적으로 또는 조례별로 정책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선도자(initiators)는 누구이며, 차이가 있는가?
 - 선도자(혁신자, 초기채택자) 그룹과 후기 채택자(미채택 포함) 그룹 구분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 흐름

- 1969년 Walker의 정책혁신, 확산 연구 시초
- 70~80년대까지 활발, but 정책채택과 확산의 인과관계 논의 부족
- 90년대 후반 이후 정책 혁신의 확산 기제, 동기에 대한 연구 활발

■ 국내연구 흐름

- 초창기 정책 혁신과 확산 개념 소개되었으나, 경험연구 부족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형성과 집행에서 지방정부 정책혁신 연구에 회의적 시각
- 최근 정책 유형, 분야별 정책혁신, 확산 양상, 지자체 역량 및 동기요인에 대한 경험연구 진행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정책혁신(public policy innovation)

- "정부가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Mohr, 1967; Walker, 1969)
- 기존 시스템, 제도, 조직, 정책이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낼 때 혁신 시작(Rogers, 1983)

■ 지방정부의 혁신적 정책의 도입 현상 연구

- 정책채택(policy adoption) 요인 - 지자체의 고유한 내부결정요인에 의해 정책 도입(Gray, 1973; Berry & Berry, 1990)
-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요인 - 특정 정부에서 새롭게 개발, 도입된 혁신적인 정책이 다른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채택한 정부 수가 늘어드는 현상(Walker, 1969; Eystone, 1977; Berry & Berry, 1990)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정책 혁신성(policy innovativeness) 측정 방식

- 1) 개별 정책의 도입 여부 측정 (Downs & Mohr, 1976; Savage, 1978; Berry & Berry, 1990; 문승민, 나태준, 2015 등)

$1 = \text{if 해당 연도, 해당 지자체에 도입}; 0 = \text{if not}$

- 2) 도입 속도 측정 (Walker, 1969; 장석준, 노종호, 김대진, 2015)

$\text{개별 지방정부의 조례별 혁신성(Wik)} = (Y \text{ Max } k - Y_{ik}) / (Y \text{ Max } k - Y \text{ Min } k)$

k 정책을 최초로 채택한 해 Y Min k, 마지막으로 채택한 해 Y Max k, Y_{ik}는 대상 지자체에서 정책 채택한 해 혁신성 지수의 범주 0~1, 지수 값이 클수록 더 빨리 채택하고 혁신성 정도가 큼

$\text{지방정부별 종합 혁신성 지수(composite index)} = \text{개별 정책의 혁신성 지수의 평균}$

정책간 혁신성 정도의 표준화; 지방정부 간 혁신성(innovativeness) 비교 가능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정책 혁신성(policy innovativeness) 측정 방식

- 3) 정책 다양성(혁신의 빈도) 측정 (O'Connell, 2008; 조근식, 2014)

- 한 분야 내 다수의 유사한 정책이 존재할 때 활용 가능

$\text{지방정부혁신성} = (\text{개별지방정부 채택 정책 수} / \text{단일지방정부 채택 최대 정책 수}) * 100$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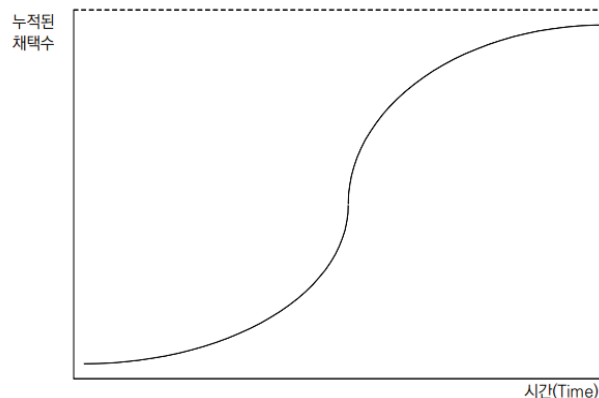
■ 정책확산 속도에 따른 구분 (Rogers, 1995; 2003)

- 1) **혁신자(innovators)** - 새로운 혁신을 최초로 선택한 소수집단, 전체의 2.5%
- 2) **초기 채택자(early adopters)** - 혁신 도입 이후 최초로 모방하는 리더나 유행 주도집단, 13.5%
- 3) **초기 다수자(early majority)** - 모든 혁신이 대중화되기 전에 채택하는 집단, 전체 34%
- 4)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 혁신에 회의적인 전체 34%
- 5) **후기 채택자(laggards)** - 혁신을 마지막으로 채택하는 집단(미채택자 포함), 전체 16%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혁신의 확산 분포

- 시간 흐름에 따른 혁신의 채택 빈도는 정규분포를 나타냄
- 누적분포는 점진적 S자 모양(Berry and Berry, 2007; Boushey, 2010)



출처: Berry and Berry(2007); 장석준 외(2015: 229)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정책 혁신 결정요인

1) 내부결정요인

- 지방정부 내부 역량
 - 인적역량(자치단체장 학력, 경력, 소속정당, 연령, 비공무원/비정치인; 공무원 역량); 조직역량(재정력-여유자원, 조직구조 역량-복잡성=분화 및 전문화 수준, 실과 개수 등; 조직규모=공무원 수)
- 지방정부 외부 역량
 - 지역민사회 역량(시민단체, 언론매체 수, 시민단체 예산, 상근직 직원수, 회원가입률 등), 환경적 지표(소득수준, 지방소득세 등, 의존자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세계화지표-자매결연, 교육기관-대학 수 등; 문화-인구 대비 근린공원, 도서관, 박물관 수 등)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정책 혁신 결정요인

2) 확산모형

- 수직적 확산
 - 상위정부, 국제기구로부터 하위정부, 개별국가로 정책 전파(top-down);
 - 하위수준에서 상위정부수준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경우(bottom-up)
- 수평적 확산
 - 비슷한 수준의 정부 사이 확산
 - 경계를 공유하는 이웃정부로부터 확산; 또는
 -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정부로 확산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 확산의 동기/기제 연구

- 1) 인접지역의 성공적인 정책혁신의 사회적 학습, 2) 경제적 경쟁, 3) 주민의/정치적 압력 때문 (Berry and Berry, 2007; Berry and 김대진, 2010 재인용)
- 2) 학습(learning), 경쟁(economic competition), 모방(imitation), 강제(coercion)로 세분화 (Shipan & Volden, 2008)
- 3) 신제도주의의 조직 동형화 이론 관점(DiMaggio & Powell, 1983) 접목 :
 -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 상급 정부(중앙, 광역) 정책채택 (예: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조례확산; 2018년 이후 경기도 기초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확산 등)
 - 모방적 동형화(mimetic process) – 동일 지역(광역) 내 정책채택(조례 제정) 누적비율
 -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pressures) – 비영리단체/시민사회 압력

KNU 경북대학교

13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 최근 국내 주요연구

- 문승민·나태준(2015),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 연구
 - 조례제정 여부, 누적 현황(그래프); 국제 네트워크(+)와 수직(광역), 수평적(인접정부) 확산
- 장석준·노종호·김대진(2015), 정책유형별 정책혁신 선도자와 정책확산 양상 연구
 - **Walker의 혁신성 지수 활용**: 개별 조례 혁신성 & 종합 혁신성 지수 적용, 조례 확산 양상(누적 그래프), 혁신주체(혁신자) 식별
- 조근식(2014),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 O'Connell의 혁신성(다양성) 측정 방법 활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사회서비스
- 유한별·나태준(2019),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영향요인 연구
 - 갈등관련 조례 제정 여부, 누적 그래프 & 지리적 군집성(Moran's I); 신제도주의 동형화(강제, 모방+, 규범+) 영향

KNU 경북대학교

14

III.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배경

■ 중앙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

-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김대중 정부) 발표 –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정책목표로 채택
- 이를 법제화하고자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노무현 정부)
- 2010년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명박 정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격하, 2010.1.)

- 개념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포괄; 즉,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 2010년부터 최근까지 법제와 집행체계가 이원화, 기본법과 일반법이 뒤바뀐 ‘기형적’ 제도(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완, 2021: 11)가 유지

III.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배경

■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

- 지속가능발전의 실천단위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아닌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2010~2012에 걸쳐 급격히 채택(확산)
 - 반면, 지속가능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 위원회, 보고서 등에 관한 규정 부재 → 개별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선택적으로 제정
 - 그 외 에너지, 자원순환, 녹색산업, 기후위기대응, 전기자동차, 수소산업, 녹색건축물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개별 조례 도입
 -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의 정책(사업), 위원회/협의회 운영 등 실천적 측면에서 차이 발생 가능
 -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되어 7월 5일 시행
 - 향후 국가기본전략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이르는 정책 연계가 예상되며,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급속한 확산이 예상됨
- *2021.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폐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올해 9월부터 시행)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III.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배경

역대 정부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과정 개괄

구 분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제도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규정 (대통령령 2000.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07.8)	녹색성장위원회 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1) 지속가능발전법(2010.1)		
	조례 체계	환경조례 의거, 지방의제21협의회 지원 지방의제21협의회 지원조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지원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지방)	
조직화	중앙 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PCSD) 국가지속발전 위원회(NCSD)	대통령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환경부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 기구	환경부서(대부분의 지방) 기획부서(극히 일부지방)	환경부서 ·기획부서 (일부지방)	·환경부서 ·기획부서 (일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극히 일부지방)	녹색성장 위원회 (강한 권한)	녹색성장 위원회 (권한 약화)	·녹색성장위원 회(형식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일부지방)
		지방의제21협의회(대부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일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전체)	

출처: 김병완(202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p.1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1.9.16.),

KNU 경북대학교

17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III. 연구설계

- 연구대상
 -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자체 조례
 - 총 9개 조례
- 연구범위(시간, 공간)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총 243개
 - 2000~2022.4.

조례 명칭	최초 채택 연도
에너지 기본조례	2002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2008
기후변화 대응 조례	2008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2009
자원순환 기본조례	200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2009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2011
환경(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

KNU 경북대학교

18

III. 연구설계 - 계속

- 자료수집 및 분석자료 구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 키워드 검색 (예: 지속가능발전, 기후대응, 환경산업 등)
 - 연혁(전체)
 - 지자체/조례별 최초 제정 공포일자(또는 개정 조례에서 제정일 식별)
 - * '제정' 구분 필터링할 경우 누락 발생. 내용과 최초 제정 여부 등 연구자가 직접 확인
- 횡단자료 구축
 - 광역/기초 지자체별, 9개 조례별 횡단자료 구축
 - 조례명, 도입 여부, 최초 채택연도 및 일자
 - Walker 혁신성 지수 방식 적용; 개별 조례 혁신성(속도), composite(9/5/4개 평균) 지수 도출

III. 연구설계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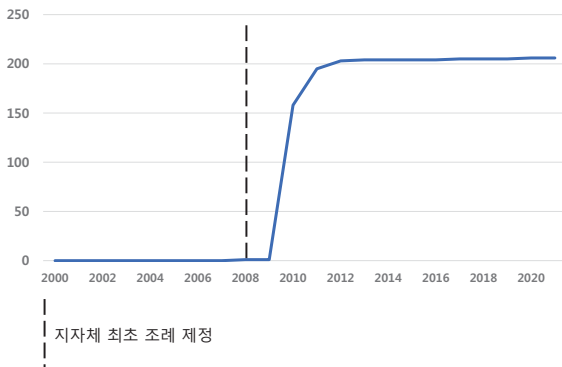
- 분석방법
 - (RQ1) 조례 채택/확산 양상(pattern)
 - 조례 제정 누적 분포 그래프
 - X축 연도, Y축 누적 채택 지자체 수
 - (RQ1-1) 지자체 간 채택 조례의 다양성 및 확산 속도 비교
 - Walker의 혁신성 지수 적용 - 조례별, 종합 혁신성
 - 종합 혁신성 지수 기준 상위 20개 혁신 선도 지자체 도출
 - (RQ2) 지속가능발전 정책혁신 주도자 그룹
 - 조례 제정 누적분포, Rogers 기준 적용 - 혁신자, 초기채택자, 초기 다수자, 후기다수자, 후기채택자 구분
 - 조례별 혁신자 그룹 지자체 식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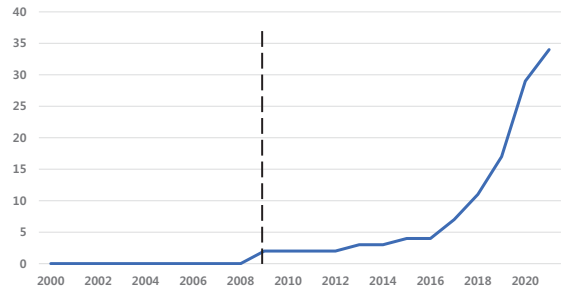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 개별 조례의 확산 양상(누적 분포 그래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채택률 84.8%)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채택률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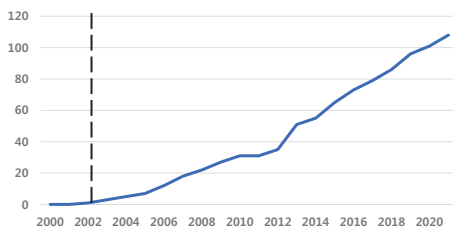
KNU 경북대학교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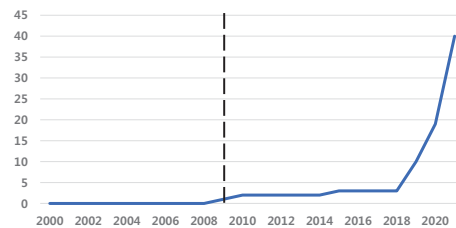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 계속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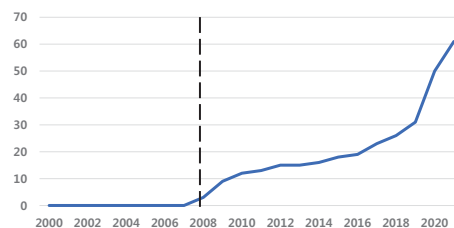
에너지 기본조례 (채택률 45.3%)



자원순환 기본조례 (채택률 17.7%)



기후변화 대응 조례 (채택률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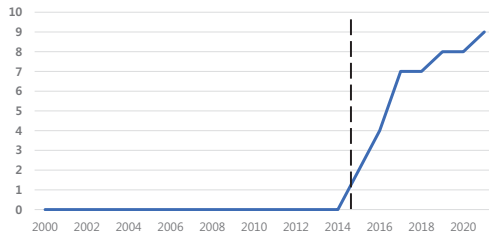
KNU 경북대학교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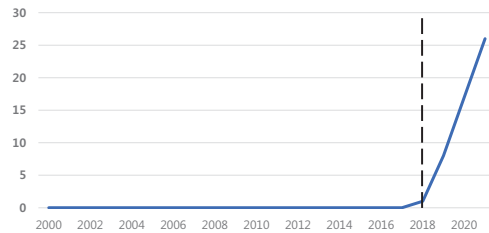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 계속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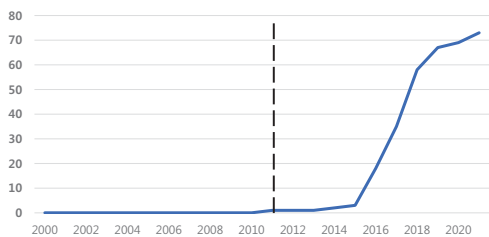
환경(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채택률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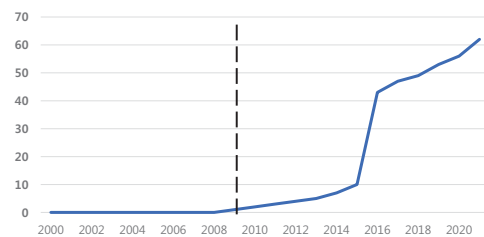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채택률 12.3%)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 (채택률 30.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채택률 26.3%)



KNU 경북대학교

23

IV. 분석결과 - 개별 조례의 확산 양상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 조례별로 확산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
-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우 초기채택, 초기다수자가 2~3년 내에 나타나 빠른 확산을 보임
 - ←기본법 제정에 따른 수직적 확산
-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누적분포의 양상이 비슷함
- 질문: 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대응은 보완관계인가, 대체관계인가?
 - ➔대체관계? 둘다 채택 15, 둘다 미채택 159; 기후변화대응만 채택 47, 지속가능발전만 채택 22

KNU 경북대학교

25

IV. 분석결과 - 개별 조례의 확산 양상

- 에너지 기본조례의 경우 9개 조례 가운데 2002년부터 가장 일찌감치 지자체 단위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는 에너지법 4조2항에 근거(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단, 에너지 조례의 경우 이론에서 제시한 혁신적 정책의 확산 경향인 S자 커브를 나타내지 않음;
 - 즉, 2010-12 사이(저탄소녹색성장) 약간 주춤하였으나, 채택 지자체가 지속적 증가; 시간 흐름에 따라 채택 지자체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 일정함
- 자원순환기본조례의 경우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후 2019년부터 조례 채택 지자체가 증가하는 중임
- 전기자동차, 녹색건출문의 경우 비교적 2016년 이전 혁신자가 나타났고, 이후 초기채택자 도입 후 가파른 S 곡선의 양상(패턴)이 나타나지만, 2022년에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

IV. 분석결과 - 계속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채택 여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0 (미채택)	1 (채택)	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0 (미채택)	31	6*	37
	1 (채택)	175	31	206
계		206	37	243

IV. 분석결과 - 계속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모두 채택한 지역 31개:

- 8개 광역 지자체; 대전, 서울, 경기도
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초기채택
- 기초 지자체 중 15개 경기도; 14 곳
은 2018년(지방선거) 이후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채택

지방자치단체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정연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연도
경기도 파주시	2008	2022
제주특별자치도	2010	2019
경상남도	2010	2020
경상북도 포항시	2010	2019
전라남도 담양군	2010	2020
충청남도	2010	2018
강원도 춘천시	2010	2021
경기도 양평군	2010	2018
경기도 여주시	2010	2020
경기도 포천시	2010	2022
경기도 광주시	2010	2019
경기도 화성시	2010	2020
경기도 안성시	2010	2021
경기도 이천시	2010	2019
경기도 하남시	2010	2021
경기도 고양시	2010	2022
경기도 동두천시	2010	2020
경기도 광명시	2010	2019
경기도 안양시	2010	2020
경기도 수원시	2010	2017
부산광역시	2010	2020
대전광역시	2010	2009
광주광역시	2010	2020
서울특별시	2011	2009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1	202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1	2020
경기도 평택시	2011	2020
경기도	2011	2013
광주광역시 서구	2011	2020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2017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2	2015

KNU 경북대학교

28

IV. 분석결과 - 계속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모두 미채택한 지역 31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역시
의 구 23개
- 그 외 충북 시군 7곳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고성군

*저탄소녹색성장 미채택 &
지속가능발전 조례 채택 지역 :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KNU 경북대학교

29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IV. 분석결과

• 종합 혁신성 지수 상위 20개 지자체

- 지자체별 9개 조례 혁신성 지수 평균 기준 (도입 속도/다양성을 고려한 Walker의 산식 적용)

구분	채택 조례수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	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육성및지원	수소산업 육성및지원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혁신성지수 (종합)
강원도	8	0.84	-	0.96	0.16	1.01	0.84	0.76	0.56	0.32	0.61
경기도	8	0.76	0.70	0.36	0.24	-	1.01	0.76	0.46	0.63	0.55
서울특별시	7	0.76	1.01	1.01	0.24	1.01	-	0.26	-	0.63	0.55
광주광역시	8	0.84	0.16	0.76	0.16	0.94	-	0.26	1.01	0.55	0.52
경기도 수원시	7	0.84	0.39	0.46	-	0.94	-	0.51	0.56	0.70	0.49
전라남도	7	0.84	-	0.96	-	0.15	0.68	0.76	0.46	0.47	0.48
부산광역시	9	0.84	0.16	0.76	0.09	0.08	1.01	0.26	0.56	0.55	0.48
인천광역시	8	0.84	-	0.91	0.16	0.87	0.34	0.51	0.46	0.16	0.47
경상북도	8	0.84	-	0.76	0.09	0.30	0.84	0.51	0.46	0.39	0.47
충청남도	8	0.84	0.32	0.81	0.09	0.22	-	0.76	0.56	0.47	0.45
경상남도	9	0.84	0.16	0.81	0.01	0.22	0.68	0.51	0.56	0.24	0.45
제주특별자치도	7	0.84	0.24	0.81	0.24	-	0.68	-	0.65	0.39	0.43
울산광역시	8	0.84	-	0.86	0.16	0.15	0.01	0.76	0.56	0.47	0.42
전라북도	6	0.84	-	0.81	0.24	-	-	0.76	0.56	0.47	0.41
대구광역시	6	0.84	-	0.91	-	0.22	-	0.76	0.56	0.32	0.40
충청북도	6	0.84	-	0.81	0.09	0.30	-	1.01	-	0.24	0.37
경상남도 창원시	5	0.84	-	0.71	-	0.58	-	0.26	0.74	-	0.35
충청남도 아산시	5	0.76	-	0.76	-	0.37	-	-	0.56	0.47	0.32
경기도 광명시	8	0.84	0.24	0.36	0.09	0.15	-	0.26	0.37	0.47	0.31
전라남도 목포시	4	0.84	-	0.76	0.16	0.94	-	-	-	-	0.30

KNU 경북대학교

30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발표자료

IV. 분석결과 - 종합 혁신성 지수 상위 20개 지자체

- 20개 중 15개 광역시도; 상급 지방정부가 기초 지자체에 비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채택의 혁신성 높음(다양, 혁신/초기채택자)
 - 그 외 혁신성이 높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수원, 경남 창원, 충남 아산, 경기 광명, 전남 목포
- 243개 지자체 중 9개 조례 모두 채택한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2곳 뿐
-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경우 광역시도 9곳에서만 채택 - 그 외 시도,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미채택
 - 반면, 수소산업의 경우 20개 지자체 중 18 곳에서 채택함;
 - 즉, 녹색산업이더라도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육성 선호 산업군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
- 서울시의 경우 특별시 차원의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조례 미채택; 자치구에서 선택적으로 채택

KNU 경북대학교

31

IV. 분석결과 - 종합 혁신성 지수 상위 20개 지자체

- 대구시의 경우 에너지 기본조례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신속히 도입하여 친환경에너지 육성 노력을 기하는 반면,
 -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환경산업 조례 미채택, 즉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부분에 관심 미흡
- 한편, 지자체의 조례별 채택여부와 혁신성지수를 비교해보면, 종합 혁신성 지수가 유사하더라도 선호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상이함
 - 예를 들어 서울과 전남의 경우 채택 조례수가 7개로 동일하고, 혁신성지수는 각각 0.55, 0.48이나,
 - 서울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서 최초 채택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도 혁신성 높음, 반면 수소산업 육성, 자원순환 조례의 채택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전기자동차, 환경산업 육성 조례를 미채택함
 - 반대로 전남의 경우 에너지, 수소산업, 환경산업 육성 조례의 경우 혁신성이 높고 전기자동차,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도 중간정도 속도이지만,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조례는 미채택,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채택이 비교적 느린 것을 볼 수 있음

IV. 분석결과

• 조례별 혁신자 분석

- Walker의 개별 조례 혁신성 지수 적용*, Rogers의 정책확산 속도에 따른 구분 (장석준 외, 2015 참고)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1	지속가능 발전 4	에너지 7	자원순환 3	기후변화 대응 3	환경산업 육성및지원 7	수소산업 육성및지원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7
혁신자 (2.5%)	경기도 파주시 (1.01)	대전광역시 (1.01) 서울특별시 (1.01) 경기도(0.70) 서울특별시 도봉구(0.55)	서울특별시(1.01) 전라남도(0.96) 강원도(0.96) 인천광역시(0.91) 대구광역시(0.91) 울산광역시(0.86) 전라남도 여수시 (0.86)	대전광역시 중구(1.01) 인천광역시 연수구(0.93) 서울특별시 강남구(0.55)	서울특별시 (1.01) 강원도(1.01) 대전광역시 서구(1.01)	부산광역시(1.01) 경기도(1.01) 강원도(0.84) 경상북도(0.84) 경상남도(0.68) 전라남도(0.68) 제주특별자치도 (0.68)	충청북도(1.01)	광주광역시(1.01) 경상남도 창원시 (0.74) 제주특별자치도 (0.65)	강원도 원주시(1.01) 광주광역시 북구(0.93) 경기도 평택시(0.86) 경기도 오산시(0.78) 경기도 수원시(0.70) 경기도(0.63) 서울특별시(0.63)
초기채택자 (13.5%)	157	33	28	37	28	2	29	32	36
초기다수자 (34%)		-	75	3	31	-	-	39	21
후기다수자 (34%)	46	-	-	-	-	-	-	-	-
후기채택자 (16%)	3	-	-	-	-	-	-	-	-
미채택	37	206	133	200	181	234	213	169	179
채택율	84.8%	15.2%	45.3%	17.7%	25.5%	3.7%	12.3%	30.5%	26.3%

*혁신성 지수 산출시 0.01 일괄 더하여 22년 제정 식별

IV. 분석결과 - 조례별 혁신자 분석

- 저탄소 녹색성장 채택율 약 85%
- 그 외 에너지, 전기자동차, 녹색건축물, 기후변화대응 조례 순으로 채택율 높으나 50% 미만; 환경산업육성 조례의 경우 광역지자체 9곳에서만 조례 채택후 기초지자체 한 곳도 채택하지 않음
- 저탄소녹색성장 - 파주시에서 조례를 최초도입하였으나, 2010년 기본법이 제정되며, 지자체의 50% 가량이 한꺼번에 도입하여 초기채택자와 초기다수자 구분 X; 채택율 가장 높음
- 에너지 기본조례 - 주로 광역지자체(서울, 전남, 강원, 인천, 대구, 울산)가 혁신자이고, 초기 채택자 28곳, 초기 다수자 75곳 까지 도입
- 자원순환 기본조례(재활용, 재사용 등)의 경우 기초지자체 3곳 혁신자 - 폐기물 수집, 처리, 자원순환 등 기초지자체 관할

V. 결론

- 지자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조례 도입을 통해 살펴봄
 - 정책 혁신과 확산의 측면에서 접근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차원의 정책목표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9개를 선정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용 참고)하여 각 지자체의 개별 조례 및 종합 혁신성을 측정하고자 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
 - 혁신자 및 초기채택자 확인, 확산 경향과 속도 등 비교
 - 선행연구에서 1개 개별 조례의 도입여부, 또는 여러 다른 정책목적의 조례의 종합 혁신성 연구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혁신성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경험적 연구 실시
 - 변량(variation)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술적/설명적 연구에서의 활용가능성 확인

V. 결론 - 계속

■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방향

1) 기술적, 탐색적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방향

➤ 정책혁신 영향요인 연구

✓ 내부결정요인 : 정부 내부역량(지자체장, 조직역량), 외부역량(도시특성-유형, 경제적 수준, 시민사회/협의회 영향); 정책도구의 조합(대체적, 보완적 관계)

✓ 확산 요인 : 수직적(중앙, 광역), 수평적(지리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인접성); 제도적 동형화(강제, 모방, 규범); 정책 혁신집단의 영향 등

➤ 효과성 분석 - 지속가능발전 지표 활용

V. 결론 - 계속

2) 기존 정책혁신성 지수로는 조례 내용의 혁신, 유사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조례 내용분석을 통해 제도적 동형화, 정책도구 혼합 등 연구 심화

3) 본 연구에서 지자체별 조례의 최초 채택을 기준으로 측정

➤ 폐지, 개정 데이터를 취합하여 정책변동 연구 접목 고려

참고문헌

- 김혜정. (2006).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위한 지역 역량. 한국정책학회보, 15(3): 73-99.
- 문승민·나태준. (2015).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 확산과 네트워크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2): 235-262.
- 유한별·나태준. (2019).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2): 47-70.
- 장석준·노종호·김대진. (2015).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와 정책확산의 양상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조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3): 221-260.
- 김병완. (202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 조근식. (2014).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 혁신성 고-저에 따른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55-88.
- Berry, F. S. & 김대진. (2010).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19(4): 75-113.
- Berry, F. S. & Berry, W. D. 1990.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395-415.
- Boushey, G. 2010. Policy Diffusion Dynamics in Americ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Maggio, Paul J., &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Jensen, Jason. 2003. Policy Diffusion through Institutional Legitimation: State Lotter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 521-541.
- Mintrom, M. & Vergari, S. 1998. Policy Networks and Innovation Diffusion: The Case of State Education Reform. Journal of Politics, 60(1): 126-148.
-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 New York: The Free Press.
-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The Free Press.
- Walker, J. L. 1969.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880-899.

감사합니다.

박선주

sunjpark@knu.ac.kr

[토론문1]

신기원(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I. 세 분의 발표내용을 읽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과 과제 그리고 대학에서 지속가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 및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확산하려는 입장 등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기회를 가짐.

II. 개별 논문 토론

1. 이창언교수: 지속가능발전 선도국가 및 이클레이 회원도시 국내외 분석

1)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발표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 특히 번역을 통해 현실적인 내용과 정보를 알려주신 노고 치하

2) 방대한 내용을 제공하다보니 정리가 안되고 혼재·중복된 부분이 있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개념 설명에 치중한 점도 있음. 도표를 통해 정리를 하면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예: 일본·중국·한국 간 차이, 혹은 유럽연합국가 차이 등).

3) SDGs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국가이고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속가능성은 있는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4) SDGs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과제를 9가지 제시하였는데 우선순위 순인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5) SDGs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 지자체 SDGs 추진모델 평가기준표의 단계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지자체수준을 토론자는 1단계(SDGs 이해)로 보는데 발표자는 몇 단계로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충남 당진시의 경우 2단계(대응체계)에 나온 ④ 전담부서 설치가 지방선거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담당관체제에서 팀장으로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6) MZ세대들에게 SDGs의 가치를 전파하고 확산시켜 SDGs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박현옥교수: 대학의 지속가능한 인재를 위한 혁신사례

1) 대학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새로운 접근으로 대학평가기준과 평가과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가 타 대학에 시사하는 바가 많음

2) 사회서비스대학 개설 이후 학과별 입학정원과 입학율 및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졸업생의 (예상)진로는 어떻게 되며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3) 비교과 과정의 영역 별(몸, 맘, 뇌) 강좌를 개설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예: 마카롱 전문가 자격증과정과 바리스타 취미과정이 맘(인성)영역은 애매한 점이 있음).

4) 2019-2022 성과와 관련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언급되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5) 3. 세계시민사회와 SDG: 교과목개요에서 「SDGs의 영역별 탐구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토론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시민으로서 우수한 역할, 혁신적 방향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과목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이고 구체적인 과목들이 있는가

6) 사회서비스대학 내 개설된 학과들이 새로운 접근에서 제시한 6가지 기준(산업적응, 기업가정신과 가치, 윤리적 가치, 학생 교류 및 개방성, 위기관리,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보)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7) 대학교과과정에 ESG교육을 강화하여 ESG를 아는 소비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며 대학 내에서 학생들 스스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노력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3. 박선주교수: 지속가능발전 관련정책 확산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1)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조례 9개를 중심으로 조례 채택/확산 양상을 살펴보고 자치단체별 정책이 확산되는 특징 기술함.

2)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발제가 이루어져서인지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왜 자치단체별로 속도차이나 다양성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지방정부 간 정책 확산(조례 채택)기제가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음.

3) 지속가능발전 관련정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9개로 정해 제시하였는데 관련기준(저탄소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내용 참고)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4) 연구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기술하였는바, 토론자도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연구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음.

5) 지속가능발전 관련정책이 왜 정책혁신과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는데 도움.

[토론문2]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 소장)

1. SDGs 선도국가사례 : SDGs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이창언)

- o SDGs 관련한 세계적 동향과 확산의 기회구조를 방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함
- o 특히, 재원조달 보고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을 잘 조절하기 위해 세금을 잘 활용할 것을 촉구한 부분은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임. ‘탄소세의 신설과 활용’의 예처럼 전환기에 세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o 또한 말뚝에서 개최된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다섯 가지 도시 비전(저탄소 도시, 자연기반도시, 자원순환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중심의 공정한 도시)에 대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o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이기도 한 ESG 본격화로 향후 민관산학의 협력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기업들이 단순 홍보 도구, ESG 워싱으로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o 기업과 지역사회, 대학 등이 SDGs와 ESG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나와야 함. 그런 의미에서 발제문 중 일본 나가노현 지원제도가 흥미로웠음. 우리도 다양한 혜택 등을 착안해 볼만함
- o SDGs 달성의 제약과 열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음. 조심스럽지만 저의 생각은 이제는 SDGs에 대한 가치와 제도 담론 등에 대한 과잉논의에서 벗어나는 것과 SDGs의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것임. 담론과 주장만 무성하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임

2. 대학의 지속가능한 인재를 위한 혁신사례 (박현옥)

- o 위기와 전환의 시대, 기존의 교육과 인재상에 대한 환기와 재고할 수 있는 접근과 관점을 제시해줘서 흥미로웠음
- o 새로운 접근으로 '세상(사회) 실제 영향력'의 적용이 중요하고 그것이 사회적가치 실현과 임팩트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임. 지속가능발전도 구호가 아닌 실제로 세상을 작게나마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초점을 뒀야 한다는 맥락으로 연결하고 싶음
- o 100세 시대, 지역사회 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 측면에서 민관산학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인재양성은 중요함. 이를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의 난제와 지역문제 해결까지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o 지속가능발전은 추구해야할 가치이며 목표이고, 방법론으로 사회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음. 예를 들자면 '소셜리빙랩'을 통해 개발된 '소셜서비스'는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이행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o 대학은 지역과의 상생이 답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지역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대학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방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하는 아카데미'로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확산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박선주)

- o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9개 조례의 채택여부와 조례의 확산 양상을 비교분석하여 혁신성을 도출한 결과가 매우 흥미롭고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함
-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확산과 제도화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함

- 종합 혁신성 지수 상위 20개 지방정부 중 15개가 광역이고 5개가 기초임. 법제도의 도입은 광역정부가 기초정부보다 우선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따라서 광역과 기초를 분리하여 비교하며 지방자치 현장에 더 유익할 것임
- 조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때 몇가지 의미 있는 분석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권한과 역할, 인력과 예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광역도, 시군, 자치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
 - 입법의 성격이 서로 다른 ‘기본조례’와 ‘지원조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
 - 조례의 입법주체가 집행부나 의원이나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
- 지방조례의 확산 양상을 분석할 때, 주요 행위자인 지자체장의 역할과 입장,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방향(대통령의 역할), 해당 조례의 근거법인 모법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겠음. 9개 조례의 그래프 중 일부를 살펴보면,
 -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선언 시점에 선도 지방정부가 나타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확산하였음을 볼 수 있음. 중앙정부의 동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사례임
 -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는 지속법 제정이후 선도 지방정부가 나타났으나 녹색성장법 제정으로 지속법이 격하되면서 확산이 주춤하였음. 그러나 국제사회의 SDGs의 채택이후 다시 확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지방정부의 동력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에너지기본조례는 원전 논쟁이 커지면서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에너지기본법 제정 운동이 활발한 시점에 선도 지방정부가 나타났으며 에너지기본법 제정이후 조례 제정도 서서히 증가하다가 녹색성장법 제정시 에너지법으로 격하되면서 일시적으로 조례 제정이 주춤하거나 줄어든 경향을 볼 수 있음

- 자원순환기본조례도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음
- o 후속연구 방향에서 밝힌 영향요인, 확산요인 연구 등이 이어진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확산에 매우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제2세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융합적 연구와 사례

- 좌 장 :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발표1 : 송만용 (동서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
- 발표2 :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 지속가능성 관점의 도심부 높이 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 무등산 조망 관리 사례
- 발표3 : 김금녕 (홍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홍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유형분석 및 지속가능전략
- 토론1 : 오치규 (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2 :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

-동서대학교 성과를 중심으로-

송 만 용 (동서대학교 교수)

장 주 영 (동서대학교 교수)

서 한 석 (동서대학교 교수)

- 목 차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주요개념 및 이론적 배경

- 1) 디자인의 개념의 변천
- 2)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발전
- 3) 선행연구

III. 동서대학교 지속가능 디자인의 성과 및 분석

- 1) 디자인 교과과정과 SDGs
- 2) SDGs 활동과 성과
- 3) SDGs 성과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을 동서대학교의 디자인대학과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소장 장주영, 이하 아미연

으로 약칭함)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성과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서대학교는 국내에서 8번째로 SDSN(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공식회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대학 디지털미디어전공(구 광고 디자인루트)은 <2021 졸업작품전>은 “DSU+SDGs”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아미연을 중심으로 SDGs 관련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함고 동시에 아미연 소속으로 SWDGs센터(센터장 이명희)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SDGs의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t)’에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념이다. 또한 현 세대의 개발과 발전이 미래세대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위해 현재 인간의 불평등과 자연환경의 과도한 개발과 자원고갈을 방지하고자 하는 범세계적인 위기의식의 공유와 연대의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이후 많은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다가 2015년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즉 SDGs를 설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이 제정되어 그동안 “전세계 142개국 중 136위라는 낮은 한국의 지속가능성 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부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¹⁾

그러나 아무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무조정실에 의해 정책간의 조정기능이 부여되어 미래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곤 하지만, 부처간 협력과 융합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각기 다른 정당성(?)으로 한쪽은 개발을 다른 한쪽은 보전을 주장하여 결국 +, -로 인하여 결과가 0이 되는 제로섬(zero-sum)의 상황이 현재에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간의 제로섬을 벗어나고 지속과 발전의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발전’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 해결책으로 본 연구자는 ‘지속가능한발전’의 개념에 디자인의 결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ility Design)’이

1) 한상운, 대전환의 시대: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 KEI포커스, 2022, p.2

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관찰과 모색 과정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사용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환경·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많은 해결책을 제시”²⁾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지속가능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건축과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성과는 무엇이며 한계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을 본 연구에서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지털미디어전공(구 광고디자인루트)의 <2021 졸업작품전>의 작품과 아미연의 SDGs 성과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와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지털미디어전공(구 광고디자인루트)의 <2021 졸업작품전>과 아미연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 디자인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전공심화교육 + 주제중심의 Crossover 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Crossover 융합교육의 중심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조응하는 (디자인 전공교과)내용의 지속적인 탐색을 위하여 다양한 창의융합 모듈과 ‘마이크로디그리’ (micro degree)³⁾ 과정으로 ‘부산디자인’, ‘SDGs: 지속가능디자인’ 등을 개설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미연은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소속의 연구소로써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관한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SDGs의 가치와 특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DGs 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SDGs를 부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구방법론으로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문헌연구를 통

2) 남미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유형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3, p.82

3)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는 학점당 학위제로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학사학위와 별개로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평가지표를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평가지표는 “현재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⁴⁾인 맥도너와 브라운가르트(McDonough & Braungart)가 제시한 ‘하노버 원칙(The Hannover Principles)’⁵⁾을 중심으로 ‘C2C(Cradle to cradle)’⁶⁾, 다체프스키 ‘Datchefski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⁷⁾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 경영관점인 ‘TBL(Triple Bottom Line)’⁸⁾ 등을 비교 검토 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주요 평가지표 <표 1>			
The Hannover Principles	C2C	Datchefski	TBL
환경영향의 최소화 (Re-fine)	원료의 유해성 (Material Health)	안전성(Safe)/ 효율성(Efficient)	환경적 가치 (Planet)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 접근방식(Re-design)			
물질의 순환성(Re-cycle)	순환경제(재활용성) (Circular Economy)	순환성 (Cyclic)	경제적 가치(Profit) -기업의 유지와 경제성
인간과 자연의 공생 (Re-think)	사회적 공정성 (Social Fairness)	사회성 (Social)	사회적 가치(People)-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수자원 관리 (Water Stewardship)		
	친환경 에너지 (Renewable Energy)	에너지성 (Solar),	

4) 한양모, 배정민, 전유미, 포스트 지속가능 디자인으로서 정신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개념의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p.512

5) William McDonough, & Michael Braungart, The Hannover Principles: Design for Sustainability, William McDonough Architects, 1992, p.5. 재인용

6) https://s3.amazonaws.com/c2c-website/resources/im_pact_study_technical_report.pdf 재인용

7) 한유림·남택진, “지속가능제품디자인의 평가방법 및 결과표시방법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4, p.194

8) 김보영, “지속가능디자인개념 확장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10, pp.296-297

특히 하노버 원칙이 다른 평가지표보다 돋보이는 것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 접근방식(Re-design)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주요한 평가지표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향의 최소화(Re-fine)’은 중요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원칙이지만 재료 등 원인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평가지표에서는 ‘디자인 재료’로 구체화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안된 각 ‘지속가능한 디자인’ 평가 항목은 1) 디자인재료의 친환경적 안전성 및 유해성, 2)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적 문제해결 접근, 3) 재활용 등 물질의 순환성과 경제성 4)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공생 관계 5) 친환경적 에너지의 활용이다.

II. 주요개념 및 이론적 배경

1) 디자인의 개념의 변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산업화에 의한 대량생산과 일상생활용품이라는 틀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량생산 = 대량소비 = 폐기’인 프로세스를 밟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시기에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문제는 엘리트 시대정신으로써 디자인이 2차 세계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주도권, 즉 디자인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촉진한 매개체로 사용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경영의 결정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디자인이란 단순히 제품화를 위한 부가적인 미적표현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엘리트층이 누릴 법한 럭셔리한 대상을 만드는 도구로 인식되기도 한다.⁹⁾ 그러다보니 ‘디자인된 제품 =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디자이너가 브랜드가 된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플라스틱(plastic)¹⁰⁾이 최고의 디자인 재료가 되면서 이전까지

9) 오은영, 나건, 지속가능 문화정착을 위한 지속가능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5, p.58

10) 플라스틱은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했으며, 열과 압력을 가해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화합물이다. 이 플라스틱 물질은 1856년 영국 버밍엄의 Alexander Parkes에 의해 특허를 받았고 런던의 1862 <국제

잠재되어 왔던 문제가 부각되게 되었던 것이다. 값싼 재료비, 자유로운 성형 및 채색으로 인하여 기업생산 상품에 있어 최고의 디자인 재료가 된 플라스틱은 초기 디자이너가 꿈꾸었던 대량생산에 의한 일상생활의 상품의 구현이 가능한 디자인 유토피아를 열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섞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더욱이 1960년대 이후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소비주의와 접목되어 상품에 의한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축소로 인한 무분별한 폐기물이 쌓였다는 것이다. 섞지 않는 디자인 제품은 사후 관리가 아닌 단지 버려졌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환경문제 발생하게 됨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플라스틱과 과잉생산에 의한 생태환경의 위기는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2)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발전

이러한 현실세계의 환경과 생태학적 위기에서 제안된 것이 지속가능성이다. 사실 지속가능성은 원래 생물학에서 말하는 자연의 회복능력을 고려한 자원활용 및 제한을 두어 현재와 미래세대의 연속성을 갖고자하는 생태학적 영향에서 등장한 개념이었다. 이렇게 생태학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1972))을 설립과 「인간환경선언(1972)」 그리고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생태학적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주장한 이후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 (WCED)에서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사용되어¹¹⁾ 오늘날 UN SDGs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¹²⁾ 다만 이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Fenichell, Stephen (1996). 《Plastic : the making of a synthetic century》. New York: Harper Business. p.17 재인용

11)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은 고정된 조화 상태가 아니라, 자원이용과 투자방향, 기술 발전의 방향설정, 제도변화가 현재의 욕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변화의 과정...”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8.

12) 이러한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관해서는 판엔니, MUJI 디자인에 나타난 근원 의식과 지속가능한 생태디자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박사논문, 2022. pp. 29~31 참조바람

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욕구는 선진국들의 환경보호와 개발도상국의 발전욕구가 결합된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최근 국내에서 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 2조 1항에 잘 나타나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UN 지속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한국의 ‘지속가능기본법’처럼 제도적인 정책적 조율도 필요하겠지만 개념적 정책을 현실화하는 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¹³⁾의 개념에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에밀리 필로톤(Emily Pilloton)은 디자인은 “... 사회측면의 효과를 기대하며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디자인이 활용되는 활동이 필요”¹⁴⁾가 있음을 강조한데서도 지속가능성에 디자인이 필요함을 잘 알 수 있다.

3) 지속가능한디자인 개념과 특징

이러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UN SDGs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가 필요로 하는 환경적 요소들을 제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앤 칙(Anne Chick)과 폴 미클레스 웨이트(Paul Micklethwaite)는 <Design for Sustainable Change>¹⁵⁾에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지속가능한 아젠다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하여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튜어트 워커(Stuart Walker)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쟁점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20세기

13)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에 관해서는 남미경, ibid, p.81을 참조 바람

14) Tom Wujec, Imaginedesigncreate, Autodesk, 2011, p.71.

15) Anne Chick & Paul Micklethwaite, *Design for Sustainable Change, How Design and Designers Can Drive the Sustainability Agenda*, AVA Publishing, 2011, p.165

후반에 강조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과 원리가 적용되는 디자인이라고 하였다.” 16)

나아가 에릭 벤슨 Eric Benson이 주장하길 “디자이너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변화를 선도하는 디자이너의 힘은 강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면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의 미래상을 예비할 수 있게 될 것” 17)이라며 지속가능한디자인의 목적과 디자이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기본 목적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연환경과 사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모델과 제품 및 서비스를 지양하는 것이다.” 18).

이렇게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으로는 공공성에 기반한 환경적인 측면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그린 디자인(green design)과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에티컬 디자인(ethical design) 그리고 소재를 통해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리사이클 디자인(recycle design), 업사이클 디자인(upcycle design) 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이들은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에서는 연관이 있으나 지속가능한디자인은 “숙련되고 섬세한 디자인을 통하여 환경에 위해(危害)한 영향과 요소들을 완벽히 제거하려는 것” 19)으로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소재와 디자인, 생산 프로세스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 20)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C. 화이트Chad White는 “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디자인의

16) Walker, Stuart, *Sustainable by Design: Explorations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Earthscan, 2006, pp.29-30

17) Aaris Sherin, 「Sustainable」, 우정준 역,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지침서』, 디자인 리서치 앤 플래닝, 2009, p.19

18) Fuad-Luke, Alastair, *Re-defining the purpose of (sustainable) design: enter the design enablers, catalysts in co-design, Designers, Visionaries and Other Stories*, London: Earthscan, 2007, pp.18-52

19) McLennan, J. F. 「The Philosophy of Sustainable Design」, Little Brown, 2004, p.27,

20) Aaris Sherin, *ibid*, p.13

역할을 선행단계의 활동으로부터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기까지의 폭넓은 과정에 대한 복잡한 고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프로세스로 (지속가능한)디자인의 영역을 확장시킨다고 하였던 것이다.²¹⁾ 그러다 보니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과거 디자인이 갖고 있던 기능중심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에서 벗어나 디자인 과정(process), 사용자 경험(experience)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다만 현재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전개에서 아쉬운 점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선진국의 재능기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스트라우그룹의 “Q드림”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의 진행은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생태학적 기반과 사회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 사회 흐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디자인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현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는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디자인이다.”²²⁾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선진국들의 재능기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보편적인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아젠다임으로써 생태학적 기반의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함께 공유하려는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반영된 디자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현재 국내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의 주요 특징은 공간과 환경디자인 그리고 건축을 중심으로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전략과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풍수

21) Chad White, Aligned for Sustainable Design,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2008. p.3,

http://www.bsr.org/reports/BSR_Sustainable_Design_Report_0508.pdf

22) 이주형, 박영순, 정의철,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별 활용가능한 친환경 지속가능 디자인가이드 라인 개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2, p.469

사상과 연계한 은덕수, 최성호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풍수(風水, Feng-Shui)이론에 대한 고찰,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0은 지속가능한디자인이 추구하는 것이 풍수사상이 추구하는 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이 되는 연구도 있다. 주요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선행연구 <표 2>					
저자	판엔니	제목	MUJI 디자인에 나타난 근원 의식과 지속가능한 생태디자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발행처	동서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2022
주요내용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동양철학의 선(禪)사상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디자인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통해 MUJI 디자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MUJI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지속 가능한 생태 디자인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이다.				
저자	한왕모 배정민 전유미	제목	포스트 지속가능디자인으로서 정신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개념의 고찰	발행처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2018
주요내용	연구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디자인이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한 연구이다. 정신성의 추구가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내재 가치로 수용될 때, 이것이 포스트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형태가 될 것으로 상정하고, 그 방법론의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선행연구 <표 2>					
저자	오은영 나 건	제 목	지속가능 문화정착을 위한 지속가능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발 행 처	디지털디자인 학연구/ 2015
주요 내용	지속가능 디자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환경, 경제,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세 요소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개이자 수단적 역할로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접근을 고찰한 연구				
저자	남미경	제 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유형 분석	발 행 처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2013
주요 내용	지속가능디자인이 환경과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유형분석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을 논하여 국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자인 영역의 이론적·체계적 분석에 의미가 있는 연구				
저자	이주형 박영순 정의철	제 목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별 활용가능한 친환경 지속가능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발 행 처	한국디자인 트렌드학회/2012
주요 내용	지속가능 디자인의 원칙에 반영할 가이드라인에 디자인 프로세스, 컨셉 개발, 시스템레벨 설계, 검사 및 양산의 과정에 따라 필요함과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디자인에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 연구				
저자	*8김보영 김선아	제 목	지속가능디자인 개념 확장과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발 행 처	디자인학연구 / 2010
주요 내용	먼저 지속 가능디자인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그린, 재활용 디자인의 개념을 넘어선 진화된 지속가능디자인의 올바른 정의와 역할을 제시한 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전사적인 지속가능디자인 활동 사례를 기반으로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를 통합한 성공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기업 차원의 지속가능디자인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단행본, 즉 김수봉,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사례 (2017)』, 박영사이 있지만, 대부분 외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고 국내 대

학 및 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로는 김별, 한창호의 지속가능 디자인의 영속성, 일시적 문화 산물 기준의 상관성 연구, 2012가 있지만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공간적 분석은 의미가 있으나 다양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양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및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의 SDGs 성과를 중심으로 국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 나아가서 한계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동서대학교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성과와 분석

1) 디자인 교과과정과 SDGs

우리는 앞장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국제적인 디자인환경과 인식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과정을 개편(2021)하였다.

기존 디자인학부의 4개의 전공(시각, 환경, 제품,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패션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그리고 건축학과가 하나가 되는 종합 디자인대학이 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전공심화교육과 주제중심의 CROSSOVER 교육의 결합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창의융합모듈과 '마이크로디그리' (micro degree) 과정으로 SDGs: 지속가능디자인 등을 개설하였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는 수강학년의 제한이 없이 다양한 학년의 융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교수 2인에 의해 운영된다.



그림 1 동서대 디자인대학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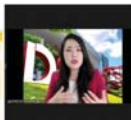

이러한 동서 디자인대학의 새로운 교과과정에 의해 ‘SDGs:지속가능 디자인’ 마이크로디그리가 개설되었는데 최초 1개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2개분반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SDGs:지속가능 디자인’은 아미연의 SDGs센터와 연계하여 향후 동서 대학교 지속가능디자인에 대한 개념 및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실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SDGs 활동과 성과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과 아미연에서 실시한 SDGs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주요 활동사항²³⁾은 국내에서 8번째로 SDSN(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공식회원 승인(2021.05.13.)이 됨으로 인하여 2021년도 SDSN의 활동과 자체적인 SDGs 활동이 전개되었다.

23) 본 자료는 기본적으로 서한석교수가 작성한 표에 몇가지를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동서대학교와 아미연의 SDGs 주요 활동 <표 3>		
구분	주요내용	자료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Design International Awards 2022 - 큐슈대학, SDGs Design Unit, 동서대학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공동주최 - 작품응모기간 : 2022.06.01.~ 9.30 - 시상식 : 2022.11.12.(토) - 테마 : 질높은 교육 (교육×문화, 아트, 디자인, 첨단기술) 	<p>디자인으로 세계를 바꾸자!</p>  <p>SDGs Design International Awards 2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인문학포럼 - 2022. 03. 31(목) 18:00 ~ 20:00 온라인 zoom - 강연자 : 김애진(동서대 민석교양대학 교수) - 강연주제 : SDGs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디자인 교육과정 설계 및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동서대학교와 아미연의 SDGs 주요 활동 <표 3>		
구분	주요내용	자료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인문학포럼 - 2022. 05. 26(목) 18:00 ~ 20:00 온라인 zoom - 강연자 : 강도욱 (맘보싸와싸와 대표이사) - 강연주제 : 지역문화 기반 SDGs 국제개발협력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봄학술대회 - 2022.06.08.(수) 온라인 Zoom - 강연자 : 김애진(동서대 민석교양대학 교수) - 강연주제 : ESDGs24)에 따른 대학교양교육사례 	<p>대학에서 SDGs 교육 강화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봄학술대회 - 2022.06.08.(수)~15(수) 온라인 Zoom - 강연자 : 민세희(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박진호(고려대학 연구교수) 강연 등 - 강연주제 : 지역문화의 디지털전환과 지속가능한 디자인 <p>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SDGs디자인유닛 공동연구 협약</p>	

동서대학교와 아미연의 SDGs 주요 활동 <표 3>		
구분	주요내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대학, 지속가능한 디자인2 교과목 - 2022.06.18.(토) 10:00~12:00 온라인 Zoom - 참가대학 : 한국 동서대학, 울산대학교, 일본 규슈산업대학 - 강연자 : 古川 隆邦(후루카와 류호) - 강연주제 : 부산+울산+후쿠오카 SDGs프로젝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과제와 해결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대학, 지속가능한 디자인2 교과목 - 2022.07.16.(토) 10:00~12:00 온라인 Zoom - 참가대학 : 한국 동서대학, 울산대학교, 일본 규슈산업대학 - 강연자 : 이채진(코끼리공장 대표) - 강연주제 : 부산+울산+후쿠오카 SDGs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인문학 포럼 - 2022. 07.18(월) 11:00 ~12:00 온라인 zoom - 강연자 : 김병완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강연주제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지속가능한 디자인사고의 중요성 	

구분	주요내용	자료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가을학술대회 - 2021.12.06.(월)~10(금) 온라인 Zoom - 강연자 : 이노우에 시게키 (규슈대학 SDGs디자인유닛장) 최성호(공공디자인학회 회장) 강연 등 - 테마 : Design for Good Impact : SDGs(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24) ESDGs는 2019년 이후 유네스코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사업 전략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프로그램을 말한다.

구분	주요내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대학, 국제교류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2021.10.29.(금) 온라인 Zoom - 참가대학 : 한국 동서대학, 울산대학교, 일본 규슈산업대학 - 강연자 :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동서대 석좌교수 - 테마 : 세상의 변혁(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SN(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공식회원 승인 (국내 8번째) 2021.05.13 - 동서대학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2021.04) - 지구촌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 방법으로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광고디자인루트’ 졸업작품전 - 강연주제 : SDGs + Design - 전시기간 : 2021.9.8.(수)~12(일) - 기후변화 플로깅 캠페인, VEGAN TIGER(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 유학생과 한국학생들간의 소통문제 해결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아동정서학대 예방 캠페인 ‘클로오공모전’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봄학술대회 - 2021.06.07.(월)~11(금) 온라인 Zoom - 강연자 : 에치오 만치니(밀라노공과대학 명예교수) ASIA DESIS Lab Network 패널토론회 (아시아 6개국 8개 대학 각 Lab의 활동사항 공유 등) - 강연주제 : 사회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대학, 국제교류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2021.06.~12 온라인 Zoom - 참가대학 : 한국 동서대학, 울산대학교, 일본 규슈산업대학 - 테마 : SDGs(순환디자인) - 2개국 3개 대학 학생워크숍 및 SDGs 한일 전문가 특강 	

구분	주요내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미연 디자인인문학포럼 - 2021.07.08.(목) 10:00~12:00 온라인 Zoom - 강연자 : 이창언(난징대 공공관리학과 교수) - 테마 : SDGs와의 대학 :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 	

구분	주요내용	자료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미연 디자인인문학포럼 - 2021.10.20.(수) 18:00~20:00 온라인 Zoom - 강연자 : 김병완(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 테마 : SDGs의 의의와 생활 속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프로젝트 - 2021.12.20. 결과물 성과보고회 - 부산 ‘히려울문화마을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프로젝트’ - 참가학생 : 30명 7개팀으로 구성 - 려여울문화마을 번영회 및 업체 6곳에 대한 문제점 발견, 디자인관점에서 신규 아이디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with Dongseo University(실천사항 동영상 제작) - 2021.12.09.(수) 온라인 Zoom - 디자인대학 학부 1학년생, SDGs 가치 동참 선포 - 학생들과 디자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 접근. 지역과 세계와 소통 	

그리하여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과 아미연에서는 SDGs관련 초청강연회는 외국인 발표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학술대회는 외국인 발표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를 실시하였다. 그 외 국제세미나는 총 4회를 실시하였고 SDGs주제의 졸업작품전 1회, 부산 지역사회에 대한 SDGs 적용 및 지원 프로젝트 1회, SDGs 선포식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9월 16일까지 SDGs 국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3) 지속가능한 디자인 평가 분석 : 2021 디지털미지어디자인 졸업작품전

매년 진행되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의 졸업작품전 중에서 디지털미지어디자인(구 광고디자인루트) 전공에서는 2021 졸업작품의 테마를 “DSU×SDGs”로 잡고서 UN SDGs의 17개 세부목표와 창업영역에 대한 설명이라는 부제로 지구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먼저 SDGs 17개 주제와 졸업작품전의 개별 주제와 비교하여 분류를 해 보았다.²⁵⁾ 분류의 결과를 보면, 졸업전에 참여한 14개 팀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는 SDGs의 목표 3번 ‘건강과 웰빙’, 즉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에 관한 주제로 5개 팀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는 SDGs 목표 10, 즉 ‘불평등 해소’가 있었다. 2개 팀이 참여한 SDGs는 12, 즉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이다. 그 외 SDGs 목표 4, 11, 14는 1팀씩 나왔으며 졸업작품전 주제가 SDGs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주제에서 벗어난 팀도 1팀도 있었다. 그리하여 참여한 14개 팀의 작품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평가지표에 맞추어 얼마나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어떤 부분이 평가될 수 있는지를 나아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범주를 고찰하고자 한다.

25) 분류는 먼저 2021 졸업작품전 지도교수 서한석교수와 본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본 연구자 입장에 따랐다. 특히 졸업작품전에서 아동정서학대 캠페인 광고를 SDGs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로 분류하였으나 아동정서학대는 제도적인 것이기 보다는 불평등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SDGs 10으로 분류하였다.

구분	내용	평가지표 결과				
		①	②	③	④	⑤
일비 - SDGs 3	작품 이미지					
	컨셉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캠페인성 영상 촬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것				
하비비시리아 - SDGs 4	작품 이미지					
	컨셉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의 시선과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난민의 심각성과 난민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누구나 어떤 상황속에서도 교육은 멈추지 말아야만 한다는 메시지 전달				
	평가	SDGs ④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외의 평가지표에는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의미 부각에는 아쉬운 작품이다.				

구분	내용		평가지표 결과				
			①	②	③	④	⑤
S2C-SDGs 10	작품이미지	 	×	×	×	○	△
	컨셉	국가 및 국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의 문제를 국내 유학생과 한국 학생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이 공존하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인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한다.					
	평가	국내에 있는 유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편과 불평등을 인사를 통해 해소하여 다양한 사람들간의 소통과 공존을 유도하는 캠페인					
평가지표	① 디자인재료의 친환경적 안전성 ②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적 문제해결, ③ 재활용 등 물질의 순환성과 경제성 ④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공생 관계 ⑤ 친환경적 에너지의 활용						
구분	내용		평가지표 결과				
			①	②	③	④	⑤
Sminun-SDGs 12	작품이미지	 	×	○	△	○	△
	컨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곧 환경운동이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발이라는 메시지 전달					
	평가	구체적인 SDGs 12에 속할 수 있지만 재활용, 건강, 친환경에너지 등 세부목표들이 혼용 설정이 되어 있어 주제가 모호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운동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메시지가 다소 약한 것이 아쉽다.					
평가지표	① 디자인재료의 친환경적 안전성 ②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적 문제해결, ③ 재활용 등 물질의 순환성과 경제성 ④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공생 관계 ⑤ 친환경적 에너지의 활용						

이상의 2021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졸업작품전을 분석해본 결과 본 연구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평가지표에서 ②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적 문제해결과 ④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공생 관계에 해당하는 작품이 가장 많았다. 다만 지속가능한 디자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도 발전을 기대하는 것인데 ② 경제적인 관점과 ⑤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① 친환경적인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제성, 에너지, 재료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현재 지속가능한 디자인 교육에 있어 맹점으로 보아진다. 이것은 SDGs가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는 점과 디자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학제적 융합적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마이크로디그리 수업이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힌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동서대학교 디지털미디어전공의 2021 졸업작품전과 아미연의 SDGs 활동을 중심으로 국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성과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연구가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서대학교가 SDGs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점점 중요해지는 디자인대학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은 먼저 디자인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전공 심화교육 + 주제중심의 Crossover 융합교육”으로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과정을 마련하여 “SDGs:지속가능 디자인”, “부산디자인” 등을 개설 운영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DSU+SDGs”를 주제로 디지털미디어전공이 2021년 졸업작품전을 갖게 되었고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목한 것이 바로 UN SDGs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디자인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다. 그 이유로는 디자인은 공감능력과 융합적 사고의 표현에 세련되고 경제적으로 만족을 줌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변천과정에서 ‘디자인=고급=선진국’이란 디자인의 욕망을 짚고 지금까지 디자인이 무관심하였던 ‘대량생산 = 대량소비 = 폐기’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결코 선진국들의 재능기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보편적인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아젠다로써 생태학적 기반의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함께 공유하려는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반영된 디자인적인 문제해결 방안인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생들의 SDGs와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하여 먼저 SDGs 목표에 따라 졸업작품을 분류를 해보았고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평가 지표’를 통해 2021 졸업작품전을 분석하였다. 평가지표로는 ① 디자인 재료의 친환경적 안전성 및 유해성, ②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적 문제해결 접근, ③ 재활용 등 물질의 순환성과 경제성 ④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공생 관계 ⑤ 친환경적 에너지의 활용이다. 먼저 SDGs 목표와 비교하여 분류를 하면,

1) 졸업전에 참여한 14개 팀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는 SDGs의 목표 3번 ‘건강과 웰빙’, 즉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에 관한 주제이다. 5개 팀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는 SDGs 목표 10, 즉 ‘불평등 해소’가 있었다. 2개 팀이 참여한 SDGs는 12, 즉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이다. 그외 SDGs 목표 4, 11, 14는 1팀씩 나왔으며 졸업작품전 주제가 SDGs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주제에서 벗어난 팀도 1팀도 있었다.

2)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해보면, 평가지표에서 선호하는 지표는 ②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적 문제해결과 ④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공생이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디자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도 발전을 기대하는 것인데 ② 경제적인 관점과 ⑤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① 친환경적인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제성, 에너지, 재료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현재 지속가능한 디자인 교육에 있어 맹

점으로 보아진다. 이것은 SDGs가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는 점과 디자인적으로 해결될하기에 어려운 SDGs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공학과 경영 등 다학제적 융합적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디그리 수업이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힌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동서대학교의 졸업작품을 통해 볼 때, 학생들은 어느정도 SDGs적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학제적 융합이 필요한 타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는 꺼려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보편적 디자인 이슈이다. 그리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통된 행복을 위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갖춘 디자인을 양성되어 디자인에 의해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보영, 지속가능디자인개념 확장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10
- 김수봉,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사례, 박영사, 2017
- 남미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유형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3
- 오은영, 나건, 지속가능 문화정착을 위한 지속가능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5
- 판옌니, MUJI 디자인에 나타난 근원 의식과 지속가능한 생태디자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2
- 한상운, 대전환의 시대: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 KEI포커스, 2022
- 한왕모, 배정민, 전유미, 포스트 지속가능 디자인으로서 정신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개념의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 한유림 · 남택진, 지속가능제품디자인의 평가방법 및 결과표시방법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4
- 2021 광고디자인 루트 졸업작품전, 동서대학교 디자인 대학, 2021
- Aaris Sherin, 「Sustainable」, 우정준 역,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지침서』, 디자인 리서치 앤 플래닝, 2009
- Anne Chick & Paul Micklethwaite, *Design for Sustainable Change, How Design and Designers Can Drive the Sustainability Agenda*, AVA Publishing, 2011
- Fuad-Luke, Alastair, *Re-defining the purpose of (sustainable) design: enter the design enablers, catalysts in co-design, Designers, Visionaries and Other Stories*, London: Earthscan, 2007
- McLennan, J. F. 「The Philosophy of Sustainable Design」, Little Brown, 2004
- Tom Wujec, Imaginedesigncreate, Autodesk, 2011
- Walker, Stuart, *Sustainable by Design: Explorations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Earthscan, 2006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KASD 학술대회

지속가능성 관점의 도 심부 높이관리 방향 연구 : 무등산 조망관리 제안 사례

2022.08.12

정성구 (dr.jeong@grouppcs.kr)

UCL 도시콘텐츠연구소
URBAN CONTENTS LAB

차 례

지속가능성 관점의
도심부 높이관리 방향 연구
: 무등산 조망관리 제안 사례

01 무등산 조망의 중요성

- 도시와 자연, 경관
- 상징으로서의 무등산
- 무등산 조망에 대한 인식
- 소결

02 현황과 실태

- 높이 관련 법규 및 제도변화
- 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문제점
- 종상향의 문제
-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입지 문제

03 국내외 사례

- 특정지구
- 절대높이
- 통경축, 뷰콘
- 새로운 방법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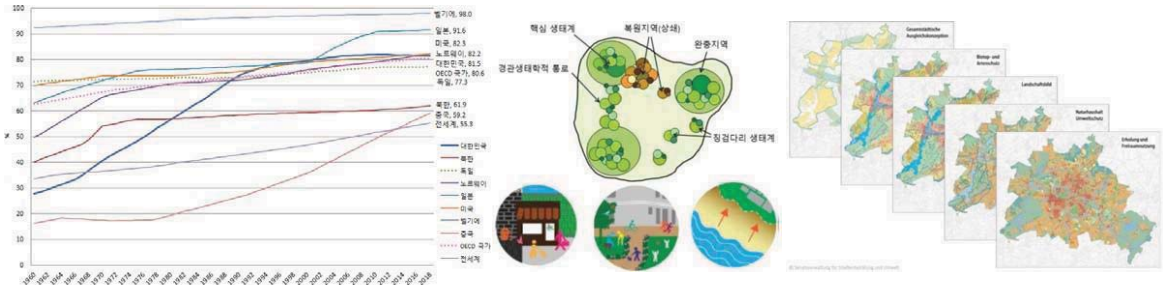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기본방향
- 제도적 방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
 - 용적률 인센티브
 - 종상향 제한지역
 - 용도용적제 개선
- 논의 제안

01 무등산 조망의 중요성

도시와 자연, 그리고 경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생태계 및 경관이 훼손되면서 **자연환경과 도시의 공생(symbiosis)의 중요성** 대두
일상공간에서의 **삶의 질과 도시의 매력**에 자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됨



전 세계 주요국의 도시인구 비율 변화
높은 도시화율과 인구 고밀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명수정 & ①도원 (2019).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 진단과 복원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한 도시화 촉진
훼손된 생태계 복원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 리스크
관리와 회복력 증진

자연 생태계 및 경관의 중요성 베를린에서는 **생태보상제도**가 도시 자연 과 경관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

①송준 외 (2020).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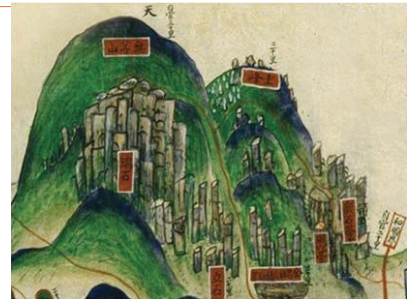
4

01 무등산 조망의 중요성

■ 상징으로서의 무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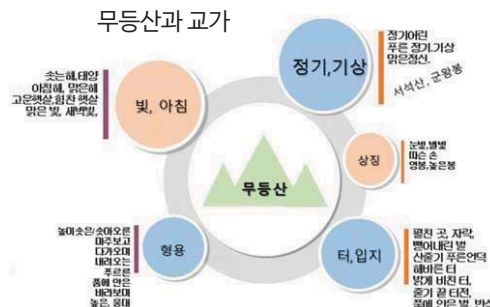
광주시민의 집단적 상징물

- 광주의 정신·삶·역사·문화를 이해하는 모든 단서가 담겨진 **상징 경관**
- 도시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회 공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랜드마크 역할 수행
- 세계지질공원으로 여러 지형 요소가 결합된 복합체로 미지의 잠재성이 크고 **외재화시킬 수 있는 경관**
- 시대와 주체에 따라 위상과 장소성이 변화하는 장소로서 이미지의 내재화로 **지역적 표상**으로 광주와 연계된 존재적 장소



고지도상의 무등산

무등산과 교가



5

01 무등산 조망의 중요성

■ 무등산 조망에 대한 인식_무등산 경관권

무등산 및 주변부의 개발행위 등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로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심각
시민,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행정 기관들은 무등산 경관을 복원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



무등산 자락의 아파트, 빌라 등의 건설 및 제2순 환도로 개설로 인한 자연경관 환경 훼손의 심각성 인지

<https://blog.naver.com/gjktem/222082383333>



무등산 경관 및 생태 복원의 중요성 군시설 및 통신시설 이전, 묘지 및 상가 시설의 이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aid=0010391668>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무등산 보호운동 전개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를 통한 무등산 공유화 재단 사업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5&aid=0001408741>

6

01 무등산 조망의 중요성

■ 무등산 조망에 대한 인식_무등산으로의 조망권

고층 및 초고층 건물들의 도심 난립에 의한 기존 저층 스카이라인이 훼손되고 있음 도시경관의 변화에 따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조망권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광주를 막고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 40층 건축등 제한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57442.html>



도심의 쾌적성 확보와 주민의 일조권·조망권 보장을 위해 고층·초고층 신축 건물 높이 기준 마련 시급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16741.html>



무등산과 영산강변 등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광주다운 도시경관 디자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041115689831>

7

01 무등산 조망의 중요성

■ 무등산으로의 조망, 왜 중요한가

01 녹색도시 광주

- 시대정신은 녹색과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도 ①를 지향하고 있음
- 개발시대 자연환경 훼손의 복원과 생태 보전은 당대의 과제임

03 무등산의 경관 보존

- 무등산 본체는 국립 공원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주변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임
- 무등산의 경관은 자체의 경관 뿐 아니라 도시에서의 조망 대상으로 완성되는 것임

02 광주의 영산 무등산

- 무등산은 광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제1의 자연 대상①자 사회적 장소임
- 무등산은 광주 자연 생태계의 핵심으로써 광주 도시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04 무등산으로의 조망권

- 도로 사선 폐지 ①후 도심부의 고층건물들① 무등산으로의 조망을 심히 저해하고 있음
- 무등산으로의 조망 방해는 환경 문제인 동시에 광주에서는 정신적 사회적 문제①기도 함

8

02 현황과 실태_건축물의 높이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



12

02 현황과 실태 _ 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문제점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유일한 관리 수단이었던 사선제한 폐지로 인해
고층건물 난립 및 일조권 침해 등 문제 야기



13

02 현황과 실태 _ 종상향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문제점



✓ 무분별한 종상향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으로 기반시설부족, 병풍형아파트로 인한 열섬현상,
순환도로변 소음,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 발생



14

02 현황과 실태 _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입지에 따른 문제점

✓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 주거지역과 달리 상업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 수립
- 1,000세대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 건축으로 인해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 첨단지구 상업지역의 경우 1,647세대 주상복합건축물이 동시에 건립되고 있으나, 상업지역으로 인해 학교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 통학거리가 1.4km로 너무 멀고, 여관, 술집, 당구장 등 유흥상가를 지나 통학하는 문제

유흥업소에 둘러싸인 통학로

Jtbc
뉴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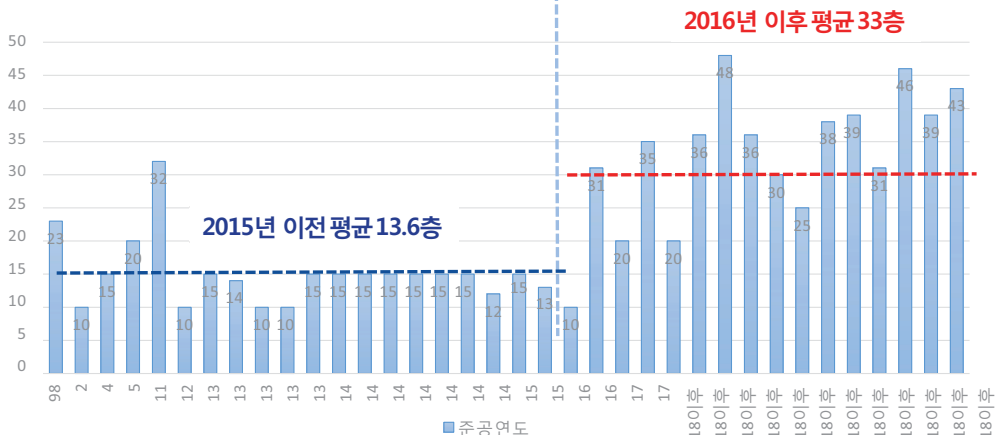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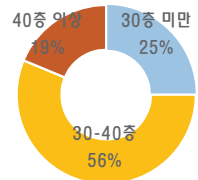
15

02 현황과 실태 _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층수와 세대수 분석

✓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층수 현황 (1998~2018)

- 2015년대까지는 평균 13.6층으로 대부분 15층 규모 (30층 이상이 1곳에 불과)
- 2016년 이후 평균 33층, 최대 48층 으로 고층화 추세 (12곳이 30~48층 규모로 초고층화)

- 2016년 이후 층수 현황
- 30층 미만 4곳 (25%)
- 30~40층 9곳 (56%)
- 40층 이상 3곳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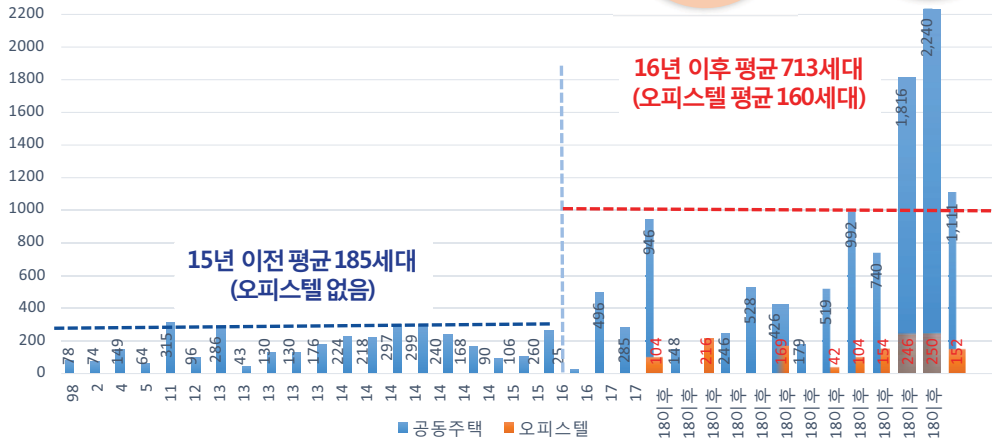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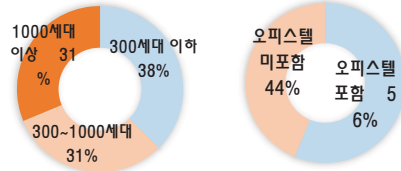
16

02 현황과 실태 _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층수와 세대수 분석

✓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세대수 현황 (1998~2018)

- 2015년까지는 평균 185세대로 대부분 300세대 이하 규모 (300세대 이상이 1곳에 불과)
- 2016년 이후 평균 713세대 (오피스텔 평균 160세대)규모이며, 최근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증가 추세

• 2016년 이후 세대수 및 오피스텔 현황(%)



17

02 현황과 실태 _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입지에 따른 문제점

✓ 상업시설이 없는 상업지역

-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10%조차도 오피스텔로 건축하여, 주거용으로 전용
- 상업지역에 상업기능이 거의 없는 기형적인 도시관리 야기



쌍암동 힐 ○○○트 ○○ 파크
크- 대규모 고밀, 상가확보 필요
- 대지면적 3만7천m², 주거용적률 367%
- 상업용적률 62%(오피스텔)



각화동 ○○파크 ○○○○ 힐스
스- 대규모 고밀, 상가확보 필요
- 대지면적 3만5천m², 주거용적률 301%
- 상업용적률 36%(오피스텔)

18

02 현황과 실태 _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입지에 따른 문제점

✓ 주거지역보다 더 높은 주거밀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20%, 제3종 일반주거 250%
- 광주의 도시계획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의 쾌적성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주월동 양○내○○○

- 대지면적 1만4천m², 주거용적률 448%, 상업용적률 51%



광천동 호○씨○○○○○

- 대지면적 7천 m², 주거용적률 407%, 상업용적률 272%

19

02 현황과 실태 _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입지에 따른 문제점

✓ 토지이용상의 문제

-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용적제' 규정의 모순과 2015년 건축물 높이 사전제한 폐지로 상업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지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학교 부족, 경관 문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되는 토지이용상의 문제 발생

✓ 조망과 경관 훼손, 일조권 피해, 미시기후 변화, 위압감 조성 등

건축물 차원이 아닌 도시 전체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건축과 그 높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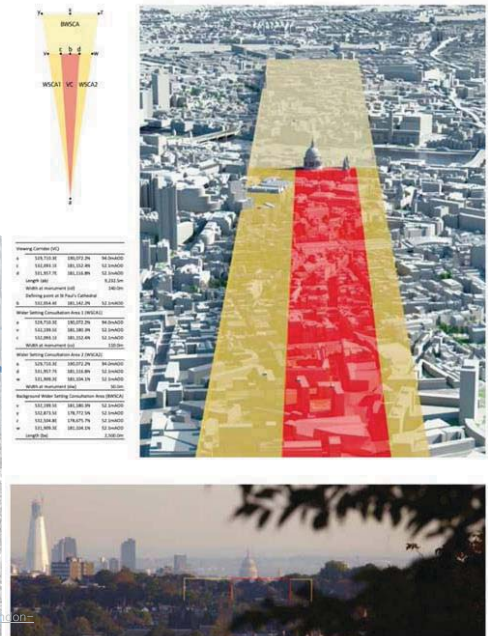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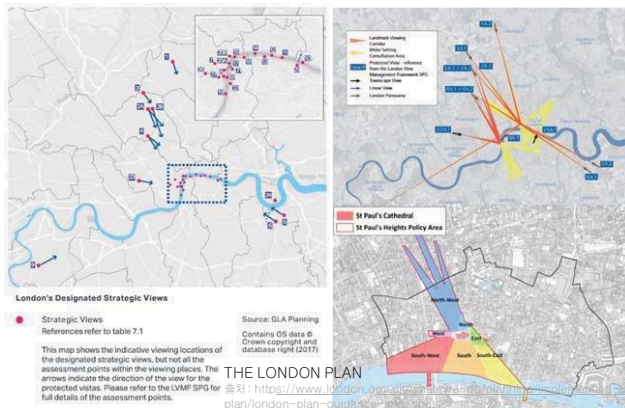
20

03 국내외 사례

특정지구

* 런던 랜드마크 조망권 보호관리계획

- 런던의 조망경관관리체계 London View Management Framework - SPG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는 랜드마크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더 자세한 관리계획을 제공하고 있음
- 파노라마, 선형 조망, 강변 조망, 시가지 조망으로 나누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세인트폴 성당 같은 랜드마크 주변은 경관을 형성하는 도시풍경요소들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 깊게 관리되고 있음



03 국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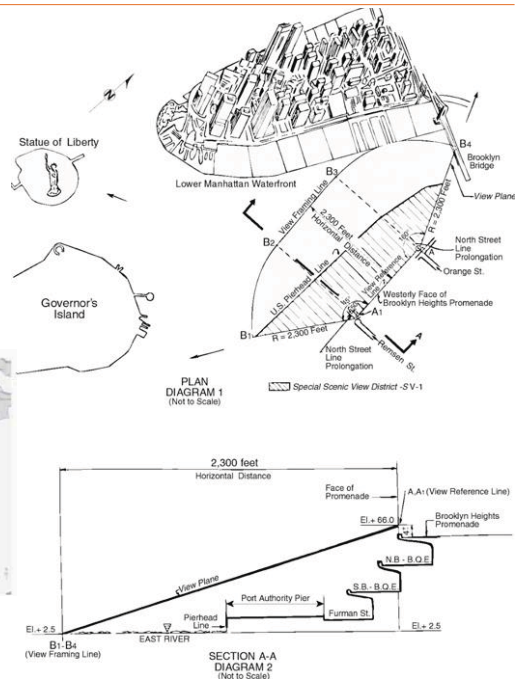
특정지구

* 뉴욕_경관조망지구 (Special Scenic View Districts)

- 공공적 조망 보전계획으로 지역·지구제로 일반 규제 그리고 특별구역 및 주변 ○이미지 정합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 경관조망지구(Special Scenic View Districts, SV)는 공원○나 산책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보○는 주요 도시경관의 조망환경을 보 호할 목적으로 도입
- 경관조망지구는 매우 엄격한 제한○으로 향후 추가적 확대운영은 아직 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뉴욕의 정채설을 규정하는 경관조망지원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 조망경관은 지속적으로 유지 계획



출처 : 서울연구원 (2017). 미국 뉴욕·LA 조닝(용도지역지구제) 운영현황 조사. <https://www.sj.re.kr/node/58240>
백대경 외 (2020).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녹·공간지 기준 수립. 부산광역시



03 국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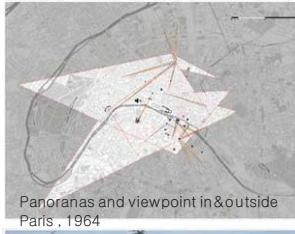
■ 절대높이

* 파리_이원적 높이규제

- SRU (도시연대와 재생에 대한 법률 : la loi relative é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파리는 3가지 종류의 Gabarit(가바리), PLU(Plan des hauteurs, 고도계획), Fuseaux(후조)로 건축물 높이규제를 적용함
- 구도심은 절대적인 높이○를 제한하며, 외곽을 중심으로 제한적 고층개발 허용, 신도심은 높이○제한○없음



Fuseaux de protection de site de Paris (Paris site protection zones) 1964



Panoramas and viewpoint in & outside Paris, 1964



Fuseaux de protection de site de Paris (Paris site protection zones) in P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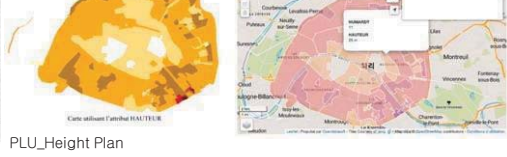


Silhouette study from 1951-1953, MOBA Lineaux, Hypothèse of J. Castex

출처 : 최민아 & 이은진 (2012) 프랑스의 도시관리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3(2) ; 최태경 외 (2020),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기준 수립, 부산광역시



PLU-Heigh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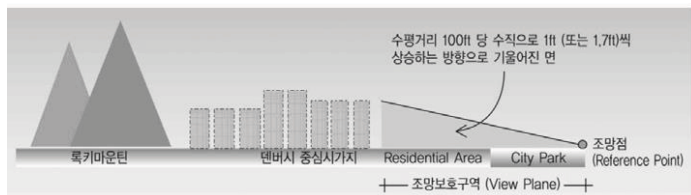
Fuseaux de protection de site de Paris (Paris site protection zones) 4

03 국내외 사례

■ 통경축,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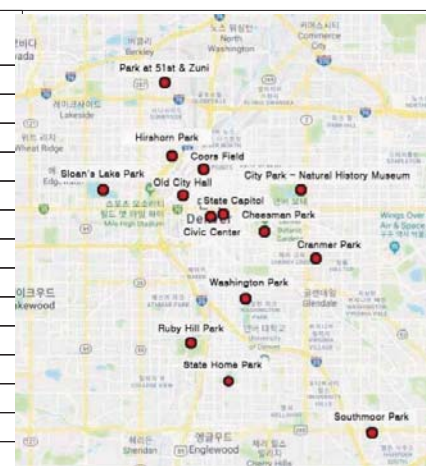
* 덴버_록키산맥의 파노라마 조망 보존

- 산 조망보호조례 View Planes: Mountain View Ordinance
- 록키산맥으로의 조망을 포함한 산악·역사·도시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중심시가지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을 유도함
- 덴버시는 ○곳에서 약 10마일 떨어져 있어 덴버시의 주요 오픈스페이스 특히 도시공원에서 조망할수 있음
- 조례는 록키산맥의 파노라마적인 조망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를 제한함
- 덴버시는 일련의 조례로서 가장 독특한 경관체계를 할 수 있는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규제방법은 각 조망점별로 규제 내용과 그에 따른 첨부도면을 제작하여 법규에 명시하고 첨부도면의 규제지역에 새로 짓는 건축물은 일정해발고도(기준점) ○상의 고도를 갖는 건축물을 지을수 없음
- 록키산맥을 대상으로 조망점은 공공장소 14곳 (공원 10곳, 시민센터 1곳, 구시청 1곳, 야구경기장 1곳, 의사당 1곳)임



덴버시 경관고도 규제 사례

구분	조망점
1	CheesmanPark-BotanicGardens
2	CityPark-NaturalHistoryMuseum
3	Civic Center
4	Coors Field
5	Cranmer Park
6	Hirshorn Park
7	Old City Hall
8	Park at 51st & Zuni
9	Ruby Hill Park
10	Sloan's Lake Park
11	Southmoor Park
12	State Capitol
13	State Home
14	Washington Park



덴버시 조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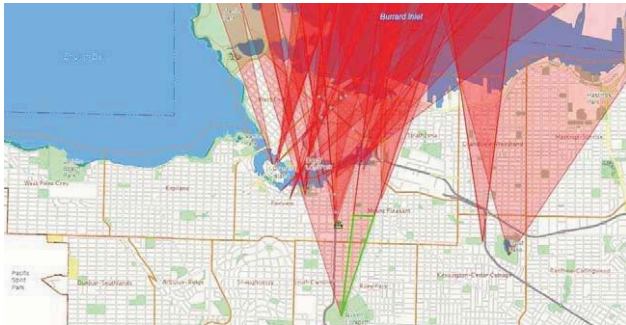
출처 : 백태경 외 (2020),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기준 수립, 부산광역시

03 국내외 사례

■ 통경축·뷰관리

* 밴쿠버 산과 바다의 전망

- 1989년 View Protection Policy에 의해 도시 전역에 27개의 뷰콘을 지정, 주요 위치에서 건물 높이를 제한하여 도시 전체에서 산과 바다를 전망하도록 함
- View Protection Policy은 도시의 가장 상징적이고, 매력적인 중요한 전망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이었지만, 최근에는 뷰콘 외 지역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의로 뷰콘을 추가하여 제에 어려움 발생함



Vancouver's view cones

출처 : 백대경 외 (2020).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뷰관리 기준 수립, 부산광역시; Dailyhive.com

Alder Terrace view

At the Alder Crossing's viewing platform on the seawall, north of Lamey's Mill Road, the Alder Terrace view looks across Alder Bay and False Creek to Mount Seymour.



Protected view A

Along with Mount Seymour, this view includes Second Peak, Pump Peak, and Brockton Point.



밴쿠버 view cones 모습

출처 : 백대경 외 (2020).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뷰관리 기준 수립, 부산광역시
<https://vancouve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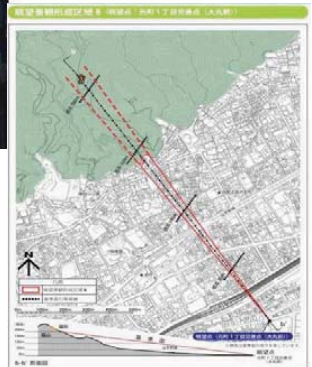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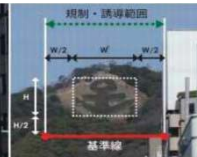
26

03 국내외 사례

■ 통경축·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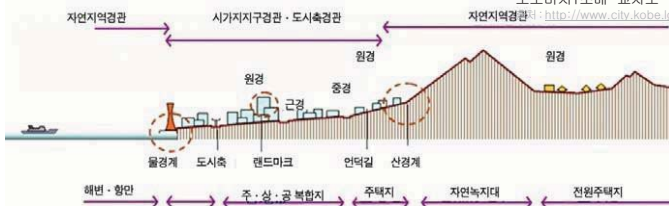
* 고베 조망형 경관의 보전과 육성

- 조망형 경관형성계획의 기본방침은 먼저 고베다운 조망형 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시작으로 자연환경과 시가지 환경의 조화, 명확한 도시 패턴의 실현으로 하고 있음.
- 양호한 조망경관형성을 위하여 고층·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적 배려를 위한 제한을 두거나 도로식재와 도로조명 등의 계획적 정비, 그리고 랜드마크의 육성을 통하여 조망정 정비를 정책방향으로 설정



모토마치1초메 교차로 규제 및 유도 범위 도면

출처 : <http://www.city.kobe.lg.jp>



고베시의 지역특성과 경관특성

출처 : <http://www.city.kobe.lg.jp>

출처 : 서울연구원 (2017). 미국 뉴욕·LA 조닝(용도지역지구제) 운영현황 조사, <https://www.sl.re.kr/node/58240>

백대경 외 (2020).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뷰관리 기준 수립, 부산광역시

27

03 국내외 사례

■ 새로운 방법들

* Virtual Singapore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전체를 3차원의 디지털트윈으로 재현하고 자 하는 모델
-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도시의 각종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공유하며, 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②는 것을 목표로함

Virtual Singapore 활용 사례

출처: 서기환 & 오정화 (2020),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현실세계의 가상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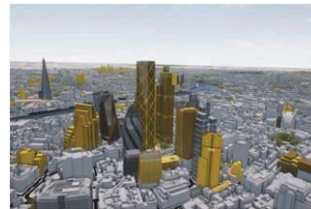
30

03 국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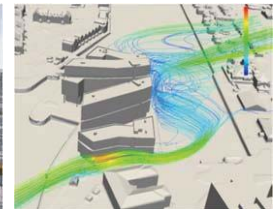
■ 새로운 방법들

* 영국 국가 디지털트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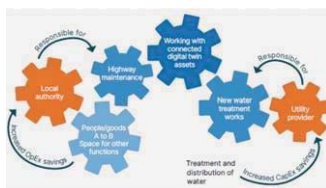
- 2017 년 영국 국가 인프라위원회(British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는 도시 내 인프라의 생산성 향상 및 데①터 기반 산업 창출·활성화를 위한 권고로서 디지털 프레임워크와 국가 디지털트윈 추진을 제시
- 영국의 국가 디지털트윈(National Digital Twin)은 하나의 큰 모델① 아니라 다양한 국가 인프라 네트워크의 디지털트윈① 상호 연계되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계획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트윈 간의 연계를 의미하는 개념
- VU.CITY사는 런던, 맨체스터 등 영국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 VU.CITY 플랫폼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 제공



VU.CITY의 3D 도시 모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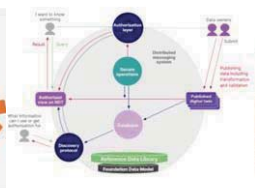


VU.CITY의 고층 빌딩의 바람길 영향 분석



영국 국가 디지털트윈 - Connected tw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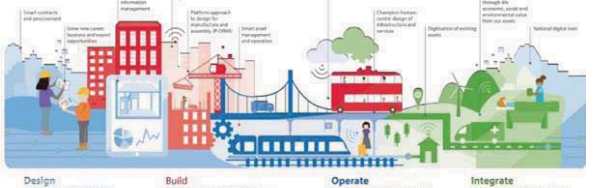
출처: 서기환 & 오정화 (2020),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IMF의 Integration Architecture of the 요소

출처: 서기환 & 오정화 (2020),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This is Digital Built Britain



CDBB의 디지털트윈 개념도

31

03 국내외 사례

■ 새로운 방법들

*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

- 서울시는 디지털트윈 프로젝트 일환으로 '버추얼 서울 (Virtual Seoul)'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 일부기능을 오픈하였고, 2021년까지 완성 계획
- 2019년부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플랫폼 기능으로 3차원 공간정보연계·관리, 실감형 3D 가상 콘텐츠 갱신 관리, 통합 시각화 뷰어, 도시계획의사결정 지원, 정책지원부서 협업 기능 등을 도입
- 2020년 1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심의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계획 경관심의 뿐만 아니라 설계공모, 재난 안전지원, 바람길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예정



바람길 시뮬레이션

가시권 분석



서울시의 Virtual Seoul

출처: 서울시 버추얼 서울 통합 플랫폼 : https://smart.seoul.go.kr/board/25/70/board_view.do

32

03 국내외 사례

■ 사례 분석 정리

구분	관리 목적	관리 유형
런던	랜드마크 조망경관 관리	4가지 조망, 26가지 조망에 대한 경관 특성과 관리 기준 제시(구별별 기준)
뉴욕	도시경관의 조망환경 보호	건축물 및 구조물 규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외 허용
파리	조망경관 보호	이원적 높이규제 절대높이 제한으로 높이규제
포틀랜드	경관자원 보존	전문가에 의한 조망점 선정 건축물의 높이와 매스 조정, 조경 식생관리
덴버	록키 산맥 파노라마 조망 보존	건물의 고도 제한 조망점별 규제
벤쿠버	산과 바다 전망	뷰콘 내 건축물 높이 제한
몬트리얼	산을 향한 Broad vista 와 framed view 의 보호	건설행위와 높이 제한
고베	자연경관 자원 보전	고베다운 조망경관 유도기준 마련 시민 참여 유도
모리오카	산악조망 확보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남산	남산의 조망 기회 유지 및 확대	최고높이 제한 특정경관계획 수립

33

03 국내외 사례

■ 시사점

01

건축물 자연이 아닌 지구, 도시 전체 자연에서 자동 관리가 필요

- 뉴욕, 일본, 런던, 파리 등의 특정지구, 지역·지구제, ①원칙 높① 규제 지역의 지정함
- ①같① 도시 전체 차원의 대상물 및 피대상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02

건축물 높이 관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법이 필요

- 조망권역, 조망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방법, 기준 마련① 필요함
- 조망대상, 조망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보호 방식 마련 ① 필요함

03

보호 자연을 위한 통경축·뷰콘 관리 필요

- 조사대상에서 조망점까지의 조망경관을 확보, 보전, 유지를 위한 통경축·뷰콘 설정 필요함
- 조망점 선정 시 도시구조,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시민참여 등① 필요함

04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한 종합적 도시 자연 관리 필요

- 도시 ①이미지 및 형태에 대한 ①해를 위해 최신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①는 경관관리 뿐 아니라 도시의 스마트 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를 위해서도 필요함

34

34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기본방향

* 통합적 경관계획 수립 및 무등산 경관 발전방안

01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통합적 경관 계획 수립

- 지역성을 반영한 유형별 경관(도심, 농산어촌, 공단지역, 문화재 등) 계획 수립 필요
- 경관관리에서 제외되어 왔던 특정 지역(예 무등산)에 대한 경관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망과 관련된 단순한 경관 관리 방안① 아닌, 보존지역 설정 - 높①제한지구 설정, 미관지구 지정 등 토지①용 및 도시발전 방향 수립과 연계된 통합적 계획 수립 필요
-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경관관리 지역을 설정해서 '광주의 경관'으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기준과 근거 마련
- 기존 경관기본계획 내용의 구체화 - 현실화를 통해 내실 있는 경관기본계획 작성

02

무등산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 경관 전략 수립

-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괄적인 건축물의 높①제한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과 토지①용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체계 구축
- 영국 런던의 London View Management Framework (LV MF) 와 같①, 도시 내 시지각적인 조망 특성을 기반으로 전략 조망점 설정, 경관 보존지역 설정, 높① 제한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도시경관관리 체계 수립.



Image 3: Photograph view from Assessment Point showing Protected Vista thresholds

36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기본방향

* 통합적 경관계획 수립 및 무등산 경관 발전방안

03

행정의 경관 관리 역량 증진 및 구체적 전략 수립

- 광역시, 자치행정구 주체 별 경관 계획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영역과 내용을 명시
- 경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 운영 및 전문가 지원 조직 운영
- 전문적인 경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 업무매뉴얼 제작
- 지역의 경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주체 발굴
- 설정된 전략 조망점 지역의 관리방안, 조망점부터 무등산까지의 경관보존지역 설정, 무등산 경계 부분의 건축물 높이제한 및 토지이용 규제 등 통합적 관리체계 수립
- 무등산과 관련된 경관심의대상의 확대 및 심의대상 구체화
- 무등산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지자체 조례 근거 마련
-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 정보와 3D 시뮬레이션의 적극 활용

04

시민 경관 참여 확대

- 시민들 관심도를 가지는 광주시 대표 경관 '광주의 경관'을 지정하고, 대표 경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강화
- '광주의 경관'의 관리 계획과 운영을 공개하는 시범경관으로 무등산을 지정하고 운영
- 무등산 경관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경관 협정 유도
- 변화하는 무등산 경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관 환경의 변화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무등산 경관 포털 운영하고 관련정보 제공

37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제도적 방안_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제정 (완료)

* 방향 및 지향점



* 주요 이슈

종상향 제한	공공성 확보	친환경 계획	수변구역 보호	순환도로변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상향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1단계조정을 원칙 • 종상향체크리스트도입 • 종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변경사유, 주변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도지역상향시입지조건 -일반주거지역의 종 변경은 1만㎡이상인경우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상향시 (순부담 기준)공공시설 확보비용 구체적으로 명시 - 10% 이상 의무화 •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합리적 인세부시설기준제시 • 1,000세대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에는 폭원 20m이상의 진 출입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 • 공공보행통로폭4m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지하 주 차장설치비용제시,지상녹화 •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친환경인센티브도입 • 에너지 절약형 설계, 친환경 건축계권장 • 바람길을 고려한주동배치 • 통경축(10m내외)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구역(영산강, 황룡강 인근)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 종상향 불허 -2030광주도시기본계획 하천 경계500m 중점 경관 관리구역 지정 -하천변 냉기류 도달 범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전용도로(2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로) 및 빗고울로, 무전대로 경계로부터 150m이내 구역 종상향 불허 -주택별 자동차전용도로 경계로부터150m이내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소음저감대책 수립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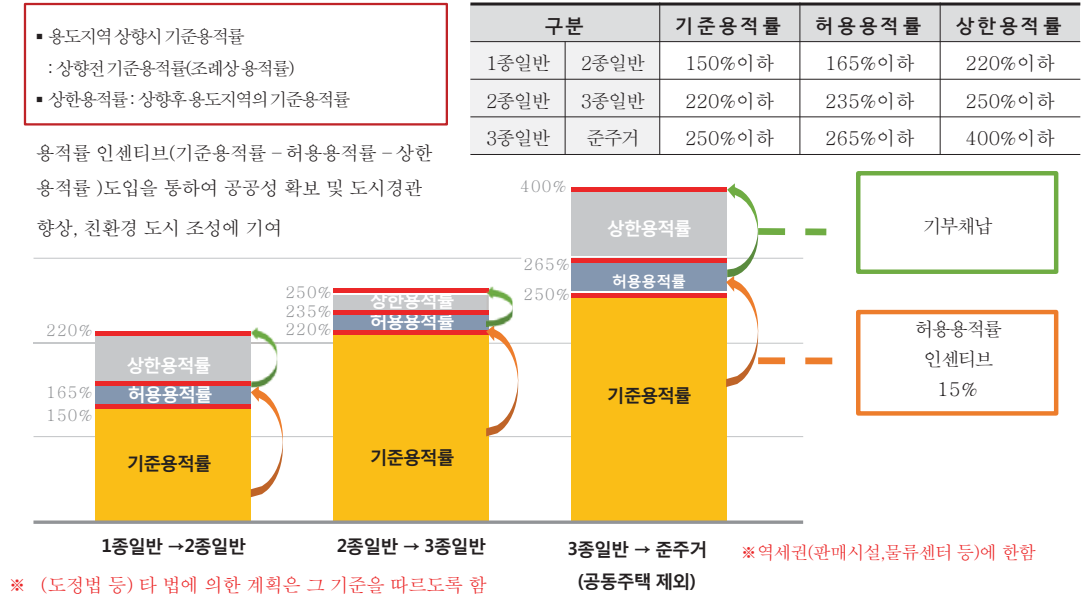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제도적 방안_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제정 (완료)

* 허용·상한 용적률 도입을 통한 건축물 밀도관리

- 용도지역 상향시 기준용적률
: 상향전 기준용적률(조례상 용적률)
- 상한용적률: 상향후 용도지역의 기준용적률

용적률 인센티브(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도입을 통하여 공공성 확보 및 도시경관 향상,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



39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제도적 방안_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제정 (완료)

* 허용·상한 용적률 도입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40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_중상향 제한지역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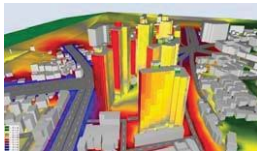
* 자동차전용도로 인근 중상향 불허구간 지정

소음방지대책관련 규정

- (과거) 공동주택 건립시 자동차전용도로 경계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소음 저감대책 수립
- (현행) 자동차 전용도로 경계로부터 150m 이내에 공동주택 건립시 소음저감대책 수립하여야 함



순환도로변 방음터널(2017년)
-12곳 / 2,31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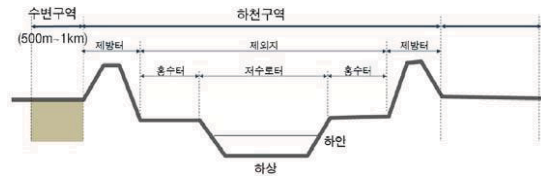


공동주택 소음예측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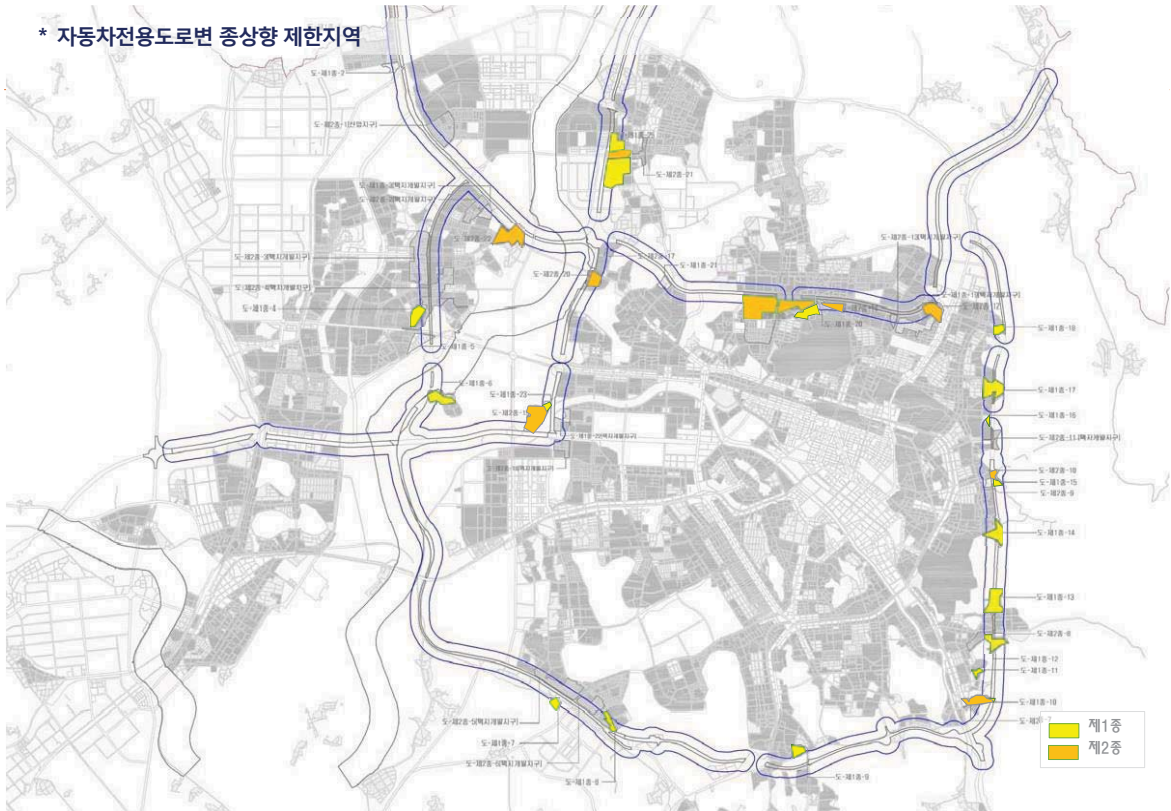
* 수변구역(영산강, 황룡강 주변) 중상향 불허구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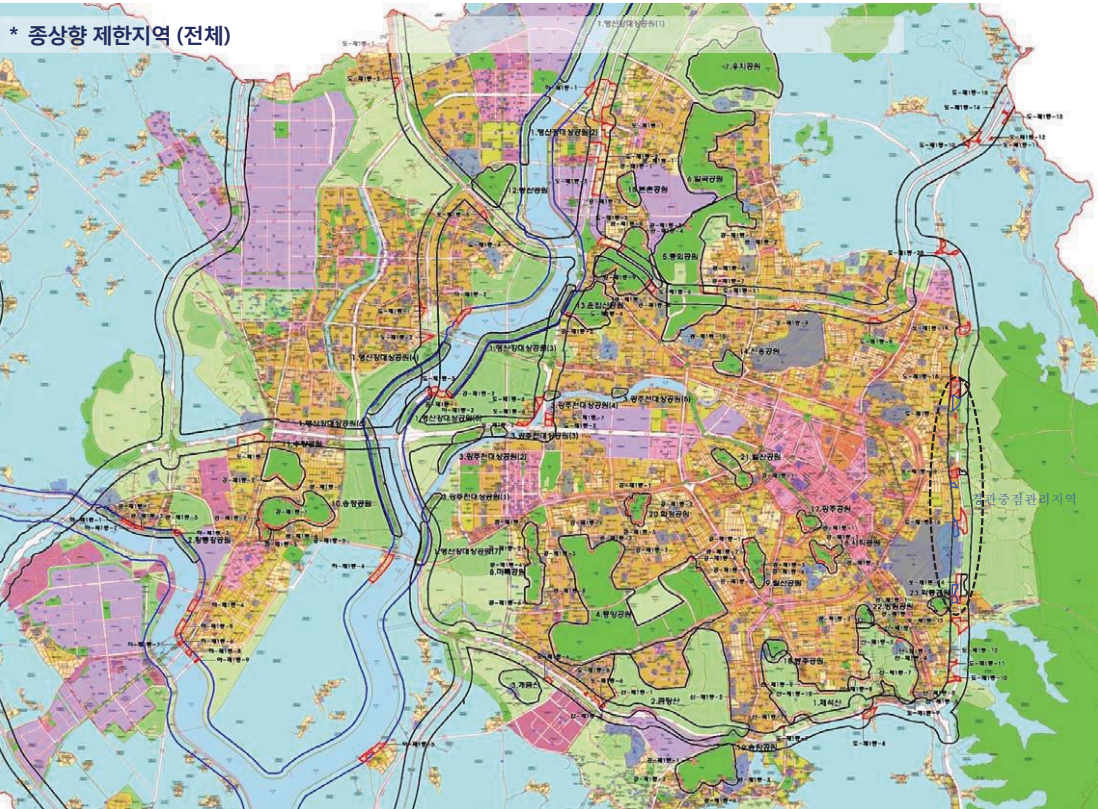
- 수변구역의 경관 및 자연환경을 보호 / 도심 열섬현상 저감
- 하천변에서부터 냉기류의 유효 도달 범위(2~3°C온도차)
- 기존대상공원폭50~80m고려,수변경계로부터100~150M이내검토
- 군 공항 이전 대비 도시관리



41

* 자동차전용도로변 중상향 제한지역





43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용도용적제의 개선 (조례 제72조 제5항 개정안 주요내용)

1.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에서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 제외

- 현재 비주거용도 의무비율 10% 규정을 오피스텔 건축으로 충족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이 100% 주거용도로만 구성

2. 각 용도부분별로 용적률 차등 적용

- 주거용도에는 준주거 용적률(400% 이하)을 적용하고 비주거용도에만 상업지역 용적률을 차등 적용

3. 주거외 용도 의무 면적 비율 상향

-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비주거시설의 의무확보면적을 10%에서 20% 상향
- 당초 30%로 시뮬레이션, 도계위에 20%로 올렸다가 최종 조례에는 15% 기준, 원도심과 일부 상업지역 10%로 완화 반영

44

04 높이관리 적용 방안

■ 논의 제안

도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
계적인 높이 관리가 필요

건축물의 높이 관리는 단
순히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과거의 문제점을 풀어 가능 방법

발표자: 김금녕 사무국장

-홍성군 현황-

- ▶ 인구: 9만8,767명
- ▶ 지역: 3개 읍 8개면 조성
- ▶ 홍성읍, 홍북읍, 광천읍,
- ▶ 갈산면, 결성면, 은하면, 구항면, 서부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 ▶ 내포신도시,
- ▶ 홍성 예산 인접 인구28,862명 신도시 조성 중
- ▶ 산업: 농업 중심의 도시 구도심과 신도시의 분리 중

〈지난 1년 간 홍성의 인구증감을 나타낸 그래프〉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군 지속협 조직 -

- ▶ 회 장: 1명
- ▶ 부 회 장: 1명
- ▶ 감 사: 2명
- ▶ 운영 위원: 15명
- ▶ 사무 국장: 1명 (상근직)
- ▶ 위 원: 20
- ▶ 총 위원: 35명
- ▶ 분 과: 자연생태분과/ 생활환경분과/ 교육문화 홍보 분과/ 사회복지 여성분과/ 지역개발분과 /기후분과, 6개 분과로 조직 운영 중
- ▶ 사무국: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 축산회관 2층
- ▶ 담당관실: 홍성군 환경과
- ▶ 2023년 기획실 이전 예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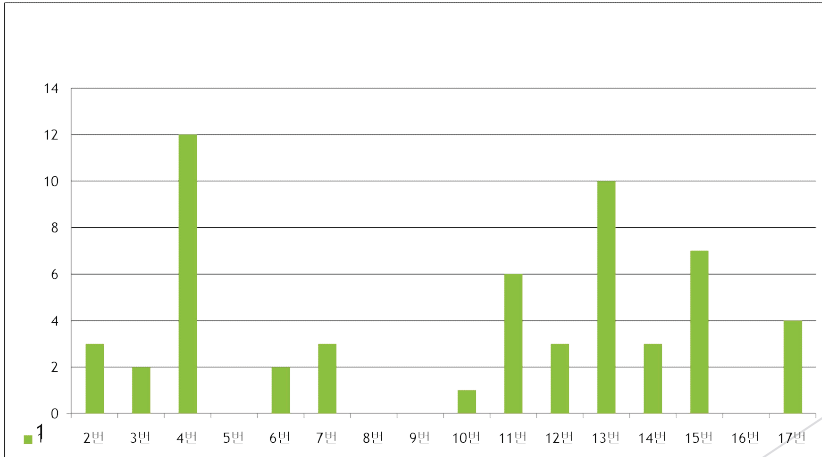
15년간의 사업분석

구분	SDG-s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연생태 분과	15.4	홍성천 생태조사	엄 마 가 최 고 인 선생님과 정		남산의 보물들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 체험	남산의 보물들 워크북 제작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체험
생활환경 분과	4.6.15.13	청소년과 함께하는 홍동천 및 홍동저수지 수질조사			주부 대상 환경 실천 운동 교육	एको장바구니 제작 및 배포
지역개발 분과	11.12.17.1	홍성읍 주요경관 기초조사		벽화 그리기	나눔 장터 운영	내포축제 참여
사회복지여성	10.	홍성군 노인 생활환경 실태조사				
교육문화	15.4.13.2.		물 고 기 가 사 는 홍성천 만 들기	생명지킴이 가족체험 생명학교	환경교육 강사 양성교육 사업 사진 전시회 사업	
기후분과	13.7.4			신재생에너지 가능성 진단 세미나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16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

구분	SDG-s 목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연생태 분과	4.15.	역재방죽의 보물들-가시연꽃과친구하기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 체험	보개산의 보물들-엄마와 함께하는 자연 체험	속동 갯벌의 보물들-갯벌과 친구하기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 체험 홍동 생물 찾아보기	꿈과 꽃을 품은 벽화 그리기 용봉산의 보물들 워크북 제작	오서산의 보물들 - 숲과 백제문화 친구하기
생활환경 분과	4.6.15.13	친환경 예코 장바구니 제작 및 배포	친환경 디자인 리플렛 만들기		내가 만든 환경의 파수꾼 수경식물 만들기	폐품의 화려한 변신 "병뚜껑 아트"
지역개발 분과	11.12.17	충남 예술제 참여			홍성군 인불 축제 및 주민복지 박람회 참여	자연을 품은 벽화 그리기 학계마을과 지정마을 도랑 살리기
사회복지여성	17.					키친가든
교육문화	4.7.11.13.	청소년 환경지킴이 홍성 에코스 사업 그린리더 양성 교육	청소년환경지킴이 홍성 에코스	홍성 환경 영화제 환경 동화와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아동 환경 교육	환경 동화를 활용한 아동 환경교육 찾아가는 기후 학교	환경동화를 이용한 아동 환경 교육 사업
기후분과	13.11.4.1.	녹색성장 교육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품 만들기	그린리더(고급과정) 양성교육(54명 수료)	자전거 발전기와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홍보	동절기 온열시 캠페인 저탄소 생활실현을 통해 에너지 절약 승용차 없는 주간 홍보 캠페인	폐현수막 수경식물 만들기 쿨맵시 홍보 캠페인 녹색명절 보내기 동절기 온열시 캠페인

구분	SDG-s 목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연생태 분과	4.15.13	별빛 따라가는 자연 탐구 1박2일 체험	별빛 따라가는 자연 탐구 1박2일 체험 생태계의 주요한 역할 풀별	백월산 탐사워크북 별빛 따라가는 농촌 자연 탐구 체험 생태교관식물 조사 습지 분포도 조사	홍성군의보물 통합본 발행 별빛 따라가는 농촌 자연 탐구 체험 생태교관식물 조사 습지 분포도 조사	백월산 워크북 이용한 거북이 산책기행 에만잇볼이 체험 홍성군 습지 조사 생태 교관식물 조사
생활환경 분과	11.4.13	쓰레기 전문가 양성	쓰레기 전문가 양성 교육			쓰레기관리사 교육
지역개발 분과	11.12.17		농촌마을 일손 도와주기 행사 극도 환경 체험 환경교육 한마당 (전국대회)			특별한 골목 만들기(벽화) 만들기 마을 조성사업 도랑살리기 사업
사회복지여성	3.4.	환경오염으로 인해 영유아들의 피부 질환 예방	홍성건강한마당	김씨할머니 화가를 꿈꾸다	김씨할머니 화가를 꿈꾸다	
교육문화	4.13.	환경동화를 활용한 유아환경 교육	환경동화를 활용한 유아환경 교육	환경동화를 활용한 유아 환경교육 환경그림 그리기	환경동화를 활용한 유아 환경교육 환경그림 그리기	환경미술대회
기후분과	15.13.3.7	재없는 거리 행사 세계기후의 날 행사 에너지 컨설팅 동절기 온열시 캠페인 어린이날 행사	미세먼지 해법과 대책 마련	미세먼지 강연탄소 발자국따라하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동절기 에너지 실천 교육(온/오프) 시온실가스 진단컨설팅/교육	미세먼지 강연탄소 발자국따라하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동절기 에너지 실천 교육(온/오프) 시온실가스 진단컨설팅/교육	미세먼지 캠페인 소동행사

15년간 SDG-S실천 그래프



다양성을 잃은 SDG-S 17 목표

- ▶ 미실행지표:
- ▶ 5번 성 평등, 8번 경제성장과 일자리, 9번 산업혁신과 인프라, 10불평등해소,
- ▶ 14번 해양자원의보전, 16번 책임있는 행정과제도.

- ▶ 지속적 실행지표
- ▶ 3번 건강과 웰빙, 4번 양질의 교육, 7번 지속가능한 에너지, 13번 기후변화와 대응,
- ▶ 15번 육지생태계보전, 17번 파트너십.

- ▶ 환경관련 사업부서의 한정된 예산 사용으로 다양한 사업진행 못함
- ▶ 지방 지속협의 추구하는 방향성 과의 온도 차
- ▶ 인구 10만 미만도시의 다양성 부족
- ▶ 다양한 활동가의 부족으로

중점 사업 SDG-S실천



양질의 교육



▶ 수질조사 및 학생들과 하천조사



천수만 철새 모니터링



▶ 찾아가는 학교 환경수업



육지 생태계 야생화 수업

지속 사업 성과 1번

- ▶ 2009년부터 제작을한 홍성군의 보물(7곳) 통합 책자 발간
- ▶ (홍성 교육지원청 환경 교과 기초자료로 사용)



지속 사업 성과 2번

▶ 반딧불이체험 마을조성



지속 사업 성과 3번

<다행이마을 꽃무릇 축제 지속 운영>



지속 사업 성과 4번

- 1) 홍양저수지 습지조사 영상 2022년 EBS 지독한 끌림 다큐멘터리 방영
- 2) 외눈박이 수달아빠의 꿈 다큐멘터리 제작



지속 사업 성과 5번

- 1) 세계환경의날 기념 환경미술대회 확대운영 -공연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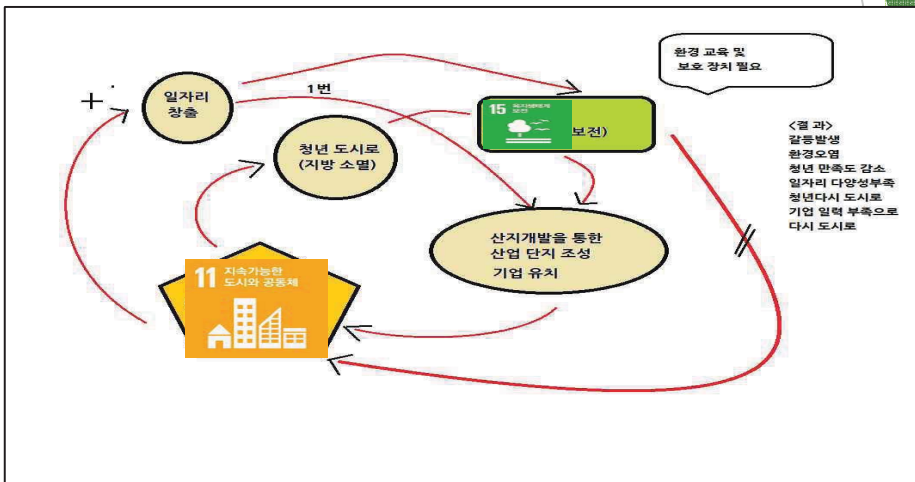


- 발상의 전환- **독**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Chungcheongnam-do Sustainable Development Association

시스템 사고방식 으로 해결을 하는 SDG-S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Chungcheongnam-do Sustainable Development Association

- 분과 협업 - SDG-s 4.12.13.14.



- 추진전략 -

- ▶ 시스템 플랫폼(platform)조성으로 고객들이 즐길수 있는 공간 조성한다
- ▶ 변경 사업계획서 작성 공문
- ▶ 지속협 분과 별 회의
- ▶ 교육지원청 협조요청 공문
- ▶ 사전 홍보 실시 영상 웹자보 (맘카페 SNS 인별 홍보)
- ▶ 홍성通 지역의 전문 분야별 홍보
- ▶ 내용: 고객의 욕구 만족을 위한 핀셋 마케팅 적용함.

- 대회 규모 -

- ▶ 장소: 홍성군청 홍주성 일원 홍화문,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이 있음>
- ▶ 종목; 사적 제 231호 면적; 46,961㎡ 14. 시대; 삼국시대
- ▶ 사전 접수
- ▶ 초등부: 13개교= 456명
- ▶ 유치부: 8개교= 89명
- ▶ 합 계: 545명

- ▶ 6월4일 토요일
- ▶ 현장 접수 189명
- ▶ 작품제출인원
- ▶ 초 등 부: 548점
- ▶ 유 치 부: 114점
- ▶ 합 계: 662점
- ▶ 현장 인원: 1,400명



- 봉사자 업무 일정 -

시간	봉사자 이름	내 용	비 고
08:00~09:30	백청기 장현숙 김나연	미술접수	명단 확인
09~11시40	이현석 손학민 과장	선물 전달	안내
12-13시까지	충남지속협 3인	작품 회수	
	박남미 이재옥	작품심사 준비	지속협 강당
13:30	백청기 김정난 김한숙 박선화 태정식 5인	작품심사	사무국 강당 65점
09:00	소견 시 까지	박민경 /김덕자/이용환	아이스팩 /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
09:00	소견 시 까지	유재준 전상진	빈 화분 생명을
11:00	50 분	김나연	실생활 환경 정보 전달
12:00	60 분	박현옥/김나연/장현숙	용기내 식사 시간
13:시	50 분	김금녕	버블 미술 공연
14:00	10 분	유재준 전상진	환경 보물찾기 설치
14:00	40 분	김금녕	오카리나 3중주 연주회
14:시	50 분	김금녕	환경 보물찾기
15:시	30 분	김금녕	주변 정리 마무리
- 공지 사항 -			
행사 때 준비물인 빈 도시락, 텀블러(물통), 수저, 젓가락 준비 필수입니다			

- 공지 사항 -

행사 때 준비물인 빈 도시락, 텀블러(물통), 수저, 젓가락 준비 필수입니다





- 행사 내용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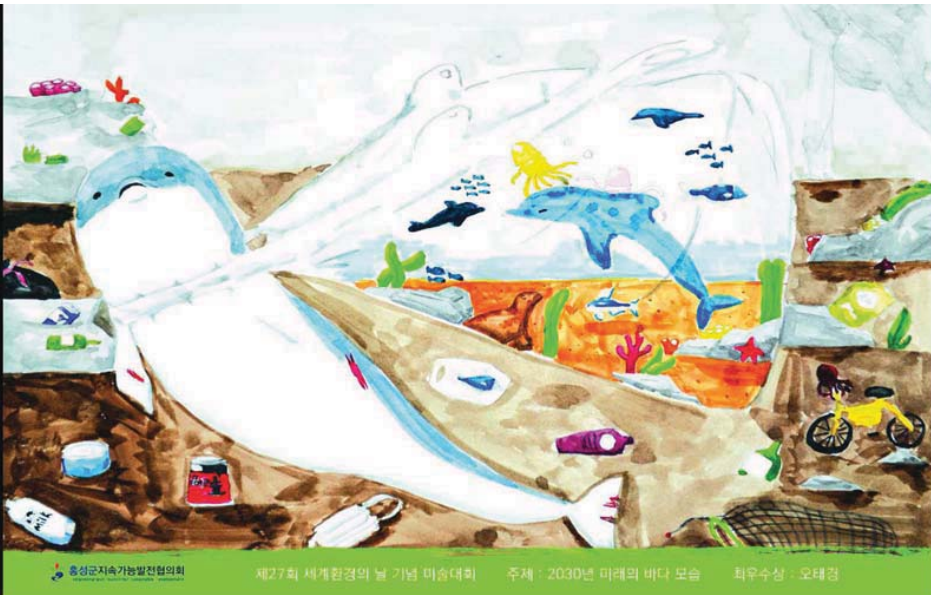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속 조치-

- ▶ 작가 인터뷰 및 작품영상으로 제작/ PDF파일 책자 편집 배포
- ▶ 우수작 62점은 7월9일 1차 전시
- ▶ 작품 액자로 제작 상장 상품권 학교로 전달
- ▶ 야간 전시 홍주성 미디어 파스
- ▶ 8월 11일~14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장에서 2차 전시

충청권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권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27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미술대회

주제 : 2030년 미래의 바다 모습

최우수상 : 오태경

작품전시회 준비

작품명	작가명	작품명	작가명	작품명	작가명
인어공주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깨끗해진 바다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김민서	작품명: 인어공주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김민서	작품명: 인어공주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김민서
오랫동안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Future screen 2030년 미래에는 가장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쓰레기 청소가 가능하고 깨끗한 바다와 함께 사는 우리와 어둠을 상상합니다. Future Cleaner: 100,000,000	김민서	작품명: Future screen 2030년 미래에는 가장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쓰레기 청소가 가능하고 깨끗한 바다와 함께 사는 우리와 어둠을 상상합니다. Future Cleaner: 100,000,000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명: 바다의 쓰레기를 먹고살던 물고기가 뇌의 이상과 학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몸이 되어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민서

-작품 액자-







-분석 보고서-

○ 유치부가 생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



○ 유치부가 생각하는 환경보호 실천방법

해양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토양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땅에 감사하자
대기	나무를 심자, 대중교통을 타자 공장 매연이 나빠요,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지구를 사랑하자
쓰레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자

유아들이 생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은 대기오염, 해양오염, 쓰레기 오염, 토양오염, 기타 순으로 나타남.
자동차의 매연, 쓰레기, 나무를 심어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다수임

○ 초등부가 생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



○ 초등부가 생각하는 환경보호 실천방법

나무	나무를 가꾸자, 보호하자, 나무를 심자, 기타 등
전기	전기를 아껴쓰자, 불필요한 생활, 대체에너지 사용
자동차	환경에너지, 매연, 대중교통
공장	매연(미세먼지)
자전거	자전거를 사용하자
일회용품	에너지절약, 쓰레기를 잘 버리자, 생활 속 실천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 초등학생들도 환경오염의 주범은

대기오염, 쓰레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기타 순으로 나타남.

대기오염 같은 경우 2019년은 미세먼지, 2020년은 코로나19 등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쓰레기오염은 분리수거를 잘하자는 의식은 높으나,

분리배출 시 재활용 되는 쓰레기와 안되는 쓰레기를 정보 부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의 학습 부족.

< 교육적 개선점 >

-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전달이 학습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경제발전
에 의해, 과도한 자연훼손,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변해가는 IT시대 변화로 인해 증가하
는 에너지 사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자연을 추구하여
생긴 기후변화를 학습 수준에 맞게 교육이 필요함.
-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 업사이클, 리사이클이 되는 제품
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이 필요함.
-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온 군민이 참
여 할 수 있도록 교육 필수

감사합니다.

[토론문1]

오치규(충남대학교 교수)

지속가능성은 사회 문화적 가치 생산과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개념으로 국가의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산업화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변화되고 그러한 문제들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므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느끼며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특히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사회도 변하고 개인의 의식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세계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디자인 업계도 지속가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경제, 사회, 환경 가치를 통합하고 드높이는 개념을 디자인으로 전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디자인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실천되고 왔다면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실천 방안이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용을 다방면에 요구되어질 것이다.

세상이 디자인을 변화 시킬 수 있을까?

디자인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을까?

1. 디자인에서의 지속가능이란?

2.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 -동서대학교 성과를 중심으로-

- 1) 디자인재료의 친환경적 안전성 및 유해성
- 2) 생태계 회복을 위한 디자인적 문제해결 접근
- 3) 재활용 등 물질의 순환성과 경제성
- 4)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공생 관계
- 5) 친환경적 에너지의 활용

3. 제언

1) 디자이너에게의 제언

지속가능함을 아이디어 단계에서 주입

디자이너의 역할 확대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님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을 함

2) 크라인언트에게의 제언

탄소중립

디자이너의 결론을 존중

3) 소비자에게의 제언 _ Green Consumer

친환경적 사고

- 친환경 식품구매 유기농식품, 저탄소 농축산물 등
-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품 구매

현명한 소비

- 리사이클, 업사이클 제품, 친환경 이미지 기업제품
- 자원 절약용 도구 확대 텀블러, 에코백, 장바구니

대물림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

- 지속 가능한 제품 구매

쓰레기처리에 대한 고심

- 친환경적 폐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구매

인간들이 오늘 쓰고 버릴 1회용품은 얼마나 될까?
 어제 내가 쓰고 버린 1회용품은 얼마나 될까?
 그중에 꼭 써야만 했던 것이 있었을까?
 아래 몇 장의 비주얼로 반성을 대신한다.
 이것은 디자인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이상>

[토론문2]

장성화(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

- 본 연구는 광주의 자연자원이자 역사문화자원인 무등산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자원이자 랜드마크의 경관적 가치 보전을 통해 도시의 장소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의 모색의 일부로서 수행된 과제임
- 특히, 무등산이 가지는 자연자원으로서의 특성 보다는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로 판단됨
- 무등산은 광주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서 물리적·시각적인 경관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지만 광주라는 도시가 형성된 이후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의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상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조망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관리의 사례

- 전북의 전주시와 군산시, 남원시에서도 시가지 내부 및 주변의 주요 산지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한 바 있음
- 위의 세 도시 사례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주요 조망점 및 조망축과 산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당 지구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 블록단위로 높이를 차등 적용하는 고도제한 방식을 주요한 제어수단으로 적용함

- 이와 함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대한 제한을 통해 산지로 향하는 조망이 건축물로 인해서 차단이 되지 않도록 통경축을 확보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함
- 다만, 이러한 시도는 적용 이후 도시내 개발수요의 증가와 재산권 행사의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주민들의 민원 증가로 완화 적용되거나 폐지되고, 현재는 최소한의 내용만 경관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조망관리를 위한 건축물 고도 제한

- 전북의 사례에서와 같이 조망의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조망의 대상이 되는 랜드마크 등의 경관자원과 이를 바라보는 조망점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이 조차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밖에 없음
- 조망 관리는 단순히 시가지내 건축물의 높이를 낮추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통경축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어수단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가지내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도시의 스카이라인 관리인지, 도심부의 밀도 관리인지, 주요 랜드마크에 대한 조망권의 확보인지와 같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도심부는 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시 기능의 집중 배치를 목적으로 ‘고층고밀’의 건축환경 조성을 기본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도제한을 통해 건축물

의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자칫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 랜드마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 따라서 무등산과 같은 랜드마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자원 자체에 대한 보전 노력과 함께 주민들이 도시 어디서나 랜드마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망권의 확보와 제공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다만, 이를 위해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배치·형태 등에 대한 규제는 결국 누군가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우 민감함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주지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인식의 공유)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논리와 명분을 확보하고, 규제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리적·사회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함
- 연구에서 제시한 밀도(용적률)제한만으로는 소정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상지의 위치와 랜드마크나 주요 조망점을 고려한 3차원적인 경관형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해야 함
- 물론, 이러한 제반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예상되지만 지역의 공유자원인 랜드마크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명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결요건으로 판단됨

□ 지역자원의 보전을 위한 주민의 인식 공유

- 무등산이라는 랜드마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공유자원으로서 조망권을 확보·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적용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에 앞서 지역 공동체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함
- 이를 위해선 오늘 제시한 연구와 같이 지역의 자원을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토론문3]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재제정되어 시행되는 원년에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2022 하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탱 가능한 발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협력’, ‘협치’, ‘협업’ 등의 용어가 사회 곳곳에서 예전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즈음에 ‘융합!’,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융합적 접근’이라는 화두를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6~7년 동안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에 대한 홍보와 교육, 실재 적용을 위한 각종 업무에 전념해 온 저는, SDGs 1번부터 17번까지 어느 것 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제대로 된 ‘융합적 사고체계’가 이해당사자 간 혹은 협업 기관끼리 상호침투 되지 않으면 온전한 ‘협치’도 이뤄지긴 힘들다”는 점을 현장에서 목도해왔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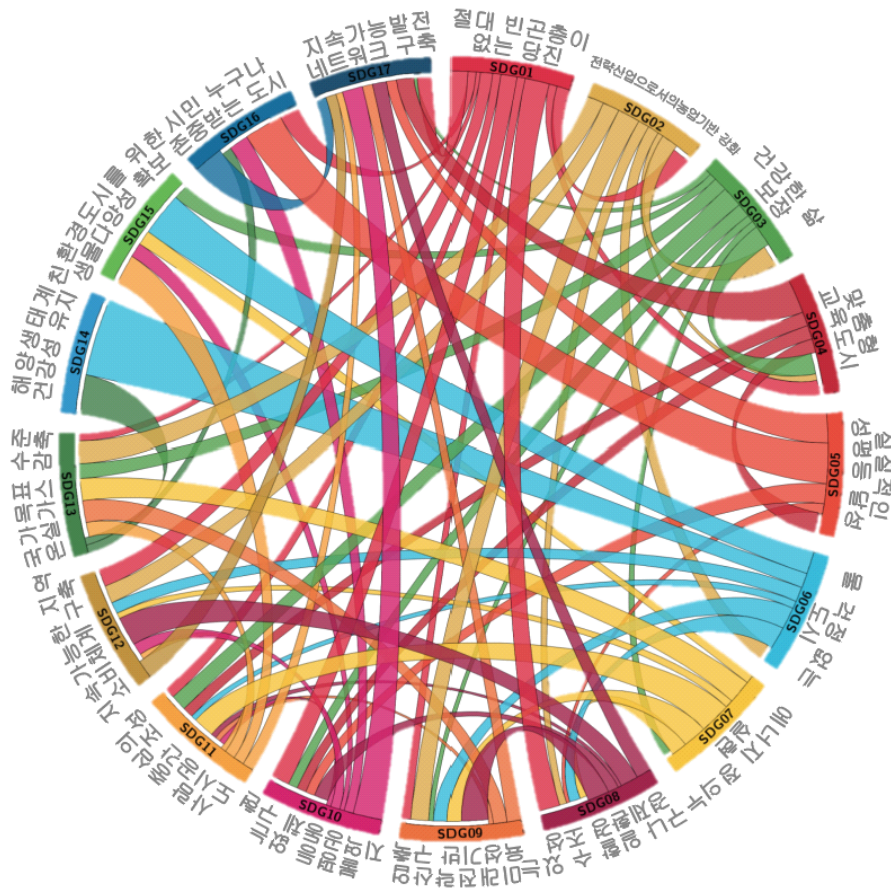
아울러 오늘 토론에는 지속가능발전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다는 입장도 밝혀두겠습니다.

그간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융합적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로컬 SDGs 설정과 구체적인 이행시스템 구축, 환류의 순기능을 전제로 막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SDGs 이행, 평가 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홍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6개 분과에서 진행한 지난 15년 간의 사업을 ‘SDGs 실천 그레

프’로 만들고, 사업별로 분석한 김금녕 사무국장께 정말 고생많이 하셨다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

김금녕 사무국장께서 발제해주신 ‘15년간의 사업 분석’을 보면, ‘홍성천’, ‘남산’, ‘역재방죽’, ‘보개산’, ‘속동 갯벌’, ‘용봉산’, ‘오서산’, ‘백월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연생태분과는 최근에 ‘백월산’을 중심으로 생태교란식물에 대한 조사와 습지 조사 탐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활동들은 SDGs ‘4번. 교육’, ‘13번. 기후변화 대응’, ‘15번. 육상생태계’와 관련 있는 사업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더 많은 SDGs와 융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림1-당진형SDGs 연계도 참조)



[그림1-당진형SDGs 연계도]

지역의 현황과 실정에 적합한 SDGs의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SDGs 활동가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탐방하고, 자신들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 사업화(기획-실행-환류)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SDGs가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작동하지 못할 수(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드리면서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3.

발제 내용 중 ‘다양성을 잃은 SDGs-17’ 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환경관련 사업부서의 한정된 예산 사용으로 다양한 사업진행 못함’ 이라는 표현 즉, 지속협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주무부서가 총괄 부서인지 환경부서인지에 따라, 사업 기획이나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활동가 분들께서는 공감을 하시리라 봅니다. SDGs 자체가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융복합적인 이행체계의 가동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행정의 칸막이’ 가 지속협의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지역에서 추구하는 방향의 온도 차’ 와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다양성 부족’ , ‘활동가의 부족’ 도 언급하면서 ‘SDGs-17. 파트너십’ 의 현 주소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대안 마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이 지구 곳곳에서 가속화 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유엔에서 SDGs 달성 연도로 제시한 2030년까지는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융합적 연구와 사례’ 세션을 마련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도 SDGs 달성을 위한 활동가가 아니라 SDGs 달성을 통해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KASD)

2022 하계학술대회

제3세션 지속가능발전 신진연구자 발표 및 교류

- 좌 장 :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발표1 : 윤요타이 (동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인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개발연구
- 발표2 : 김동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과정추적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고찰
- 발표3 : 황승현 (청년을지로연구소 이사)
 - 도농복합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 토론 : 참석한 신진연구자·청년활동가·회원 전원 (자유토론)

Social Innovation Project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인적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문경 체험 프로그램 - 달빛 탐사대)

SD4G LAB

문요타이 탐잡라스리 / 김은진 / 차한비 / 이용기
<https://www.sd4g.org/>

DONGSEO UNIVERSITY, REP. OF KOREA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01 Introduction

MUNG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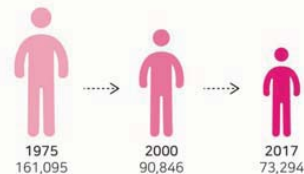
경상북도 문경시
북쪽으로 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충주시,
동쪽으로 예천군·남쪽으로 상주시,
서쪽으로 충청북도 괴산군과 접한다.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제, 교통적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과거 시험을 위해 부산과 한양을 거치는 하나의 상징적 관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를 바탕으로한 관광사업을 주로 구축하고 있다.



[Population of 71,096(year 2021)]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2

01 Introduc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MUNGYEONG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3

01 Introduc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MUNGYEONG RURAL STAY PROGRAM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4

01 Introduc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MUNGYEONG RURAL STAY PROGRAM



로컬 메이커 프로젝트
우리 생애 가장 매력적인 도전

달빛탐사대



전국 80명의 청년 대상, 31명의 청년 정착 완료

농촌 이주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5

01 Introduc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WHY MUNGYEONG?

주목받는 청년 마을

지역 평가 우수상 수상

“ 문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중요한가? ”

달빛 탐사 대원 2기 모집

지역 활력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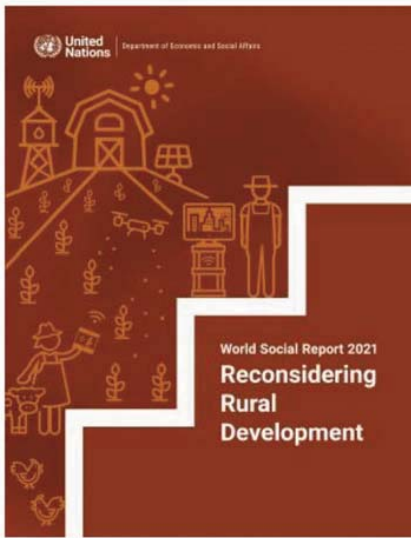
지역 사회의 지향점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6

01 Introduc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 왜 농촌 개발에 주목하는가? ”

세계 사회 보고서 2021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을 근절하려는 오랜 목표를 현실로 전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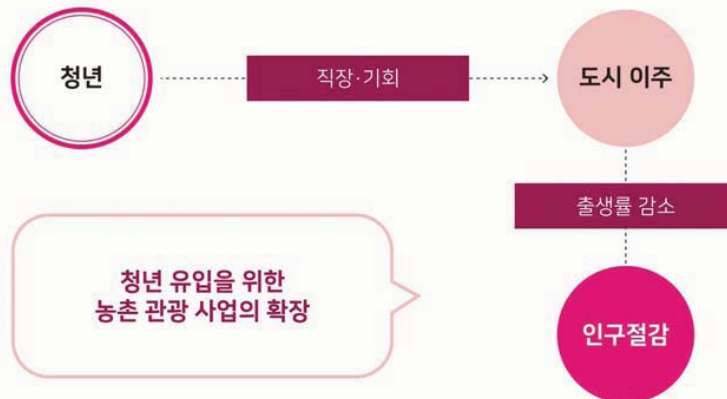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키워드

7

01 Introduc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RURAL VILLAGE_농촌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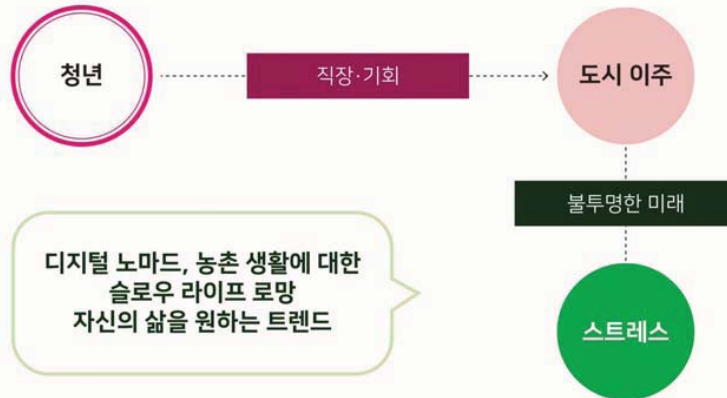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8

01 Introduc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YOUNG PEOPLE_청년들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9

01 Introduc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RURAL EXPERIENCE PROGRAM_농촌 체험 프로그램



코로나 19 X 비대면 X 재택근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급진적 부상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10

02 Research Question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 문경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학습을 바탕으로
농촌 마을이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11

03 Method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MUNGYEONG DESIGN WORKSHOP

무엇이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가?

진행날짜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진행시간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진행장소
문경 달빛스페이스

모집대상
문경 2달 살기 프로젝트 참가자

참가인원
3~9명 (워크숍 종료 후 중식 제공)

지원마감 및 신청방법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12시, 구글폼링크(<https://forms.gle/VyK2L4DUFrun3Qc9>)

문경 달빛스페이스 워크숍
[주관] SD4G 동서대학교, 연디자인

대상

문경 2달 살기 프로젝트 달빛탐사대 참가자

목표

농촌 살기 프로젝트 참가자와의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한
청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도시와 복지 방향성 도출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12

03 Method

MUNGYEONG DESIGN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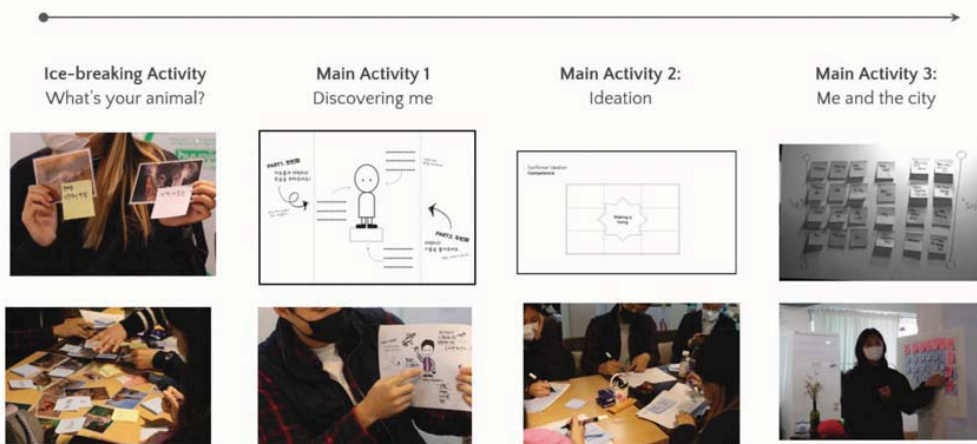


“자기 결정 이론은 인간의 건강, 복지 및 번영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기타 조건과 관련이 있다”

자기 결정 이론의 세 가지 기본 요구를 워크숍 전체 테마로 활용

03 Method

WORKSHOP PROCESS



04 Result

AFFINITY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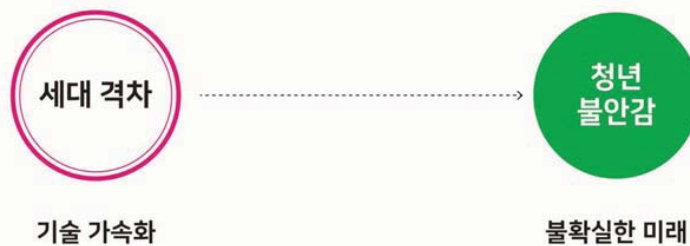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15

04 Result

INSIGHT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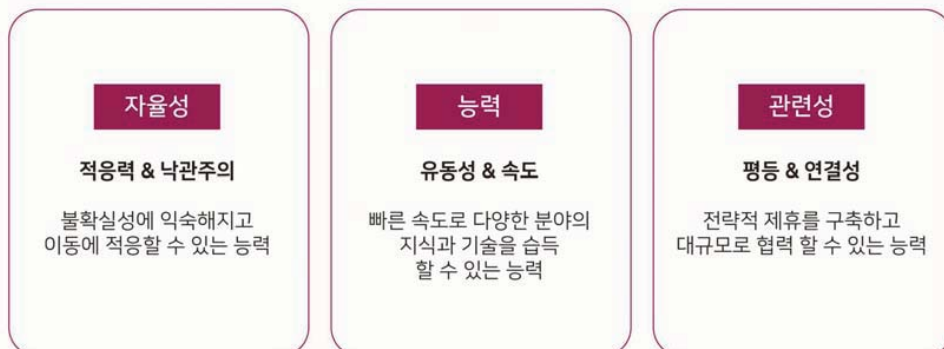
16

04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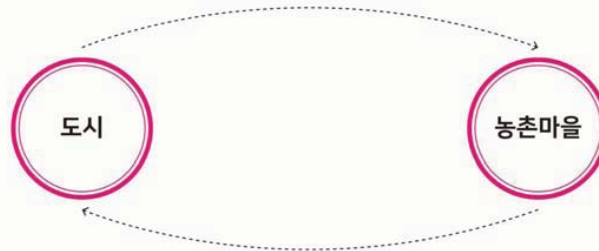
가속화된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 인적 역량 구축 >



04 Result



04 Result



농촌이 청년들의 꿈(미래)을 만드는 공간이 될 수 있다

05 Conclusion

“ 문경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학습을 바탕으로
농촌 마을이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

- 1 자연 및 문화 자산으로 제한되지 않은 시골 마을의 서사 브랜드 구축
- 2 인프라 구축 이전 젊은 성인 유치를 위한 사회적 자본 프로그램 개발
- 3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자유로운 이동 방법 제공
- 4 지역 활동 경험을 통한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간적 능력 개발

Appendix



References

p.2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6&tblId=DT_A00221
 p.5 달빛탐사대 <https://munlight.modoo.at/>
 p.7 World Social Report 2021: Reconsidering Rural Development
 p.13 Self-determination Theory (Ryan & Deci, 2017)

Pictogram

p.2 남자 아이콘 제작자: Freepik - Flaticon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21



Social Innovation Project

Thank you

SD4G LAB
<https://www.sd4g.org/>

Copyright ©2021, SD4G LAB, All Rights Reserved

과정추적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고찰

: 민선6기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권역 별 포럼추진단을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Sustainability of Youth Policy
Governance Using Process Tracking

김동희¹⁾ · 이명석²⁾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당사자참여를 강조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기초-광역-중앙정부에 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청년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공조로 법제화가 시작된 만큼 아직까지 일정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각 지역의 정치·문화·제도적 특성, 지역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역량에 따라 그 양상이 천차만별이다. 더구나 청년층의 권리를 중시하는 당사자참여 거버넌스의 특성상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정책과정 운영이 중요한데, 청년당사자와 지자체 간의 협력 전략 검토는 물론, 이를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효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참고할 사례로 경기도는 도(道)단위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하여, 최근까지도 청년정책 이해당사자 네트워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도(道)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이해당사자 협력 프로젝트인 ‘권역 별 포럼추진단’의 3년 간 활동을 과정추적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당사자참여와 광역지방정부 간의 협력 양상을 기술하고, 효과적인 당사자참여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조건을 도출했다. 본 연구는 청년참여 거버넌스가 청년층의 사회자본 축적과 정부신뢰 증진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안정과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주제어 : 청년참여, 중간지원조직,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관리, 사회자본]

- 1)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제1저자
- 2)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정치·사회문화적 변화, 소득·자산 양극화,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의 악순환으로 정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¹⁾로 부상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전례 없이 불어 닥친 청년문제도 세대주의적 특질로 변주(變奏)된 사악한 문제의 일종으로 만성화되었다. 청년층의 삶의 질적 저하를 나타내는 청년문제는 정부의 거버넌스가 청년층의 이해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도 이어지기에, 2000년대 초 청년정책이 등장한 이래 정부는 청년당사자와 정부의 선호·관점·이해를 좁히기 위한 정책 채널을 증설해왔다.

각 지역의 청년당사자그룹과 지자체의 공조로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시작한 까닭에, 아직까지 지역의 정치·문화·제도적 특성, 지역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역량에 따라 거버넌스의 도입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제언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의 물꼬가 트이며, 광주·대전·부산·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도 연이어 제도를 안착시켜왔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광역자치도(道)의 경우,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참여 거버넌스 도입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까지만 해도 당사자참여는 심의·조정·의결기구인 경기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지역 간 이동이 수월하여 거래비용이 낮고 응집이 용이한 점을 적극 활용하는 광역시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까닭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역량이 상당한 몇몇 지역은 자체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도입해나갔는데, 지방정부의 간 조정이나 교류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광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간에 지역격차도 점차 커져갔다. 선도적인 광역시나 시·군은 물리·환경·문화적 이점을 제

1) 거버넌스 연구에서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는 정책문제가 정의와 파악이 어렵고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최적의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뜻한다(오세제·김동희, 2021).

공하는 청년센터와 공간을 권역 별로 설치하기에 이르렀지만, 행정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역은 청년센터 설치에 물론이거니와 조례나 전담부서, 시행계획 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중앙-광역-기초의 공공서비스가 다양한 지역의 청년당사자에 배분되며 균형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지역 별로 상이한 정책내용과 집행 프로세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광역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청년정책 분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는 몇몇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뤄져 왔고, 그마저도 가지 수가 많지 않다. 특히 많은 시·군을 망라하는 도(道) 단위의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전무하다 보아도 무방하다.

더구나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청년당사자를 주요한 정책 행위자로 호명하여, 청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 공동체성 함양, 시민역량 증진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자체-당사자 간의 협력이나 청년당사자들의 자발적 기여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악한 문제를 혁신하려면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부터 기초까지 청년정책 추진체계 전반이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활발히 재편되고 있지만, 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초창기 현안인 까닭에,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존재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다보니 청년당사자와 지자체 간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술적 논의도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정책 이해당사자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는 광역 청년참여제도의 체계적 도입 및 시행을 위해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하 지원사업단)’을 설치하여, 최근까지도 이에 협력하는 청년정책 이해당사자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다. 청년참여의 당위와 필요성을 알리고, 시·군 청년정책 활동가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권역 별 청년포럼추진단(이하 포럼추진단)’이 그 일례다. 본 연구는 지원사업단이 출범한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는 약 2년여 기간의 사례를 과정추적법으로 분석하여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당사자 네트워크 관리를 설명하며, 실제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촉진하는지 탐구한다. 이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네트워크 관리가 참여시민의 정부신뢰 및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인과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II. 관련 연구 검토

오늘 날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관주도의 전통적인 행정관리에서 거버넌스 등 주민주도의 새로운 행정관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이수, 2017). 행정의 핵심적 역할은 더 이상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배봉준, 2018)에 있다. 거버넌스는 다의적인 개념이나 주로 협치, 공치, 국정관리, 조정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된 의미로 통용(김석준, 2000; 채종헌·김재근, 2009; 이승종&김혜정, 2011) 되는데, 김나랑·최형림·이태현(2018)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간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 키워드는 '로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였다. 권위적 의사결정자들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계층제적 조정에 주목하는 대신, 지방자치 활성화와 발맞춰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지역사회 조직 간의 협력과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1. 청년참여와 사회자본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정책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절차(Webler & Tuler, 2001)와 행위(Pateman, 1970) 등을 의미한다(최예나, 2016).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원인과 처방을 판단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의 역량과 주민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역량이 필수다(강문희·윤준희, 2021). 비단 지방자치 거버넌스가 아니더라도 “거버넌스의 성공적 시행은 활발한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며, 시민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거버넌스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김민경 · 윤여창, 2018).”

이때 사회자본은 자발적 시민사회의 활력과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부각시켜 건강한 민주적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 유용한 틀이 된다(송경재, 2007). Putnam(1993)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여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이다. 공동체의 자율적인 조화와 협력, 신뢰로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행동을 활발(Segageldin & Grootaert, 2000)하게 하므로, 사회자본을 토대로 형성된 건강한 시민사회는 다양한 정치활동과 민주적 업무 수행으로 높은 민주적 시민참여의 수준을 보인다. 시민참여는 사회자본의 관찰 가능한 결과로,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공동체일수록 참여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최예나, 2016).

사회활동을 통해 축적된 사회자본은 사회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인과 사회의 활동 ·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서 제도적인 관계와 사회구조를 포함한다(박희봉 · 김명환, 2001). 이에 Coleman(2000)은 사회자본을 수평 · 수직적인 결합의 부산물로서 생산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구조라 보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구성원 신뢰와 상호관계가 활발해져 개인적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발전이 촉진된다(박희봉, 2002).

사회자본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지역, 국가 단위 시민정치참여로 거버넌스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부각된다(National Economic & Social Forum 2003; 송경재, 2007). 사회자본이 시민의 합리적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주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정부와 시민의 협력의 토대(최석현 외, 2012)가 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행위자들의 관계망이자 자발적 · 수평적 자원 동원의 통로가 되는 네트워크는 그 형태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회자본의 주요 분석 단위로 볼 수 있다.

2. 청년정책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정부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통해 정책적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식(Huxham, 2000; 김진열·이규명, 2012; 구교준, 2013; 신상준 외, 2015; 조은영·김광구, 2018)”이다. 행정수요 및 사악한 문제 대응에 요구되는 전문성, 혁신성, 신속성, 유연성, 접근성 등을 다양한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데 이점이 있다.

이명석(2017)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계층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리고 시장 거버넌스 등 3가지 사회적 조정 양식의 ‘최적의 혼합’을 통한 자율적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의한다. 맹점은 거버넌스가 “정부의 역할,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계,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이명석, 2017)”에 근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조직간, 다정부간, 다부문간 네트워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설계(Goldsmith & Eggers, 2004; 이명석 외역, 2014; 배봉준, 2018)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2021)은 청년참여에 근거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청년참여 거버넌스’로 개념화하고, 이를 순화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로 지칭하고 있다. 이때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입안, 심의, 결정, 집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직업공무원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정책 과정”으로, 행정혁신의 주요과제로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중점이 된다. 국무조정실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청년정책 운용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역청년 간 민관협력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청년당사자의 참여 활성화·제도화에 중점을 둔 전통적 접근으로, 엄밀히 말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기보다는 계층제적 조정에 전통적 참여 요소를 가미한 협의의 거버넌스 개혁에 가깝다(<표

1>. 일반시민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전통적 정책 도구에 의한 정부의 목적 지향적 통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계층제 거버넌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이명석, 2021).

<표 1> 거버넌스와 행정개혁

거버넌스		행정 개혁	행정개혁 대상/주체
전통적 거버넌스	계층제 거버넌스	정책 개혁	[계층제 거버넌스] 정부가 결정하고 전통적 정책도구인 공공재정과 법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공공정책의 내용
		관리 개혁	[계층제 거버넌스] 정부가 조직되고 운영되고 일하는 방법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거버넌스 개혁	[전통적 거버넌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방법(전통적 참여)
			[민-관 거버넌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새로운 참여) [정부 간 거버넌스] 다수의 정부/부처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민간 거버넌스] 다수의 민간기관이 스스로/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새로운 참여)

자료: 이명석(2021)

Ostrom(1998)은 일반시민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과정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참여를 넘어 시민들의 수평적·자발적 협력에 의한 새로운 참여가 가능함을 주장했다. 시민정신, 사회적 자산, 즉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행동과 거버넌스 능력(McGregor, 1984; 이명석, 2006)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자체에 노력하는 방식이 바로 새로운 참여로서의 ‘네트워크(network)’로서의 거버넌스의 핵심(2021)이다.

청년정책은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가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주요한 행위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협력 하는 정책 분야다. 각 지역 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거버넌스 접근이 중시되며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한 정책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령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지역 마다 다르게 일컬어지는 청년참여기구가 제도로 규정하여 청년-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청년의제 및 정책 발굴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석(2021)의 분류에 따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기 보단 계층제적 조정에 대한 당사자 참여를 활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가깝다. 청년정책에 기인한 거버넌스 태생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상의 협력으로써 전통적 참여가 중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적 참여에 의거한 거버넌스 접근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한 정책을 집행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항,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극대화시킬(박홍윤, 2014)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거버넌스 요소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시민참여가 정부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시민참여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져 관료들의 책임성과 정책의 질을 높이는 까닭이다(유희정·이숙종, 2020; Nomis, 2002). 더구나 민주주의 측면을 반영한 참여와 책임성이 행복 또는 삶의 질에 있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우창빈, 2014).

그런 한편, 보다 선도적인 지역¹⁾은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에 의거한 지방자치가 실험되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청년층이 지역사회의 동료시민이자 주요 행위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과 거점센터(중간지원조직)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혁신

1) 경기도의 경우, 고양, 부천, 시흥, 안양, 수원, 용인, 오산, 성남시 등이 해당된다(오세제·김동희, 2021).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잘 활성화 된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청년들이 전통적 참여를 넘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는 창구이자 통로로 기능한다.

종합하면, 청년과 지자체 간 거버넌스는 청년당사자가 제도적 권한과 교환, 설득(Hill & Hupe, 2002)의 3가지 메커니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실제로 지역청년활동가들이 단편적인 정책 제시를 넘어, 창의적 지역혁신을 시도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권리 기반 접근으로 하여금 청년정책은 청년세대의 실질적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차세대 시민사회 역량을 증진하며, 다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 사례 도출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를 주 무대로 한 청년자치의 강조가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로 보았을 때, 청년정책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과 같이 기성시민사회가 주축인 주민자치의 추동원리와 분절되지 않고 연관된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3. 중간지원조직과 네트워크 관리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전문성·마케팅 역량 등을 갖춘 에이전시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학습·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다(김재현, 2011). 중간지원조직은 정부 정책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되기도 하고,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정부는 규정과 절차, 행정력의 한계, 부서 간 칸막이 등의 문제로 모든 정책의 시행과 공급을 직접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고, 정기적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순환보직 체제 속에서 일관성과 현장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에 중간지원조직이 기존의 행정부서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을 소화해내는 정책전달 도구임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를 통해 활동기반과 전문지식을 구축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계층제가 주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 행정과 민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거버넌스 차원의 행정개혁에 중요 요소가 된다.

현재까지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들은 행정체계로서의 중간지원조직과 집행체계로서의 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 중이다(김기현, 2022).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은 서울시로, 청년허브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 청년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오랑이라는 전달체계 시스템을 도입했다(정세정 외, 2020; 김기현, 2022). 서울의 청년센터가 청년자치와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분화 및 고도화 되어왔다는 점은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이 청년층의 정책의사결정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 혁신활동의 동력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간지원조직이 “공동체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조직(고광용, 2014)”으로 작동할 때 협력적 거버넌스 개혁의 본질에 근접해질 수 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복잡한 환경 속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을 요구한다.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협력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시민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버넌스의 연결고리(최중석, 2019)로, 문제해결을 위한 다부문·다조직·다정부 간 네트워크의 자원 연계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조직 등이 고객 공유,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등의 협력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Meier & O'Toole, 2001)이다. 네트워크 이론은 거버넌스의 구체적 이론 또는 거버넌스의 구체적 개념(Leach & Smith, 2001:21:30)이고, 거버넌스를 네트워크 이론에서 접근하면 조직간 네트워크 또는 정책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Rhodes, 1995, 1997; Kooiman, 1993; 배응환, 2002). 계층제나 시

장을 통한 조정과 달리, 네트워크를 통하면 복잡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어 ‘지식의 생성과 순환’이 촉진된다 (Thompson, 2003). 때문에 네트워크적 조정은 본질적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요체가 된다. 오단이·정무승 (2015)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은 여러 단체나 자원들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전통적인 NGO에 비해 영향력이 크고 파급 효과도 지속적(Sanyal, 2006)이다. 다양한 자원을 연계 및 동원하여 지역 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중개자(intermediaryagent/broker), 조정자(coordinator), 역량구축자(capability builder)로서 기능한다<표2>. Blank 외(2003)는 중간지원조직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때 특히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표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역할	기능
중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정책과 절차의 집행자 · 정책효과성 제고(모니터링, 피드백) · 정책제안(다양한 정책수요 전달)
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간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성 · 이해관계자간 자원의 연결 및 조정
역량구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수집 및 제공 · 구성원들 정보공유와 훈련(인재육성) · 조사연구 · 상담 및 컨설팅

자료: 고광용(2014)

III. 연구 설계

1. 과정추적법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사회 청년활동가와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민관협력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론-검증 과정추적법을 사용한다. 과정추적법은 특정 사례의 인과적 추론에 대해 엄격한 근거 평가와 가중치를 기반으로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분석 및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분석틀(Beach and Pedersen, 2013)이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결과의 작동을 식별함으로써 관찰된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개중 이론-검증 과정추적법은 연구가 조명하는 사례의 인과기제를 확인하며, 증거로 도출한 추론이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접근이다. 이때 인과기제는 “X에서 Y로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 또는 과정(Gerring, 2008)”을 의미한다($X \rightarrow M1 \rightarrow M2 \rightarrow Y$). 원인이 되는 사건은 매개·조정변수로서의 사건(M1, M2)을 통해 인과적 영향력을 인과적 연쇄를 거쳐 결과로 전달한다.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로의존적 특성(Hall, 2008)을 지니므로, 인과적 추론의 기초를 위한 진단적 증거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Mahoney, 2012).

인과적 과정추적을 위한 첫 출발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가설적 인과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이다(George & Bennett, 2005; Collier, 2011; Bennett & Checkel, 2012; Beach & Pedersen, 2013). 이후로는 인과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반대적 사실을 제거하고 후속 사건을 연계시키는 설명방식을 취한다(Mahoney, 2012, 2016; 김선희, 2017). 이에 따라 사례 분석에 앞서 인과적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 분석에 사용할 핵심 개념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적 인과 메커니즘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모형을 규명한 다음, 분석 사례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추진이 본격화 된 시기(2019년 9월)부터 민선7기 이양기(2022년 7월)에 이르는 기간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4단계로 범주화하여 가설적 인과 메커니즘을 토대로 사례를 둘러싼 대내외 공식-비공식적 의사결정과정

을 관찰한다. 그 다음 실제 획득한 증거와 수집하고자 한 증거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증거로 추론된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평가는 Van Evera(1997)의 가설 테스트를 따른다(<표 3>).

<표 3> 과정추적법의 인과 추론을 검증하기 위한 준거

		인과 추론을 받아들이기 위한 충분조건	
		No	Yes
인과 추론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요 조건	No	1. 흔들리는 풀잎 (Straw-in-the-wind)	2. 연기 나는 권총 (Smoking-Gun)
		a. 통과: 가설을 입증하진 않지만 적절성 지지	a. 통과: 가설을 확증함
		b. 실패: 가설이 제거되지는 않지만 조금 약화	b. 실패: 가설이 제거되지는 않지만 다소 약화
	Yes	c. 경쟁 가설에 대한 함의 - 통과: 조금 약화시킴 - 기각: 조금 강화시킴	c. 경쟁 가설에 대한 함의 - 통과: 상당히 약화시킴 - 기각: 다소 강화시킴
		3. 회오리 (Hoop) +	4. 이중 확인 (Doubly Decisive)
		a. 통과: 가설을 입증하진 않지만 적절성 지지	a. 통과: 가설을 확증하고 경쟁 가설을 제거
		b. 실패: 가설을 제거함	b. 실패: 가설을 제거함
		c. 경쟁 가설에 대한 함의 - 통과: 다소 약화시킴 - 기각: 다소 강화시킴	c. 경쟁 가설에 대한 함의 - 통과: 제거함 - 기각: 상당히 강화시킴
※ 위의 테스트 유형 구분은 유용하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됨. 한 증거가 어떤 테스트에 적합한지는 연구자의 기존 지식, 연구의 가정, 설정된 가설에 의존함			

자료: 과정추적연구(Van Evera, 1997; Bennett, 2010)의 논의에 따라
황태연 · 정규진 · 이명석(2019)의 정리표 인용

2. 인과적 메커니즘의 가설 설정

경기도의 광역청년센터는 경기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와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다. 전자는 일자리 관련 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체계 유형에 근접하며, 후자는 청년정책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관리와 역량증진을 지원하는 행정체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 관점에서 행정과 주민의 사이에서 지역문제의 해결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수행(강문희·윤준희, 2021)”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쟁점으로 하였기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지원사업단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했다. 지원사업단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은영·김광구(2018)에 따르면 정부사업 진행에 있어서 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은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협력을 이루는 민관 파트너십(patnership) 형태를 가진다. 파트너십은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대등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호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미리, 2001). 파트너십 형성에서 이해관계자는 종사자, 고객, 공급자, 정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 개인들과의 관계로 구성되며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은 영향을 미치거나 조직 목표의 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단체나 개인들로 이루어진다(Freeman, 1984). Huxham(2000)은 파트너십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았다.

연구 사례에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권역 별 포럼추진단을 매개로 시·군 청년정책 청년활동가와 파트너십 성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때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하나 또는 복수의 공공기관이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이며 숙의를 거치는 의사결정과정에 민간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치방식(Ansell & Gash, 2008)”이다. 이들의 협력은 도내 청년정책 청년활동가들의 상호교류·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광역단위의 거버넌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종합하면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권역 별 포럼추진단의 활동은 경기도

청년정책 분야의 도·시·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정책관계자와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를 위한 이전의 거버넌스 과정에서 출발하여, 설치 후 포럼추진단을 토대로 한 네트워크 형성 과정, 이후 최근까지의 운영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으로 보고,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권역 별 포럼추진단이 각각 네트워크 관리 행동과 지역사회 리더십을 활용하여 협력 과정을 촉진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3. 중간지원조직의 관리행동(H1, H2)

네트워크는 구성원 사이의 협력적 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채널로 이들 간의 거래관계는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이 네트워크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호택, 2016). 협력을 촉진하는 관계 자본(Portes, 1998)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는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연결과 유대에 의해 축적되는 유·무형 자원의 총체로, 네트워크의 주관조직과 참여조직의 결속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혜택을 창출하고 조직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관조직과 참여조직 간 결속을 통한 네트워크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박치성·오재록·윤향미, 2015).

네트워크 관리자는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정부 관계자로, 적절한 행위자와 동원 가능한 자원을 구별하여 작업하고,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을 정의하며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이다(McGuire, 2002). 구체적으로는 지역 사회 안팎의 힘을 동원하여 지원을 구축하거나,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 방침을 설정하는 동안 필요한 자금 조달, 전문 지식 등의 자원을 확보한다. 또한 외부 기회와 제약에 대해 학습하고,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자금 지원 담당자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호를 읽어내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협력한다(Agranoff 1986, Howitt 1984, Stone 1989).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2022년도부터 2022년까지 각 권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청년활동가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최소한의 인센티브 지급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했다.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권역 별 포럼추진단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책 행위자 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의 관리행동에 의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우선 중간지원조직과 이해당사자그룹 간 파트너십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의 네트워크 관리가 원활할 경우를 가정한 경우다(<표 4>). 적절한 관리 행동이 이뤄지면 정책 행위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 보았다.

<표 4> 중간지원조직의 관리 행동이 원활할 경우의 인과적 메커니즘(H1)

가설 (H)	중간지원조직이 이해당사자그룹과 프로젝트 결성 (목표 설정)	A. 중간지원조직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관리함	B. 네트워크 참여자가 중간지원조직을 신뢰함	상호협력 촉진으로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 확보
증거 (E)		1.1 적극적인 의사소통 1.2 프로그램 자원 배분 1.3. 예측가능한 운영 1.4. 제약조건 극복 노력	1.5 높은 참석율 지속 1.6 활발한 상호토론 1.7 외부정보의 교환 1.8 자발적 자원 조달	

다음은 중간지원조직의 관리 행동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적절한 관리 행동이 조치되지 않을 경우다(<표 5>). 이로 인해 파트너십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책 행위자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행위자들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탈이 발생하여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이 저하되리라 보았다. 두 인과적 메커니즘을 활용해 네트워크의 관리 행동이 행위자 간 신뢰형성에 어떤 인과적 영향을 주는지 추론하고자 한다.

〈표 5〉 중간지원조직의 관리 행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의 인과적 메커니즘(H2)

가설 (H)	중간지원조직이 이해당사자그룹과 프로젝트 결성 (목표 설정)	A. 중간지원조직의 프로젝트 관리에 지장이 발생	B. 네트워크 참여자가 중간지원조직을 불신함	행위자의 비협조나 이탈로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 저하
증거 (E)		2.1 의사소통 과잉/과소 2.2 자원/지지 동원 실패 2.3 변칙적인 운영 2.4. 제약조건의 발동	2.5 참석율 저하(이탈) 2.6 조직 침묵 2.7 정보 차단 2.8 추가 인센티브 요구 2.9 집단적 갈등 발생	

4. 민간 행위자의 지역사회 리더십(H3)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협력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계획수립, 집행, 예산배분, 역량구축 등에 대한 전략 및 리더십이 중요하다(Choi, 2008: 7). 지원사업단과 포럼추진단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과정의 일환으로서 마찬가지로 일련의 리더십을 통한 전략적 설계를 요구한다. 이 때 리더십은 거버넌스 과정 내 의사결정,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자원으로, 거버넌스 과정 내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비 및 계획 과정(고대유 · 박재희, 2018)으로 정의된다.

박희봉 · 김명환(2000)은 지역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연구에서 지역사회 리더십이 규범, 신뢰, 네트워크, 관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역사회 리더십을 간접 사회자본으로 명명하였다. 지역사회 리더십은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목표와 전략을 형성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허성란 · 노경희, 2012).

경기 동 · 서 · 남 · 북부의 4개 권역 청년포럼추진단은 2020년에 경기 청년지원사업단이 경기일자리재단 위탁으로 첫 출범했을 당시 경기도

내 시·군청의 추천을 받은 청년활동가들과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처음 구성되었다. 2020년 시작된 이후 매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차에 접어들은 2022년에는 공개 모집으로 인원을 충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 시군에서 지역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시작한 까닭에, 지원사업단은 각 권역 별 포럼의 추진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민간의 청년행위자들에 보다 쉽게 할당할 수 있었다. 지원사업단이 프로그램 추진 예산 지원을 지원하고, 각 권역 별 청년활동가들이 직접 기획·추진·실행하는 방식이었다. 앞선 논의를 적용하면 포럼추진단에 참여한 청년활동가들은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책당사자이자, 이미 시·군의 청년정책 관계자와의 정책 조정과 협력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 행위자들이다. 때문에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협력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보유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오가며 지역사회 리더십을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협력적 거버넌스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설계자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다. 이 때 협력적 거버넌스의 설계자는 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사회적 조정 양식의 비율을 탐색하고, 관련된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자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참여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다(이명석, 2017). 포럼추진단에 참여한 청년활동가들은 청년정책의 이해당사자이자 네트워크 관계자로서 자발적 참여와 상호협의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협력과정상의 역할을 조율하고, 직접 수행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중간지원조직과 청년당사자그룹 간 협력과정에서 청년행위자가 기획 및추진에 리더십을 확보할 경우에 대한 가설적 인과 기제를 설정했다(<표 6>). 청년활동가들의 리더십을 통해 프로젝트가 원활히 운영될 경우, 활동가의 시민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관여한 행위자 간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 보았다.

<표 6> 청년당사자그룹이 협력과정에 리더십을 확보할 경우의 인과적 메커니즘(H3)

가설 (H)	중간지원조직이 이해당사자그룹과 프로젝트 결성 (목표 설정)	A. 청년당사자그룹이 협력 과정에 리더십 확보	B. 청년당사자그룹의 시민역량 증진, 상호신뢰 구축 (사회자본 형성)	청년당사자그룹 간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 (지속가능성 확보)
증거 (E)		3.1 당사자의 기획 채택 3.2 사업예산 직접 관리 3.3. 관리자 역할 수행 3.4. 외부동료의 합류	3.5 비공식 프로젝트 3.6 당사자 간 정보교류 3.7 지역내 리더십 증진 3.8 자원 동원 협력	

IV. 관찰 및 증거 평가

본 장에서는 증거 관찰을 통해 활동의 장에서 어떤 행위자가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한다. 즉, 중간지원조직과 이해당사자그룹이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네트워크적 조정을 발휘하였는지를 기술하며, 행위자들이 어떻게 협력관계 또는 긴장관계에 놓이는지 탐구한다.

1차적인 증거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설치 이전부터 최근까지 이르는 약 3년의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했다(<표 7>). 참여관찰을 통한 수집은 관련 문헌, 관계자 인터뷰만으로는 확인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생생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 시간에 따라 변화한 인식과 위치성이 연구의 관찰기록과 수집자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장기간 연구는 연구관계와 상황, 연구자와 참여관계자가 인식하는 서로 간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표 7〉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추진과정의 참여관찰을 위한 연구자의 위치성

날짜(기간)	참여 조직 또는 행사	참여강도
'19. 3. ~'21. 2.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2기	참여자
'19. 10. ~'20. 2.	경기청년지원사업단 TF팀	참여자
'19. 11.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동두천시 간담회	운영자
'19. 12.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광명시 간담회	운영자
'20. 4. ~'20. 12.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서부권역 청년포럼추진단(2020)	참여자
'20. 6.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청년정책 정담회	참여자
'20. 12.	경기청년 거버넌스 포럼 중간점검 간담회	운영자
'21. 1.	경기일자리재단 쓴소리 간담회	참여자
'21. 3. ~ 지속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3기	참여자
'21. 8. ~ 지속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서부권역 포럼추진단(2021)	참여자
'22. 5.	경기도 청년거버넌스살리기운동본부	운영자
'22. 5.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대외협력소위원회	운영자
'22. 5.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체계 안정화 촉구 성명 기자회견	운영자
'22. 7.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간담회(도-사업단-위원회-활동가)	참여자

이에 참여관찰의 보충 근거로 보도자료, 회의록, 간담회 문건, 생활기록, 관계 법령이나 행정문건, 관계자 인터뷰 등 다양한 근거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토대로 배열하여, 내부 타당도를 높이하고자 했다(〈표 8〉). 풍부하게 수집한 질적 자료의 과정추적법 적용은 인과관계 연구에 있어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순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변수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Falleti & Lynch, 2009).

1. 경기일자리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2020)

이전까지 경기도에서 이뤄진 당사자참여의 정책 거버넌스 방식은 대부분 단발성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공모사업을 통한 일방향이 파트너십에 그쳐왔다. 정책위원회를 통한 당사자참여도 계층제적 정책과정에 대한 전통적 참여에 가까웠기 때문에, 청년층의 주도적인 참여와 경기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형 사회자본 축적도 어

려운 구조였다. 이에 2020년도 3월에 출범한 경기일자리재단 경기청년 지원사업단은 시·군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활동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 주체 간 교류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권역 별 포럼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는 도·시·군 청년형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기획으로써, 광역에 대한 청년참여의 필요를 환기할 목적의 광역 참여기구의 시범 운영 격이기도 했다.

한편, 2020년 중순경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첫 경기청년주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각 권역의 포럼추진단과 함께 ‘릴레이 청년정책 포럼’을 경기청년주간 행사로 추진했다. 권역 별 시·군 청년정책 활동가 등과 함께 기획부터 집행까지 협력하여 구현하는 기획이었다.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직접 각 권역에서 이뤄지는 회의들을 모두 참여하며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라포를 쌓고, 프로그램의 추진 상황을 관리했다. 이로 인해 광역이 각 시군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었으며, 기한 내에 권역 별 청년들의 청년정책 의제 발굴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기획이 모두 수립 및 추진되었다.

그런데 11월, 경기일자리재단 새로운 대표 이사 취임으로 리더십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관리 문제가 생긴다. 행사 하루 전날 권역 별 경기청년정책포럼이 모두 취소 및 연기된 것이다. 이에 서부권역 포럼추진단에 참여하던 청년활동가들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공론화 및 숙의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중간점검 간담회 개최하고, 각 권역의 참가자들과 외부관계자인 정무직 공무원과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토의하였다. 해당 간담회에서 도출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원사업단이 의지가 있어도 (위탁기관인) 경기일자리재단의 승인 없이 사업 진행이 어려 포럼의 행방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청년위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로, 의사소통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지원사업단 내부관계자가 아닌 외부관계자인 도청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려 양해를 구하는 일이 있었다. 셋째로, 지원사업단의 사업이 계속 변경되어, 연말에서야 권역 별 포럼이 동시 추진되었

다. 최종적으로 포럼 추진 전날에 행사가 취소되었다.

지원사업단은 애당초 민관협력에 방점을 둔 기획이었으나 위탁상황과 맞지 않아 대내외 갈등 발생이 있었다. 첫째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가 촉박하게 진행되어, 사업단의 내부 책임자와 중간관리자 없이 주임급 4인이 먼저 인선된 채 출범하여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3월). 책임자(과장급)·중간관리자(대리급)는 8월에 뒤늦게 임명되며, 지원사업단 사업의 총괄 권한이 앞선 기간 동안 관리를 맡은 청년일자리팀장에 있다는 입장, 지원사업단 과장에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의사결정책임의 권한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사업 운영이 지속되었는데, 더구나 포럼추진단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할 인원이 뒤늦게 합류한 인원들이었던 까닭으로 담당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안정적인 수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아래는 본래 서부권역이 예정되어있던 날에 대신 개최된 온라인 간담회에서 남부권역의 한 청년활동가가 발언한 내용이다.

“재단의 인원이 알기로는 주임급4명, 대리급2명에 팀장님1명, 과장님1명. 실질적 본 사람은 2명 밖에 없었다(대리1, 과장1). 두 명이 모든 권역 일을 보니 과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다. 기초 업무분장 자체가 지원사업단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직원들의 탓은 아니라 생각. 1주일에 4개 권역이 동시 진행되었다. 총 5회 매회 2시간, 10시간을 거쳐 포럼과 발제문을 모두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쉽지 않았다. 회차 마다 참석하는 분들이 다를 수 있는 변수가 있었고, 그 사이사이 온라인 회의를 하라는 형식이었는데 회의 자체가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다. 목요일이 예정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사항을 받지 못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단체방에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 진행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부는 공연이라는 다른 콘텐츠도 기존 포럼 외에 1시간 분량을 준비했었는데 맞물려 들어가는 게 많았는데, 시스템이나 장소가 중요했고 공연자들 간의 소통도 중요했다. 그러나 원활하지 않았다. 업무미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보기에다 버거웠고 두 분이서 경기 전역을 왔다갔다하는 게 안

타까웠고 왜 이래야 하나. 애초에 2명을 뽑았나, 나머지 어디갔나 라는 말들이 나왔다. 장소가 확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지 만 72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결정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만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상황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

광역자치도의 청년참여 거버넌스 도입은 처음이었던 상황에서 청년당사자 참여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메뉴얼이 부재하여, 재단과 지원사업단의 협의 지장으로 민관협력 관련 대외사업 수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원사업단은 일자리재단과의 권한 충돌로 한계를 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사업단의 실무 책임자는 관계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보고하는 데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였다는 데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위탁기관 측의 경우 계층제적 통제의 압박과 네트워크 협력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더욱이 기관 출범 초창기에 대한 기대심리와 기존 외부관계자의 협업 관계 지속으로 책임자의 출장과 회의가 많아졌고,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관계하는 행위자가 많아져 관리 행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청년참여 거버넌스와 가장 거리가 먼 관계기관이 당시 위탁기관인데, 위탁의 특성상 청년지원사업단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중재로 정무직 공무원이 도청과 재단을 오가며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본 사례의 가장 처음 잘못 켜메인 단추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추가 도청과 정책위원회에서 지원사업단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비전과 과업을 공유할만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매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던 청년복지정책과는 담당인력과 예산, 부처간 칸막이의 한계로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다, 작은 규모로 출범했던 지원사업단 측도 마찬가지였다. 아래는 북부권역 청년활동가의 발언 내용이다.

“설립목적과 청년센터의 역할이 목적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해야 할 청년지원사업 관련 여러 조항이나 조

건, 역할들을 소위 속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 경기도가 워낙 크지 않나. 크다보니까 일자리 재단에 있는 사업단 분들도 이곳저곳 이동하느라 시간을 다 쓰셨을 것이고. 행정력 차원에서 그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시간 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많았던듯하다. 경기도가 오히려 기초단위에 청년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나눠준다거나, 기초단위의 센터가 생길 때 가이드라인을 먼저 구축해서 청년사업들을 시행하고 일반화하고 확대보급, 퍼트리는 형태로 훨씬 더 경기도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반영할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이러나저러나 지금의 문제들은 지원단이 일자리 재단 밑에서 있어서다. 역할이나 목적이 괴리감이 있다, 기간이 촉박했고 코로나가 있었다. 맞물려서 내용이 발생했겠지만 코로나 다음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를 행정에 계신 분들, 각 지역 청년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모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책임자가 당사자친화성이 강한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센터장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계층제적 통제가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개입하여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위탁기관과 현장중심성이 강한 중간지원조직의 간극에 제도적 동형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제도적 동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맡으면서 행정조직과 유사해지는 경향을 뜻한다. 이민창(201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언급된다.

“상당히 많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실무자들은 스스로 질서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시장은 놔두면 엉망이 된다.’ 라든가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와 같은 식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 기초한 규제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규제 집행자가 모두 파악하고 있을 수가 없으며 그런 관점에서 규제 집행자는 무지하다는 현실을 솔직히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민창, 2017).”

2.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2021)

전년도의 문제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위탁기관이 경기일자리재단에서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괄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설치된 경기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는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도맡은 청년센터가 되었다. 경기복지재단 이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단의 종사자의 계약기관 만료로 전원이 이탈되었다. 오랜 불협화음으로 지쳐있던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구성으로 다시 시작되었는데, 전년도 인수인계 자료가 전무하여, 관계되어있던 정무직 공무원이나 연결된 활동가들이 구두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인원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여전히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현장지원 업무에 대한 메뉴얼과 채용 준거가 합의가 되지 않아, 민관협력 직무에 대한 이해도 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우선순위를 두어 인선이 진행된 것이다.

또한 기관 이괄로 인해 기존 지원사업단 종사자들의 자발적·비자발적 이탈이 발생하여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까닭에, 12월 포럼추진이 1월로 연기되어 이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참여자들이 있었음에도 권역 별 포럼추진단의 네트워크가 소리 소문 없이 증발되었다. 공식적인 연결이 끊어지고 축적된 사회자본이 휘발되면서 기존 거버넌스 협력 소통구조(道-청년정책위원회-청년지원사업단-포럼추진단)가 분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재단의 새로운 지원사업단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대신, 새로운 제도적 참여기구인 경기청년참여기구 출범에 집중하게 되었고, 기존의 道 정책관계자들과 시군 청년활동가들이 함께 목표하고 있던 ‘경기청년참여기구’를 전원 랜덤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어 네트워크가 와해된다.

이에 대한 대처로 경기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 몇몇 활동가들이 문제제기 및 상황을 전달하여 포럼추진단 운영 재개되어 공동체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중간관리자들이 각 지역의 지난 참여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휘발된 네트워크를 재생하고 활동을 전개했다. 새로운 네트워크 관리자들의 노력으로 광역 거버넌스에 실망하고 이탈

했던 활동가들이 다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참여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파트너십을 통한 권역 별 포럼추진단(일정 수준의 시민역량을 확보한 시·군 청년활동 유경험자), 제도적 참여를 통한 청년참여기구(신규 진입한 청년당사자)로 정책 네트워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참여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상호신뢰 강화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거래비용 증가하고, 소통채널의 다면화로 통합 필요성이 불어졌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수요가 다시 떠올라, 도입시기부터 문제시 되었던 의사결정 및 협력구조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었다. 민관협치를 통해 청년참여에 방점을 둔 거버넌스 중심 중간지원조직으로 기획하여 추진되었으나, 실제 운영 상에 이러한 요소를 녹이기 위한 공식화된 장치가 없어서 책임 및 실무자들의 비공식적인 노력, 정무직 공무원의 협력에 강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한계를 보였다. 이는 의사결정구조의 복잡화로 이어져 운영을 위한 소통에 책임실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정무직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활동가 그룹의 사명감과 헌신으로 네트워크 회복 및 신뢰관계 구축으로 일정 해소할 수 있었으나,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3.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2022)

재단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일자리재단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되었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정규직 차별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기관 인큐베이팅 단계의 업무 과중으로 책임자, 실무자들의 연이은 사직이 발생했다. 경기일자리재단 직후에는 책임자와 중간관리자의 고용승계 거부 있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선 책임자, 중간관리자, 실무자의 사직이 발생했다. 꾸준히 지적되었던 위탁계약 특수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타 부서와 현격히 다른 업무 개성과 근무조건이 문제가 원인이었다. 또한 이런 문제를 관계하는 행위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 권한이 부재하였던 점에서 현장의 애로사

항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청년지원 업무에 적합한 채용 기준을 세우지 못해, 현장-기관 간 갈등 및 초기 사업 운영 지연 초래가 되는 일도 반복되는 일이었다. 도입 초창기에 청년단체(공동체) 경험을 지원가능 조건으로 인정하였으나,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하여 유명무실한 우대사항이었다. 그에 비해 경기복지재단 측에서는 청년참여기구 및 공동체 지원직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채용의 필수조건으로 상정(주임, 대리급)하여 민관협력이나 청년지원 업무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채용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청년참여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초기에 ‘보편청년’과 ‘공익활동가’를 구분지어 활동가들을 배제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종사자들-참여청년들 모두에 작용되었다. 결국 민관 상호신뢰, 협업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조직정체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축적한 사회자본이 지속 휘발되며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다만 올해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민선8기로의 이양 상황에서 사업 종료에 임박하여, 신속·신중한 처방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분야의 추진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초기 상황이라 현장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의 노하우와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관계부터 구축해야 하는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센터(공간)에 관련 업무나 참여 경험이 전무한 이들로만 기관이 이뤄졌을 때 빚발치는 문제로 판단된다. 2022년 중반, 지원사업단 종사자들의 줄사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대내외 사업 자체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중간관리자들이 남아있어 새로운 인원에 대한 인수인계와 학습 수요가 일정부분 해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 사례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완전한 직영도, 완전한 민간위탁도 아닌 까닭으로 단 기간에 민간위탁과 관직영의 단점을 모두 경험했다. 또한 민관협력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기획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특성상 조직의 정체성과 위탁방식이 부합하지 않아 관리행동을 제약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위탁처’를 변경해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위탁방식’의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시민사회 기반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중간지원조직은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될 수 있으며 정책의 변화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실제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위기 때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계하는 관계자 또는 활동가와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서 내부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왔다. 올해에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제도적 불안정성가중으로 인한 종사자 이탈에 대응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던 청년활동가들이 민선8기로의 이양 상황에서 경기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150인의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여 보도하는 일이 있었다(2022년 5월).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 중 일부는 경기도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에도 위촉되어있는 참여자들이었는데, 이후 활동으로 경기도 담당 부서와 청년비례 도의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지원사업단, 경기청년참여기구, 권역 별 포럼추진단 등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2022년 7월).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기획-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과정에 주목하면서, 정책결정을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간, 즉 정책대결장(policy arena)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 갈등과 이해 충돌의 과정이며 결과물로 이해” 하기 때문이다(World Bank, 2017). 정책 거버넌스 운영의 실제 사례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추진과정을 돌이켜 보았을 때, 추진 상 발생하는 어려움은 위탁구조로 인한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하여 해법은 내부당사자들로 가능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그럼에도 외부관계자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며 신속한 처방과 대안을 일궈나갔던 점은 중간지원조직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악한 문제가 정부-중간지원조직-민간참여자의 신뢰와 자발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는 실질적 민간참여와 협력이 정부가 맞닥뜨린 문제에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가설 검정

1. 중간지원조직의 관리 행동(H1, H2)

첫 번째 가설의 인과적 메카니즘에 대해 수집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표 9>), 민간 파트너십에 중간지원조직이 적절한 관리 행동을 수행할 시, 행위자 간 신뢰 형성을 촉진하여 네트워크 지속성 확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관리가 원활한 상황에서의 가설 증거 평가(H1)

인과관계 부분	증거	증거의 증명 가치		관찰 결과	확실성에 대한 영향
		확실성	고유성		
A (적절한 관리)	1.1 관리자의 회의 참여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1.2 프로그램 과정에 외부전문가 연결	높음	낮음	통과	적절성 지지
	1.3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맞춘 운영	높음	낮음	실패	가설 제거
	1.4 프로그램 외부관계자가 회의에 참여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B (신뢰 축적)	1.5 높은 회의 참석율의 지속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1.6 관리자-활동가 간 상호토론 활성화	높음	낮음	통과	적절성 지지
	1.7 관리자-활동가 간 외부정보 교환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1.8 참여자의 자발적 자원 조달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A & B	적절한 관리와 신뢰 축적 간의 증거 기록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청년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는 정책관계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숙의 가능한 구조로 운영이 될 시 신속한 환류를 통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계층제적 행정 과정은 민간 행위자들이 리더십을 발현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 중심으로한 문제 해결 외의 접근 방법은 시도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중간지원조직이 촉진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 문화자치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 관찰해내지 못하는 지역사회 자원 순환 체계를 보완하

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은 지자체와 민간의 연결고리를 수행하며 협력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순환, 네트워크에 관계한 정책행위자들과 당사자행위자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우발적 협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신뢰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중간지원조직의 관리 행동이 원활하면 전제 하에 민간 행위자와 정부 행위자 간의 협력이 촉진된다. 포럼추진단에 참여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한 행위자들은 이후로 공식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들을 시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은 중간지원조직의 네트워크 관리 행동에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인과 기제다. 마찬가지로 증거 평가(<표 9>)를 종합한 결과, 증거 6번, 8번을 제외한 대다수의 증거가 가설을 뒷받침한다. 즉, 민관 파트너십 상황에 중간지원조직이 적절한 관리에 실패하면 행위자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정보 순환 및 협력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탈이 발생하여 네트워크 지속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표 10> 관리에 지장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가설 증거 평가(H2)

인과기제 부분	증거	증거의 증명 가치		관찰 결과	확실성에 대한 영향
		확실성 (예측)	고유성 (발견)		
A (관리 지장)	2.1 불명확한 책임소재로 의사결정 지연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2.1 관리자-참여자의 숙의 부재, 일방통보	높음	낮음	통과	적절성 지지
	2.2 자원 동원이나 외부의 지지 확보 실패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2.3 예측 불가능한 운영 과정	높음	낮음	높음	적절성 지지
	2.4 제약 조건이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B (불신 형성)	2.5 전반적 참석을 저하나 참여자 탈퇴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2.6 조직 침묵으로 소수의 발언권 독점	높음	중간	실패	가설 제거
	2.7 관리자-참여자 간 외부정보 교환 부재	높음	낮음	통과	적절성 지지
	2.8 참여자의 추가 인센티브 요구	높음	낮음	실패	가설 제거
	2.9 집단적 문제제기 발생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A & B	관리 지장과 긴장 발생의 증거 기록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2. 민간 행위자의 지역사회 리더십(H2)

세 번째로 증명한 인과적 기제는 중간지원조직과 청년당사자그룹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청년행위자들에 일정의 리더십을 부여할 때, 전통적 의미의 참여로 시작했을지라도 사회자본 관점의 사회화가 일어나 새로운 참여 유형에 가까운 혁신 활동이 촉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표 11>). 중간지원조직의 네트워크 관리는 계층제적 조정의 과잉을 제어하고 지역사회 행위자들 민간 참여자들의 적절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민간 행위자가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실천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용인하며 역량강화를 지원 하는 일이 필요하다. 실제로 경기청년지원사업단 권역별 포럼추진단의 경우에도 청년활동가들이 추진단을 통해 연결된 다른 지역 활동가들과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구성하거나, 서로가 활동하는 로컬 거버넌스 활동에 초대하는 등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본래 청년층은 연령 특성상 시민역량을 축적·증명하기 불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이나 자원을 확보하는데도 부침을 겪는다. 여기에 지역청년-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공공 행위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 자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장치가 되며, 청년들이 공공행위자로서 직접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되기도 한다. 친화성이 높은 동일세대와의 자발적 자치공동체는 보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된다. 일련의 청년참여는 사회자본 형성을 촉진하여 청년들이 시민적 품성을 갖추고, 시민참여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화를 촉진한다. 어느 정도 시민역량이 쌓인 청년활동가들은 지자체나 관계기관, 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의제 도출 및 지역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적 시민사회의 규범을 익히고 사회적·정치적 역량,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한다.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은 지역공동체 규범과 인적 네트워크, 제도적 관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시금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는 사회자본 형성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본 등을 조직해내는 까닭으로 민주주의, 경제성장, 시민사회, 공동체, 지역개발, 협력적 네트워크,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 등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 되고 있다(정규식, 2012).

<표 11> 민간행위자가 리더십을 확보한 상황에 대한 가설 증거 평가(H3)

인과기제 부분	증거	증거의 증명 가치		관찰 결과	확실성에 대한 영향
		확실성 (예측)	고유성 (발견)		
A (민간 리더십)	3.1 시민참여자의 프로그램 기획 채택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3.2 사업 예산에 대한 당사자의 직접 관리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3.3 네트워크 관리자가 된 시민참여자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3.4 네트워크 외부 동료의 참여 발생	높음	낮음	높음	적절성 지지
	3.5 제약 조건에 대한 전략적 극복 시도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B (사회자본)	3.6 비공식 프로젝트 발생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3.7 참여자 간 정보교류 활성화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3.8 참여자의 지역사회 내 리더십 증진	높음	높음	통과	적절성 지지
	3.9 참여자 간 자원 지원 교환, 협력 발생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3.10 기존 관리자와 수평적 관계 형성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A & B	관리 지장과 긴장 발생의 증거 기록	높음	높음	통과	가설 확증

VI. 결론

청년정책 분야는 기초-광역-중앙에 이르는 이해당사자 네트워크가 빠르게 고안되고 조직되고 있는 정책 영역으로, 시민사회 청년 행위자와 관료조직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새로이 출범한 정부도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확장을 공약한 상황이다. 시의 적절하게 청년 수요를 묶어내며 공공서비스를 조달하여 청년의 삶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공에서의 경험으로 성장한 청년당사자들이 다시금 지역자본과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 전략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참여하는 청년활동가들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떤 상황에서 증진되며, 당사자참여 네트워크의 긍정효과나 부정효과는 무엇이 있을지, 정부 지자체의 직접 관리로 작용하는 계층제의 개입으로 기인될 네트워크 관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리적 중앙도시인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져있다. 개중 상당수가 다양한 이해관계 조직 간 협력과정에 대한 분석보다는 조직 내, 또는 조직 간 관계망 기술에 국한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다루는 연구도, 대개 기능과 역할, 운영 현황을 기술하는 측면이 강하다. 청년참여에 대한 논의 또한 아직까지 당위적 구호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다. 정책 이해당사자의 제도적 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한 관리 전략을 살피지 않으면 자칫 정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계층제적 동원에만 그치게 되어 참여자들의 효능감 저하로 인해 역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실제 어떤 인과메커니즘을 가지고 정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지자체 간 파트너십은 충분한 시너지를 거두지 못하고, 시혜적인 표어로 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정추적법을 활용해 중간지원조직과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당사자그룹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촉진하는지 탐구하였다. 경기도의 광역단위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과 ‘권역 별 포럼추진단’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과정추적법으로 분석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한 광역의 민관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뤄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참여의 효과에 대한 인과 기제를 밝히고,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도출했다. 동시에 정부-민간(행정-청년)을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동성을 관찰하여, 조정 및 중개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 의의를 도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한 공공-이해당사자 네트워크는 적절히 관리될 경우, 행위자 간 신뢰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

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청년활동가의 리더십이 일정 확보되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전개될 경우, 정부의 계층제적 조정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참여에 근접한 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년정책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은 청년층의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화를 촉진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축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청년정책의 도입이 초창기인 관계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년센터와 공간이 불안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참여에 근간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도, 청년정책 부문의 중간지원조직이 안정적인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문희 · 윤준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정치연구 2.1 (2021): 35-72.
- 고광용.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6(2), 131-159.
- 고재경 · 주정현. 2012.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2012-10.
- 구교준 · 김성배 · 기정훈. (201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사례 분석: 대전 대도시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3), 23-46.
- 국무조정실, 청년참여 거버넌스 메뉴얼, 2021.
- 권원웅 · 소순탁(2003). 『협력적 계획: 분절된 사회의 협력과 거버넌스』 . 한울아카데미.
- 김경희. (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기현. (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5(0)
- 김나랑 · 최형림 · 이태현. (2018).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국내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35-45.
- 김민경 · 윤여창. (2018).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조성: 정부의 질과 사회자본. 국정관리연구, 13(2), 221-251.
- 김병국 · 김필두. 200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 행정체제 정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07(0): 1-146
- 김선희. (2017). 인과적 과정추적(Causal Process Tracing)을 활용한 정책학 연구방법 고찰: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4), 123-147.

- 김이수 (2017).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3호(2017년 12월): 29~61
- 김재현 · 태유리 · 이효정 · 임윤정.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99.
- 김정숙 · 이재용 · 황창호. (2021). 협력적 거버넌스 내 중간지원조직 역할 비교
연구: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4): 73-11
- 김진열 · 이규명. (2012). 도시재생으로서 청계천복원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과정 분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205-231.
- 류태건 · 차재건 (2020). 지방정부신뢰의 주요 정부요인: 대전광역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 박세훈 (201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도시행정학보, 28(3),
75-104
- 박치성 · 오재록 · 윤향미. (2015). 네트워크 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앙정부 실증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5(1), 131-159.
- 박희봉 · 김명환. (2000). 일반논문 (ARTICLES) :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 박희봉 · 김명환. (2001).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박희봉. (2002).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1),
221-237.
- 배봉준. (2018). 공공사업의 로컬거버넌스 특성 연구
- 배응환. (2002).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정책. 정부학연구
- 서복경 · 신윤정 · 엄창환 · 오윤덕 · 장수정. 2017.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연구: 효율성, 참여성, 적합성의 원리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서울시 청년허브
- 송경재. (2005).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9(2)
- 송경재. (2007).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국가전략, 13(4), 101-129.

- 신상준 · 이숙중. (2015).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및 과정: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79-111.
- 오단이 · 정무승 (2015).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한 사회적기업가가 바라본 한국 중간지원조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189-212
- 오수연 · 김성엽 · 박성민. (2021). 청년정책 거버넌스 체계 현안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1(4): 141-178
- 오세제 · 김동희.(2021).2021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단계와 성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실태 분석을 통하여.현대정치연구,14(3),307-360.
- 우창빈. (2014).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 행정논총, 52(1), 219-246.
- 유희정 · 이숙중.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2010년 겨울) pp.287-313
- 이기태 · 하현상. (201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25(1): 455-490.
- 이명석. (2006). 거버넌스 이론의 모색: 민주행정이론의 재조명. 국정관리연구, 1(1), 36-63..
-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7)
- 이명석. (2021). 거버넌스 신드롬: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경향과 한계. 국정관리연구, 16(3)
- 이승중 · 김혜정. (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 이호택 · 장명균. (2016). 불런터리체인 내 가맹점과 조합 사이의 상호 보호메커니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31(4), 19-39.
- 정규식. (2012). 두 근대의 마주침, ‘급진 민주주의’ 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2, 162-194.
- 정세정 · 김형용. (2020). 긴축의 시대, 사회적 돌봄은 어떻게 해체되는가?-영국 보수-자민 연정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7(2), 59-85.
- 조은영 · 김광구.(2018).정부사업의 중간조직 분석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 연구: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사례를

- 중심으로.공존협력연구,4(2),109-135.
- 최석현 · 조창현 · 정무권. (201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사회자본 형성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연결망 재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1), 125-151.
- 최예나. (2016).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들과
선출직 기관들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69-88.
- 최중석. (2019), 「사회적경제학: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람 중심의
경제」:249
- 채종현 · 김재근. (2009). 공공갈등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지방행정연구, 23(4),
107-137.
- 황태연 · 정규진·이명석. (2019). 사례연구와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 새로운
인과관계 추론논리. 한국행정학보, 53(4), 119-150.
- 허성란 · 노경희. (2012). 지역사회자본, 축제파트너십과 축제거버넌스 관계 연구
-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6(1), 197-221.
- Beach, Derek and Pedersen, Rasmus Brun. (2013), Process-tracing Methods:
Foundations and Guidelin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each, Derek and Pedersen, Rasmus Brun. (2016), Causal Case Studies:
Comparing, Matching and Trac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engtsson, B. / 2017 / Comparative Process Tracing: Making Historical
Comparison Structured and Focused /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47 (1)
: 44~66
- Bennett, A., & Checkel, J. T. (2012). Process Tracing: From Philosophical Roots
to Best Practices (SWP 21).
- Bennett, A., & Elman, C. (2006). Complex causal relations and case study
methods: The example of path dependence. Political analysis, 14(3), 260-264
- Blank, Martin J. et al. 2003.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Connecting the
Dot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Partners for the Intermediaries Report, 1-8.

- Blatter, J., & Haverland, M. (2012). Causal-process tracing. In *Designing case studies* (pp. 79-143). Palgrave Macmillan, London.
- Coleman, J. S. (2000).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en: Serageldin, Ismail and Dasgupta Partha.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13-40.
- Collier, D. (2011). Understanding process tracing.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 Falleti, T. G., & Lynch, J. F. (2009). Context and causal mechanisms in politica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9), 1143-1166.
- Falleti, T. G. (2016). Process tracing of extensive and intensive processes. *New political economy*, 21(5), 455-462.
- Freeman, R. B. (1984). Unionism comes to the public sector (No. w14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A: MIT Press).
- Eggers, W., & Goldsmith, S. (2004). *Government by network: The new public management imperative*. Deloitte Research and the Ash Institute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 at th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USA.
- Hall, N. A., & Hall, R. (2008). *Applied social research*. Macmillan Education AU.
- Hill, M., & Hupe, P. (2002). *Implementing public policy: Governance in theory and in practice*. Sage.
- Huxham, C., Vangen, S., Huxham, C., & Eden, C. (2000). The challeng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Public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Theory*, 2(3), 337-358.
- Kay, A., & Baker, P. (2015). What can causal process tracing offer to policy stud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licy Studies Journal*, 43(1), 1-21.
- Kooiman, J. (Ed.). (1993).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Sage.
- Kreuzer, M. (2016). Assessing causal inference problems with Bayesian process tracing: the economic effec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problem of

- endogeneity. *New Political Economy*, 21(5): 473-483.
- Mahoney, J. (2012). The logic of process tracing tests in the social scienc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1(4), 570-597.
- Mahoney, J. (2016). Mechanisms, Bayesianism, and process tracing. *New Political Economy*, 21(5), 493-499.
- McGregor, E. B., & Sundeen, R. (1984). The great paradox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 126-135.
- McGuire, M. (2002). Managing networks: Propositions on what managers do and why they do i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5), 599-609.
- Meier, K. J., & O'Toole Jr, L. J. (2001). Managerial strategies and behavior in networks: A model with evidence from US public educ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3), 271-294.
- Merloe, P., & Norris, R. (2002). Media Monitoring to Promote Democratic Elections: An NDI Handbook for Citizen Organizations. *National Economic & Social Forum* 2003
- Ostrom, E. (1998). A behavioral approach to the rational choic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7.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 1-22.
- Pateman, C.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4).
- Rhodes, R. A.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 Rohlfing, I. (2012). *Case studies and causal inference: An integrative framework*. Springer.
- Sanyal, P. 2006. "Capacity Building Through Partnership: Intermediary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Local and Global Actors” .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1), 66-82.
- Segageldin, I., & Grootaert, C.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 An Integrating View.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u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Washington, D.C. : World Bank.
- Nadler, J., Thompson, L., & Boven, L. V. (2003). Learning negotiation skills: Four models of knowledge creation and transfer. Management Science, 49(4), 529-540.
- Trampusch, C. & Palier, B. (2016). Between X and Y: how process tracing contributes to opening the black box of causality. New Political Economy, 21(5): 437-454.
- Webler, T., Tuler, S., & Krueger, R. O. B. (2001). What is a good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Five perspectives from the public. Environmental management, 27(3), 435-450.

도농복합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 전북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

2022. 8. 12

청년을지로연구소 황승현

도농복합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 전북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

1. 지역의 현황
2. 지역의 장단기계획(안)
3. 지역의 현실
4. 지역활성화를 위한 제언

01. 지역의 현황

- 전북 완주지역 -

>> 기본현황

- 전라북도 완주군
- 행정구역: 3읍 10면
- 면 적 : 820.99km²
- 총 인구 : 91,000여명(2022)
- 세 대 : 44,020가구
- 농가인구: 13,000여명
- 인구밀도: 110명/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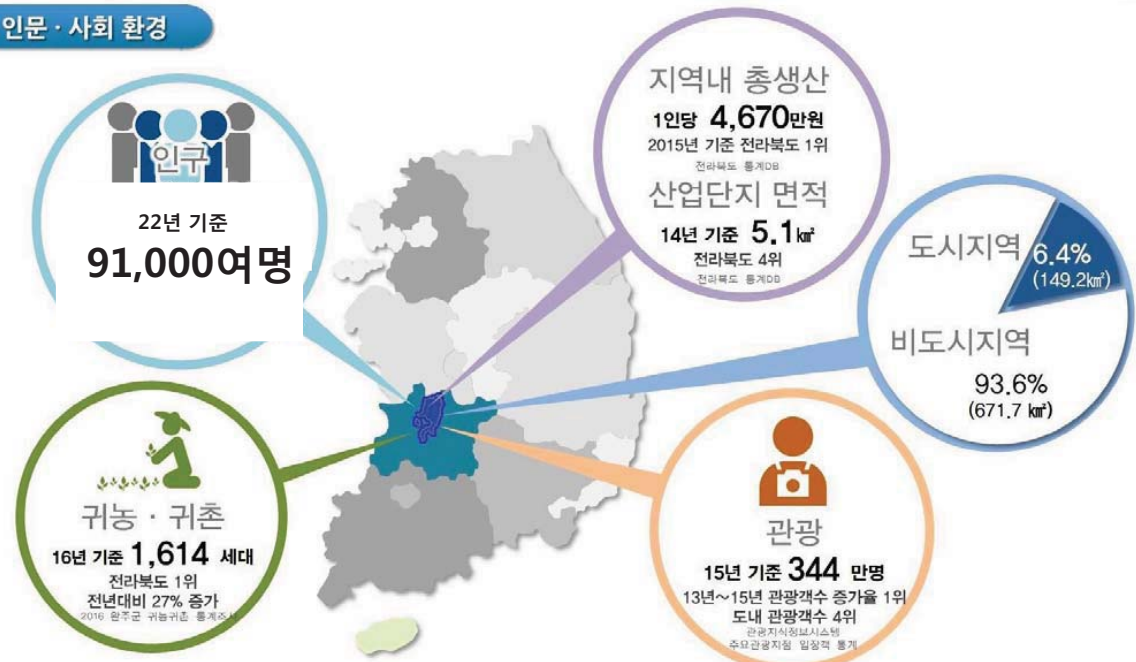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1

01. 지역의 현황

- 전북 완주지역 -

인문·사회 환경



<자료: 2035 완주군기본계획(안)>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2

01. 지역의 현황

- 전북 완주지역 -

행정조직도

완주군의회

군수

부군수

읍면

상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신면	비봉면
윤주면	화산면	등산면
경천면		

기획감사실 기획 : 정책평가 / 예산 : 감사 : 홍보 : 정책홍보 : 법무규제개혁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 / 지역경제 / 투자지원 / 신재생에너지 / 수소산업
사회적경제과	소셜코프 / 도시공동체 / 마을공동체 / 청년정책
먹거리경제과	푸드플랜 / 식용가공 / 로컬푸드 / 식품산업 / 위생안전
환경과	환경정책 / 청소관리 / 폐기물관리 / 폐기물시설 / 환경지도 / 수질보전
농업축산과	농업정책 / 농지관리 / 귀농귀촌 / 농산물유통 / 축산경영 / 가축방역
산림농지과	산림자원 / 산림보호 / 조경 / 산림소득 / 휴양림매지협정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 / 인사교육 / 후생복지 / 디지털정보 / 정보화지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 장애인복지 / 통합초사관리 / 희망복지 / 노인복지
교육아동복지과	인재양성 / 여성가족 / 아동청소년친화 / 아동보호 / 보육지원 / 도립스타트돌봄 / 인구정책
문화관광과	문화정책 / 문화유산 / 문화예술 / 문화마을 / 관광진흥 / 관광마케팅 / 숙박진흥
종합안전과	안전 / 지역 / 지역재조사 / 공간정보 / 부동산행거
재정관리과	세금 / 도세 / 세입관리 / 경리 / 재산관리
체육관광과	체육지원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오악산공원 / 대둔산공원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 개발행위 / 도시재생 / 농촌개발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 민방위 / 기반시설 / 화천 / 재해대책 / 통합관계
도로교통과	도로정책 / 도로시설 / 도로관리 / 대중교통 / 교통관리 / 차량등록
공영개발과	혁신도시 / 공영개발 / 산업단지조성 / 지역개발
건축과	건축행정 / 건축지원 / 공동주택 / 주거복지 / 경관디자인 / 공공건축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3

01. 지역의 현황

- 전북 완주지역 -



사회적경제 DB

316 전체	13 마을기업	11 사회적기업	14 예비사회적기업	157 협동조합	16 사회적협동조합	5 자활기업	33 마을공동체	63 지역창업공동체	4 기타
-----------	------------	-------------	---------------	-------------	---------------	-----------	-------------	---------------	---------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4

01. 지역의 현황

- 전북 완주지역 -

1년 군예산

8천억원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합 (단위: 천원)

종·관·항	예산액	구분비	전년도예산액	구분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5,402,517	100.00 %	798,818,270	100.00 %	6,584,247	0.83%
500 지방세수입	94,084,000	11.76 %	85,080,000	10.73 %	9,004,000	10.51%
110 지방세	94,084,000	11.76 %	85,080,000	10.73 %	9,004,000	10.51%
111 보통세	94,184,000	11.69 %	85,180,000	10.66 %	9,004,000	10.51%
113 지방소득세	500,000	0.06 %	500,000	0.06 %	0	0.00%
510 세입수입	47,755,000	5.93 %	49,049,830	6.14 %	△1,293,870	△2.64%
510 경찰직제외수입	28,203,884	3.50 %	24,864,558	3.13 %	3,219,326	12.88%
511 재산소득수입	375,435	0.05 %	425,802	0.05 %	△50,367	△11.83%
512 차출금수입	18,031,815	2.21 %	16,781,780	2.10 %	1,250,035	7.45%
513 수수료수입	4,240,464	0.53 %	4,123,316	0.51 %	120,148	2.91%
514 차출금수입	1,780,900	0.22 %	1,117,780	0.14 %	663,120	59.38%
515 장수교부금수입	1,070,400	0.13 %	1,457,050	0.18 %	213,270	14.64%
516 인자수입	1,522,850	0.19 %	1,089,950	0.14 %	433,000	39.73%
520 정치자금수입	18,053,794	2.26 %	23,276,999	2.91 %	△4,222,870	△18.38%
521 재산소득수입	11,510,000	1.43 %	16,034,223	2.01 %	△4,524,223	△28.22%
524 기타수입	6,543,794	0.82 %	6,829,455	0.85 %	△285,661	△4.19%
525 지방소득세	509,883	0.06 %	413,023	0.05 %	96,860	23.45%
530 지방행정비용·부과금	898,178	0.11 %	788,012	0.10 %	109,566	13.89%
531 공과금	29,000	0.00 %	18,400	0.00 %	10,600	57.61%
532 지방공과금	100,000	0.01 %	100,000	0.01 %	0	0.00%
533 민생금	7,500	0.00 %	5,500	0.00 %	2,000	36.36%
534 과태료	512,900	0.06 %	494,900	0.06 %	18,000	3.64%
536 부당금	248,778	0.03 %	169,812	0.02 %	78,966	46.50%
540 지방교부세	272,109,000	33.79 %	253,788,600	31.78 %	18,320,400	7.22%
510 지방교부세	272,109,000	33.79 %	253,788,600	31.78 %	18,320,400	7.22%
511 지방교부세	272,109,000	33.79 %	253,788,600	31.78 %	18,320,400	7.22%
400 조세금부과금	14,500,000	1.80 %	13,700,000	1.72 %	800,000	5.84%
400 시·군조세금부과금	14,500,000	1.80 %	13,700,000	1.72 %	800,000	5.84%
421 시·군조세금부과금	14,500,000	1.80 %	13,700,000	1.72 %	800,000	5.84%
500 보조금	303,178,835	37.64 %	302,031,804	37.81 %	1,147,031	0.38%
510 국고보조금	203,619,009	25.28 %	211,145,705	26.43 %	△7,526,696	△3.52%
511 국고보조금	203,619,009	25.28 %	211,145,705	26.43 %	△7,526,696	△3.52%

(단위: 천원)

종·관·항	예산액	구분비	전년도예산액	구분비	비교증감	증감률
510 시·도지방조달청	79,559,838	9.88 %	80,886,089	10.13 %	△1,326,270	△1.64%
511 시·도지방조달청	79,559,838	9.88 %	80,886,089	10.13 %	△1,326,270	△1.64%
520 지방수입증빙내부자금	75,114,804	9.33 %	47,088,070	5.90 %	28,026,734	59.47%
710 지방수입증빙	85,225,990	10.58 %	40,946,470	5.13 %	44,279,520	108.13%
711 지방수입증빙	85,225,990	10.58 %	40,946,470	5.13 %	44,279,520	108.13%
720 지방수입증빙	7,988,834	0.99 %	6,121,611	0.77 %	1,867,223	30.49%
721 지방수입증빙	1,988,834	0.25 %	6,121,611	0.77 %	△4,132,777	△67.49%
722 지방수입증빙	6,000,000	0.74 %	0	0.00 %	6,000,000	100.00%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5

02. 지역의 장단기계획(안)

- 전북 완주지역 -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 ✓ 국토종합계획의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지역계획

완주 군기본계획
(최초 수립)

2035년 완주군의
도시발전 방향 제시

- ✓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국토이용개발보전 정책)
- ✓ 효율적인 도시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계획** (행정전략, 선택집중 전략)
- ✓ 다양한 측면에서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대비하는 **종합계획**
 - 미래상 설정, 인구 및 생활권 계획, 주요 지표 설정
 - 환경, 경제, 사회영향 등 종합적 부문별 계획
- ✓ 완주 군관리계획의 **지침계획**

완주 군관리계획

2025년 완주군관리계획 제정비(2020.12.4. 승인)

- ✓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자료: 2035 완주군기본계획(안)>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6

02. 지역의 장단기계획(안)

- 전북 완주지역 -

경제·산업개발 및 진흥계획

수소경제 등 미래 선도산업의 인프라 강화 및 문화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新)완주 경제·산업 실현”

» 경제·산업 부문

- 수소경제 등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전략산업을 선정 및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자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완주형 사회적 경제 (소셜굿즈: Social Goods) 플랫폼 구축

» 농·축산 부문

- 6차 산업(농산물 생산·가공·판매·체험 관광)의 도입으로 고부가가치 농업 전략 강화
- 안정적인 로컬푸드 생산·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유통·마케팅 고도화
-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인재육성



» 관광·휴양 부문

- 관광자원간의 연계성 강화로 「청정자연 + 힐링 +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
- 지역밀착형 생태·건강 아이템 등을 활용한 체험형·체류형 관광 중점 육성
- 권역별 특화관광전략으로 도농통합형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

■ 완주 관광·힐링벨트

- 산악·자연·문화·휴양벨트**
북한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중심시가지 특화관광 조성
- 문화·자연·휴양벨트**
청정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친환경 관광코스 육성
- 힐링·생태·휴양벨트**
체험 및 교육 등을 연계한 친환경 관광코스 육성
- 문화·자연·휴양벨트**
수상·산악·자연·휴양 벨트로 특화관광 선도지역 육성



<자료: 2035 완주군기본계획(안)>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7

02. 지역의 장단기계획(안)

- 전북 완주지역 -

도시재생 및 농촌정비

전략 1

고유의 도시특성을 적극 활용

전략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 3

농동적 주민참여를 적극 지원

전략 4

쇠퇴된 원도심의 위상 회복

» 권역별 기본방향



주거환경계획

- 수요대응형 주택공급정책 수립 및 균형있는 주거환경 도모
-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등 가구 트렌드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택 수요 증대에 따른 주택공급 수요량 확보
- 주택보급률은 전라북도종합계획(2012~2020), 2022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을 고려하여 120% 적용

구분	단위	2015 (기준)	2020	2025	2030	2035
계획인구	인	97,544	105,000	135,000	145,000	160,000
가구당인구	호/인	2.8	2.5	2.4	2.3	2.2
총가구수	호	34,710	42,000	56,250	63,043	72,727
주택보급률	%	117.4	117%	118%	119%	120%
주택수요량	호	-	49,100	66,400	75,000	87,300
멸실주택수	호	-	700	900	1,100	1,200
주택증수요	호	-	49,800	67,300	76,100	88,500

<자료: 2035 완주군기본계획(안)>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8

02. 지역의 장단기계획(안)

- 전북 완주지역 -

사회·문화 개발 및 진흥계획

누구나 다양한 건강 + 교육 + 문화를 누리는 **으뜸 행복 완주도시** 조성

» 의료·복지 부문

- 고령화, 변화하는 질병의 양상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모든 계층이 동등한 의료·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및 **시설의 균형배치** 유도
- 생활권별 적정 규모의 시설배치**로 주민에게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성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체계 확립**

■ 종합적인 의료 정보화 체계 운영(예시)



■ 복지허브기반(맞춤형 복지팀) 운영



» 교육·문화·체육 부문

- 시간, 장소, 대상별로 **열린 교육을 지향**하며, 생애 어느 시점에서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사회적 풍토를 확립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문화행사의 **주민참여 강화**, 주민들의 일체감 향상을 도모하며 **주민 자긍심 고취**

■ 참여교육 거버넌스 구축



■ 완주형 문화·예술 도시브랜드 창출



■ 주민체감형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자료: 2035 완주군기본계획(안)>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9

03. 지역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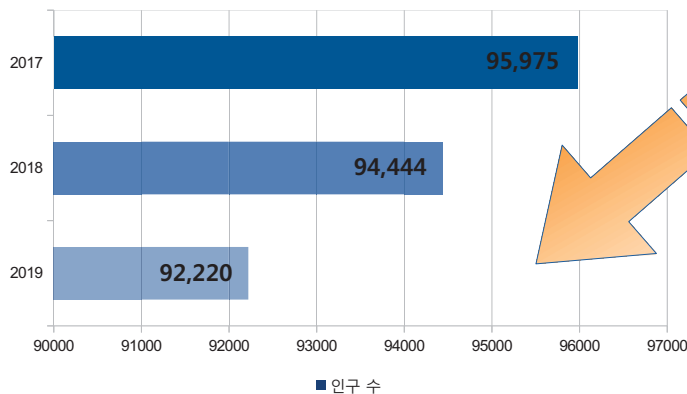
- 전북 완주지역 -

인구 감소

전주MBC 2019.11.21.

믿었던 완주군마저? 30년 후 소멸 위기

지역 역량이 충분하다는 완주군마저 포함돼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 군은 불균형 문제를 넘어서는 자체에 불안감이 커질 ...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10

03. 지역의 현실

- 전북 완주지역 -

공직청렴도

전주MBC 2019.12.26.
'돌가루 묻는다더니' 고화토산 허가내준 완주군
 관리문제를 지적했습니다.완주군이 내년부턴 예산을 세워 제대로 된관리방안을 내
 놓겠다고 했지만... 배경을 놓고 군 안팎의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파장...

전주MBC PICK 2022.05.22.
'170억대 재정 출혈' 불법매립장..면죄부 판결
 * 완주군은 매립장 불법 운영 업체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
 이지만, 업체 대표가 이미 신용불량자 신분이어서 결국 막대한 세금만 축내는 상...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06.28.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은 유명무실 제도,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
 있다는 완주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때문에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 #유명무실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행정 스스로 증명했다" 고집...

전주MBC PICK 2022.07.19.
'계곡 막고 흙 쌓고'.. '막무가내' 불법 공사
 ◀리포트▶ 맑은 물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던 완주 경천면의 신흥계곡, 난데없이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불법 공사가 자행되면서 붕괴사고와 환경훼손 우려가 ...



결국 피해는
다수의
지역 주민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11

03. 지역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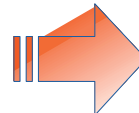
- 전북 완주지역 -

기업 유치

서울신문 10면 1단 5일 전
관리 부실로 굴러온 기업 차버린 전북
 지자체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부실
 해 기업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도와 완주군 등에 따르면 최근 쿠팡(주)은 완주군에 첨단...

뉴스웨이 6일 전
[신지훈의 유통피아] 완주군의 욕심, '1300억 쿠팡, 3000개 일자리' 날렸다
 쿠팡이 전북 완주군에 세우기로 했던 물류센터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10만평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전북
 도와 완주군은 뒤늦은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쿠팡을 대체할 대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쿠팡을...

전주MBC PICK 6일 전
쿠팡 유치 왜 무산됐나.. 책임론 확산
 쿠팡 측이 완주군과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
 해졌습니다. 토지 분양가에... 기업 유치 무산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 등 연쇄 작...



결국 피해는
다수의
지역 주민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12

03. 지역의 현실

- 전북 완주지역 -

주민 설문조사

인구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는 결혼과 출산 → 청년일자리가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남
결혼과 출산분야에서는 돌봄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가장 높음

우선추진 정책 설문

어느 분야의 인구정책이 가장 시급한가에 대한 설문



청년지원과 일자리 창출(39세 이하), 결혼 및 저출산(40세 이상)에서 각각 중요하다고 응답

안정적 일자리 → 결혼 → 출산으로 연계되는 구조 확인

결혼 및 저출산 분야의 우선 추진 정책



아이돌봄과 보육(3.99), 출산과 육아 보육환경(4.05)가 높게 나타남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

<자료: 완주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발굴연구>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13

04. 지역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전북 완주지역 -

청년의 주체적인 참여 활성화

1. 지역 사업/정책 주체적인 참여
2. 전문화된 청년지원정책
3. 청년 옴부즈만 대폭 확대

주민 행복 중심의 지역사회

1. 주민참여사업 확대
2. 개발중심->주민행복중심 정책
3. 주민주도 교육/육아 환경 조성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1. 주민소환제 및 주민감사청구 강화
2. 지역사업 투명한 정보공개
3. (꿈수) 수의계약 근절 제도 도입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14

04. 지역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전북 완주지역 -

“주민이 정책이고,
그 지역의 미래다.”

청년을지로연구소 황승현

[도농복합지역의 활성화]

15



임원명단

□ 임원명단

연번	성명	구 분	소 속	직 위
1	김병완	회장	광주대학교	교수
2	오창환	부회장	전북대학교	교수
3	김홍장	부회장	당진시	(전)시장
4	임명한	부회장	MH헬스케어	대표
5	박노찬	총무위원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6	박 훈	총무위원	당진시	과장
7	강주내	총무위원	전 고양시의원	행정학박사
8	김경일	총무위원	(사)푸른길	이사장
9	박광만	총무위원	지플러스생명과학	부사장
10	윤희철	총무위원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11	이동준	총무위원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2	한순금	총무위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실장
13	김항집	연구위원장	광주대학교	교수
14	고재경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	김상원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교수
16	김성균	연구위원	협동조합커뮤니티플랫폼이유	소장
17	안병철	연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18	이상명	연구위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9	이창언	연구위원	경주대학교	교수
20	이흥연	연구위원	평택대학교	교수
21	황순원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소장
22	오수길	편집위원장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23	김명환	편집위원	강남대학교	교수
24	박치성	편집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25	오용석	편집위원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26	이석환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교수
27	정동재	편집위원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8	제현수	편집위원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9	진상현	편집위원	경북대학교	교수
30	채종헌	편집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31	최준규	편집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32	허성욱	편집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33	허태욱	편집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34	허기용	대외협력위원장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35	권기태	대외협력위원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36	나항도	대외협력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37	박연희	대외협력위원	ICLEI한국사무소	소장
38	박 찬	대외협력위원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39	윤정환	대외협력위원	광주광역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40	이선경	대외협력위원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41	이성훈	대외협력위원	경희대학교	교수
42	전대욱	대외협력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3	정문성	대외협력위원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44	최인수	대외협력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5	최진하	대외협력위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원장
46	김택천	윤리위원장	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
47	김창수	윤리위원	부경대학교	교수
48	박숙현	윤리위원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49	정태정	윤리위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국장
50	최진우	윤리위원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51	양준화	지방SD추진위원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52	박연수	지방SD 추진위원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53	박현옥	지방SD 추진위원	청운대학교	교수
54	신남균	지방SD 추진위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55	신윤관	지방SD 추진위원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56	이종훈	지방SD 추진위원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57	유문종	감사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
58	김재현	감사	김안정 세무회계	대표
59	이상우	당진발전특별위원장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60	구경완	당진발전특별위원	호서대학교	교수
61	박경애	당진발전특별위원	세한대학교	교수
62	신기원	당진발전특별위원	신성대학교	교수
63	이인수	당진발전특별위원	당진시 에너지센터	센터장
(19)	이창언	대학협력특별위원장	경주대학교	교수
64	반혜정	대학협력특별위원	안동대학교	교수
65	신민영	대학협력특별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박사
66	이창수	대학협력특별위원	전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공동대표

□ 고문명단

연번	성명	구분	소속 · 직위
1	김영진	고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2	이상은	고문	환경한림원 회장
3	양수길	고문	한국SDSN 회장
4	조명래	고문	전 환경부장관

□ 하계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성명	소속 · 직위	학회 직위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	회장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부회장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총무위원장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연구위원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편집위원장
허기용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대외협력위원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지방SD추진위원장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대학협력특별위원장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박현옥	청운대학교 교수	지방SD추진위원회 이사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총무위원회 이사
한순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실장	총무위원회 이사
안병철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연구위원회 이사
박연희	ICLEI한국사무소 소장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윤리위원회 이사
박 찬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박정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기관회원 사무국장
배준혁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사무국장	사무국장

일하면서 배운다! 새로운 커리어를 쌓는다!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지원자격

만 30세 이상,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특성화고교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야간/주말 대학, 일과 학업 병행!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

수능 없이 서류전형으로 입학!

다양한 장학금 혜택!

입학상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41-630-3255, 3357~8



사회복지상담학과

청소년상담교육학과

창업경영학과

사회적기업학과

뷰티산업학과

부동산경영학과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KASD)

2022 하계학술대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학회 홈페이지

<http://kasd2020.or.kr>

사무국 이메일

kasd2592@kasd2020.or.kr